함께 걷는 평화의 길
함께 여는 통일의 문

통권 제11호
발 간 등 록 번 호
12-1081000-000005-08

통일여론 2017 3/4분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발간 개요

1 발간 취지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대북·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 이에 따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통일여론」 발간을 기획

○ 「통일여론」이 여론의 향배를 진단하는 최소한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여론조사 뿐 아니라, 여론 형성의 작동 기제로서 학계, 언론계,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폭넓게 소개할 것을 구상

2 주요 내용

○ 「통일여론」은 민주평통이 분기별로 실시하는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통일·북한 전문가,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종합

○ 조사 내용별로는 통일 인식, 남북관계 인식, 북한 인식, 국제관계 인식, 안보 인식 등과 관련한 문항을 기본으로 하되, 분기중에 발생한 현안과 관련된 설문도 포함하여 구성. 또한, 2015년부터 축적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이를 비교하여 계기별 여론 변화의 흐름을 분석

○ 아울러, 통일·북한 관련 학계의 논의내용과 언론의 보도내용, 국제사회의 관심사항 등을 분기별로 간추려서 소개. 주제별, 이슈별, 대상별로 내용을 분류하여 통일·북한 관련 학계, 언론계, 국제사회 동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3 기대 효과

○ 「통일여론」은 계기에 따라 변화하는 여론의 흐름과 통일·북한 관련 주요 동향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여론을 환기하고, 통일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산되기를 기대

○ 또한, 학계 동향을 통해 신진 연구와 정책대안들을 소개함으로써 새롭고 창의적인 대안들이 선순환적으로 발전하여,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기를 기대. 한편으로는, 학술회의 목록과 국민 통일여론조사 설문지 및 통계표를 부록으로 제공하여, 관련 분야 연구자 및 전문가들의 연구 진작을 희구

○ 아울러 해외 동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대외적 여건을 진단하고 국제정세 흐름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유인할 수 있도록 매개 역할

본문에 제시된 '개관', '통일여론 분석', '통일논의 동향', '정책 시사점 및 과제' 등은 발간위원회의 견해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견과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은 아닙니다.

CONTENTS

제1장 개관 : 한반도 정세와 통일논의 동향

Ⅰ. 3/4분기 한반도 정세 9
Ⅱ. 국내외 통일논의 동향 개요 12

제2장 통일여론 분석

Ⅰ.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21
Ⅱ. 조사결과 22
1 조사결과 요약
2 조사결과 분석

제3장 통일논의 동향

Ⅰ. 국내 학계 동향 71
Ⅱ. 국내 언론계 동향 94
Ⅲ. 해외 동향 115

제4장 정책 시사점 및 과제 135

부 록

◇ 주요 학술회의 목록
◇ 국민 통일여론조사 통계표
◇ 국민 통일여론조사 설문지

1장

개관 :
한반도 정세와 통일논의 동향

Ⅰ. 3/4분기 한반도 정세

Ⅱ. 국내외 통일논의 동향 개요

Ⅰ. 3/4분기 한반도 정세

❖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

○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장거리 미사일을 연속하여 시험 발사하고, 6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고조

- 화성 14형 미사일 발사: 7월 4일 ICBM급 신형미사일을 동해 공해상으로 발사(933km 비행), 7월 28일 화성 14형 미사일을 2차로 발사(998km 비행)
- 단거리 발사체 3발 발사: 8월 26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두 번째 발사체는 발사 직후 폭발, 첫 번째 및 세 번째 발사체는 200km 이상 비행)
- 화성 12형 미사일 발사: 8월 29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지나 2700km 떨어진 북태평양 해상에 낙하; 또한 9월 15일 화성 12형 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지나 3700km 떨어진 북태평양 해상에 낙하
- 6차 핵실험: 북한은 9월 3일 ICBM에 장착할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 5차 핵실험 때보다 훨씬 큰 폭발위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의 군사적 대응 강화

○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군사적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억지력 강화에 역점

- 한국: 동해안에서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사격(7월 5일), 아울러 배치가 중단되었던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 결정(7월 31일) 등
- 미국: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7월 8일, 7월 30일), F-35B 스텔스 전투기 4대와 B-1B 전략폭격기 2대를 한반도에 전개하여 폭탄투하 훈련 실시(8월 31일), B-1B

랜서가 북한의 동해 국제공역에서 비행, 정전협정 이후 휴전선 최북쪽으로의 비행(9월 23일) 등

❖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6차 핵실험에 대응, 유엔 안보리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강도 높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 및 2375호를 채택, 아울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독자적 대북제재 강화

-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8월 5일):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해산물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북한 조선무역은행 등 단체 4곳과 개인 9명을 제재 명단에 포함
-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9월 11일): 대북 유류 제공 및 정유제품 공급량의 제한, 북한산 섬유 및 의류 수출 전면금지, 제재 대상 추가, 공해상 북한 선박과의 이전 금지, 북한 해외노동자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을 제외한 북한과의 합작사업 전면 금지 등
-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제재 강화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9월 21일), 재무부는 북한 은행 10곳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에 가까운 제재 결정(9월 26일)

❖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과 8.15 경축사를 통해 대북·통일정책을 구체화

○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긴장고조 국면에서도 대북·통일정책의 원칙과 대북 제안을 담은 베를린 구상 및 8.15 경축사를 발표

- 베를린 구상 발표(7월 6일): 5대 원칙(한반도 평화 추구,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의 일관성 유지), 4대 제안(이산가족 상봉,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선수단 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지, 남북대화 재개 촉구)

- → 8.15 경축사의 주요 내용: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전쟁 불가론, 제재와 대화 병행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핵동결을 통한 단계적 북핵문제 해결, 북한 붕괴·흡수통일·인위적 통일 배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 이산가족 상봉,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요청 등

※ 문재인 대통령은 양자외교 및 다자외교를 통해 평화·협력과 평창 올림픽의 의미 확산에 주력

○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동방경제포럼, 유엔 총회 등을 계기로 다수의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한편, 다자 외교무대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하는 외교를 활발하게 전개

- → G20 정상회의 참가(7월 7일~8일): 독일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한·독, 한·중,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 → 러시아 주최 동방경제포럼 참석 및 한·러정상회담(9월 6일~7일): 신북방정책의 비전 발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의 연계, 한·러간 9개의 다리전략(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을 통한 동시 다발협력 제안,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협력 요청 등
- → 유엔 총회 기조연설(9월 22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제사회의 북핵문제 해결 공조, 북한 붕괴·흡수통일·인위적 통일 배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및 신북방경제 비전 추진,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 등
- → 한·미정상회담(9월 22일):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 비핵화 추진 재확인, 대북 압박·제재 필요성 확인,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및 개발 등 대북 억지력 강화 등
- → 한·미·일 정상회담(9월 22일): 북핵 위협에 대한 3국 공조 강화, 미국의 방위공약 재확인 등

Ⅱ. 국내외 통일논의 동향 개요

1. 국내 통일여론의 흐름

❖ 민주평통이 실시한 3분기 국민 여론조사 결과, 북한의 지속적 위협으로 통일공감대 약화

- ㅇ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71.4%로 2017년 2차 조사(81.4%)에 비해 크게 하락
- ㅇ 아울러 통일 가능성에 대해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26.4%로 높은 비율 차지

❖ 남북관계에 대한 부정적 전망 및 대북 경계·적대 의식 증가

- ㅇ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부정적 인식(30.3%)이 긍정적 인식(27.0%)을 상회(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6년 3분기 조사 다음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비관적 전망)
- ㅇ 아울러 북한이 '경계·적대대상'이라는 응답(48.7%)이 '협력·지원대상'이라는 응답(30.5%)보다 우세
- ㅇ 우리의 안보 상황에 대해 '불안정하다'는 응답이 55.5%로 2017년 2차 조사에 비해 14.2%P 증가

❖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 대응에 공감, 제재와 대화 해법 지지

- ㅇ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공감' 응답이 53.5%로 '비공감'(41.8%)을 상회
- ㅇ 북핵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법으로 '국제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가 46.1%로 가장 높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외교적 해법'(33.4%)이 그 다음으로 조사
- ㅇ '군사적 수단을 통한 압박'은 15.7%로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

❖ 남북대화 가능성 모색 찬성

- 북핵·미사일 실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62.7%로 '비공감'(34.7%)을 훨씬 능가
-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68.3%)이 우세

2. 국내 학계 및 언론계 통일논의 동향

❖ 국내 학계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의 과제와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중점

- 큰 틀에서 안보〉평화〉통일의 우선순위에 입각하되, 북한의 핵무장 방지 및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예방적 관여정책(preventive engagement policy)과 북한의 변화 여건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포괄적 관여정책(comprehensive engagement policy) 제안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지정학적 접근보다 지경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남북 특사 파견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

❖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통일플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의미, 추진방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

- 모색단계에서 인도적 지원, 개발지원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며, 기업인 방북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북한의 수용능력과 4차 산업혁명과의 연계를 고려, 시범사업 추진 등의 방안 발표

❖ 그리고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 논의

-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환황해-환동해-환북극해로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
- 대(對)러 및 유라시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추진체계 정비, 산업협력 사업 발굴, 관련 인력 양성 등 제안

❖ 아울러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 개최

- 한국 주도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이행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 발표
- 아울러 포획이론(capture theory)을 적용하여 북핵이 효용성을 갖지 못하도록 외교환경, 대북 관여정책, 대내제도 완비, 억지력 확보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 제시

❖ 국내 언론 보도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베를린 구상, 8.15 경축사,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

- 베를린 구상의 주요 내용, 후속조치, 미국·북한 등의 반응
- 8.15 경축사의 주요 내용, 의미, 평가 등
-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한·미·일 정상회담 내용 등

❖ 아울러 국내 언론계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및 6차 핵실험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할애

- 북한의 미사일능력 및 핵능력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국방부, 미 정보기관,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평가를 비교하는 내용 보도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의 군사적 대응,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등 보도
-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과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내용 및 영향 등 집중 보도

❖ 한편,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대외 동향 등에 대해서도 특이사항을 보도

- ㅡ 이설주의 공식무대 재등장과 더불어 핵무기 개발자들에 대한 대우 격상
- ㅡ 북·중관계 악화, 북·러관계 긴밀화, 북한과 말레이시아·이란 등 제3세계 국가들과의 관계
- ㅡ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과의 교역 규모 및 내용, 제재국면에서의 북한 경제상황
- ㅡ 휴대폰 사용, 상류층 소비 동향 등 북한사회의 변화 동향
- ㅡ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동향 등

3. 해외 통일논의 동향

❖ 미·일·중·러 등 주요국의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북핵·미사일 문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국제협력방안 등을 주제로 회의 개최

- ㅡ 미국의 우드로윌슨센터,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신미국안보센터(CNAS), 한미경제연구소 등이 워크숍, 학술회의를 개최
- ㅡ 중국 연변대학교, 상해국제문제연구소(SIIS), 일본 와세다대학교,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러시아전략연구소(RISS), 스위스 안보전략연구소(GCSP) 등도 관련 회의 개최

❖ 국제사회의 언론은 '한반도 위기'에 대한 평가와 군사적 충돌시 대책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게재

- ㅡ 월스트리트 저널: 중국이 북·중 국경지역에 대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보도
- ㅡ 니혼게이자이 신문: 일본이 북한 미사일기지 선제공격 능력 보유 여부에 대한 공식결정을 할 것이라고 전망
- ㅡ 영국의 더선: 북한의 괌 공격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도

- 중국의 환구시보: 북한의 괌 공격시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예상

❖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 강화

- 멕시코(9월 7일), 쿠웨이트·페루(9월 11일), 스페인(9월 18일)이 북한대사의 추방을 결정
- 필리핀은 대북 무역 중단 발표, 태국은 북한과의 경제관계 대폭 축소 등

❖ 미국, 일본의 여러 기관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 및 대책에 대해서 여론조사 실시

-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조사(6월 27일~7월 19일): 미국인의 75%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대 위협'으로 인식, 대북 경제제재에는 76%가 찬성한 반면, 북핵시설 공습에는 40%만이 찬성
- 일본 겐론NPO 한·일 의식조사(6월 11일~7월 2일): 일본인의 42.7%가 '미국 등의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해 전망, 25.6%는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
-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조사(7월 7일~9일): 응답자의 40%가 북한을 '미국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 78%는 '군사적 행동보다는 외교적 수단을 활용한 북핵 중단'을 지지
- 미국 NBC와 워싱턴포스트 조사(7월 10일~13일): 응답자의 81%가 북한을 미국의 위협으로 간주, 74%는 미·북 간 전면전을 우려

2장

통일여론 분석

Ⅰ.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Ⅱ. 조사결과

1 조사결과 요약

2 조사결과 분석

1. 통일 인식 24
2. 남북관계 인식 38
3. 북한 인식 44
4. 국제관계 인식 51
5. 안보 인식 54
6. 대북·통일정책 58

Ⅰ.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분석 방법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통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분석했으며, 통일·북한 전문가 및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와 비교

조사 설계

❖ 조사문항은 통일 인식, 남북관계 및 안보 인식, 북한 인식, 국제관계 인식, 그리고 북핵 문제 및 현안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

❖ 조사대상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비례 층화 후 무작위로 추출된 전국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 조사방식은 여론조사업체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2017년 9월 15(금)부터 9월 17일(일)까지 총 3일간, 일반전화(50%) 및 휴대전화(50%)를 통한 질문·답변의 방식으로 실시

Ⅱ. 조사결과

1 조사결과 요약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도발로 통일 공감대 크게 하락

❖ 북한의 계속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6차 핵실험의 여파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71.4%로 2017년 2차 조사에 비해 크게 하락

→ '통일이 필요하다': 77.7%('16년 1차)→74.4%('16년 2차)→74.9%('16년 3차)→77.6%('16년 4차)→75.2%('17년 1차)→81.4%('17년 2차)→71.4%('17년 3차)

❖ 통일 예상시기에 대해서는 '20년 이내' 응답이 1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7년 2차 조사에 비해 감소, 북한 변수의 영향력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26.4%로 크게 상승

❖ 통일 후 국가발전에 대한 공감 정도는 57.8%로 2017년 2차 조사에 비해 하락, 2016년 3차 조사와 같은 수준으로 후퇴

남북관계에 대한 낙관적 전망 급감소, 대북 경계 · 적대 의식 상승

❖ 향후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은 27.0%로 2017년 2차 조사에 비해 21.1%P 대폭 감소, 2016년 3차 조사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

→ '좋아질 것이다': 28.5%('16년 1차)→31.4%('16년 2차)→22.9%('16년 3차)→29.0%('16년 4차)→34.2%('17년 1차)→48.1%('17년 2차)→27.0%('17년 3차)

❖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증강하는 무력도발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상승 지속

→ '북한은 경계 내지 적대대상이다': 50.8%('16년 1차)→43.7%('16년 2차)→48.3%('16년 3차)→40.9%('16년 4차)→44.0%('17년 1차)→44.3%('17년 2차)→48.7%('17년 3차)

→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에서는 북한을 '경계 내지 적대 대상'으로 보는 응답이 이전 조사보다 증가한 반면, 자문위원 집단에서는 북한을 '협력 내지 지원 대상'으로 보는 응답이 오히려 증가

❖ 북한의 체제 개혁 · 개방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인식보다 낮게 보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수치

❖ 우리의 안보 상황에 대해 '불안정하다'는 응답이 55.5%로 2017년 2차 조사에 비해 14.2%P 증가,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로 국민의 안보 불안 크게 고조

한반도 통일에 미국의 영향력은 상승하고 중국은 하락

❖ 우리나라의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나라로 '중국'이라는 응답이 47.5%로 2017년 2차 조사보다 감소, 반면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부상으로 '미국' 응답은 38.7%로 상승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 대응에 지지, 제재와 대화 해법 강조

❖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공감' 응답이 53.5%로 '비공감' 응답 41.8%보다 더 우세

❖ 북핵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법으로 '국제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가 46.1%로 가장 높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 외교적 해법'이 33.4%로 그 다음 순위

→ '군사적 수단을 통한 압박'은 15.7%로 가장 낮아,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 견지

❖ 북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에 대해 '공감' 응답이 62.7%로 '비공감' 응답 34.7%보다 훨씬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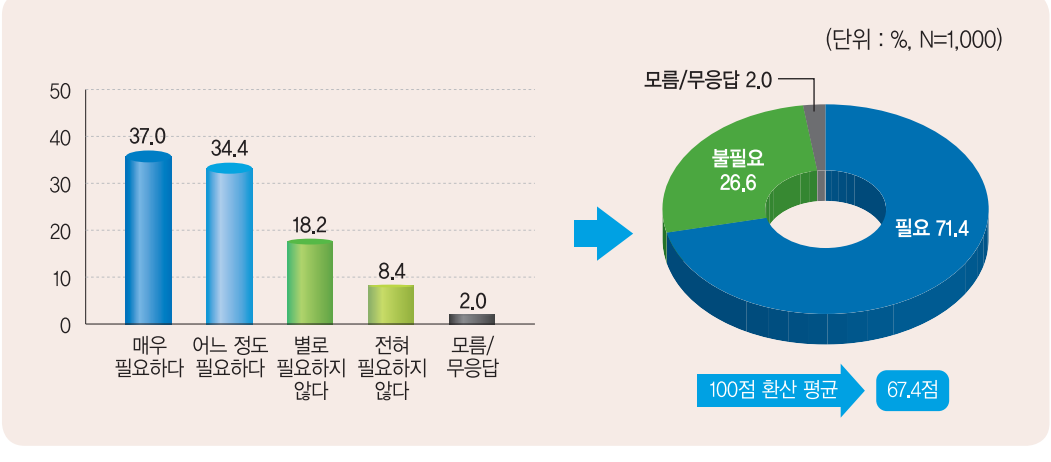
→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노력이 필요

2 조사결과 분석

1. 통일 인식

1) 통일의 필요성

필요 71.4% > 불필요 26.6%



❖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4%가 '필요하다'고 응답,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6.6%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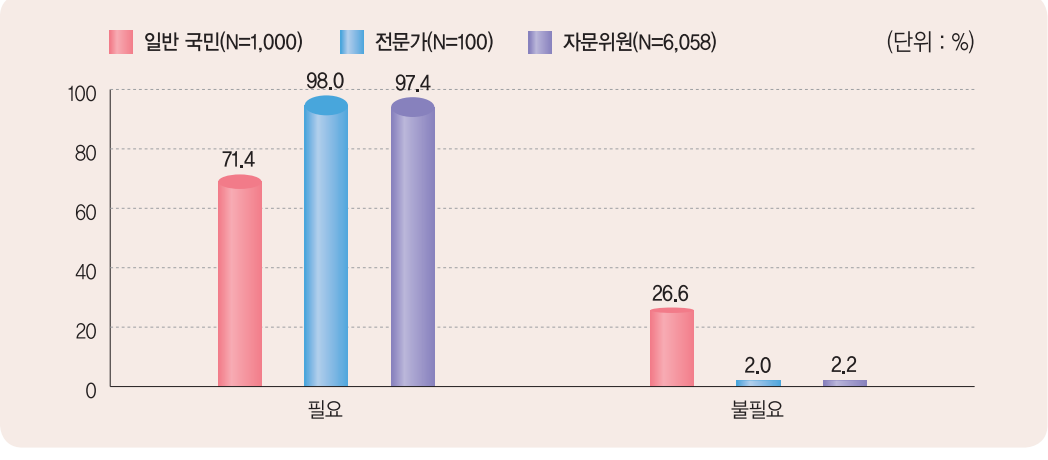
→ 필요 71.4% (매우 37.0% + 어느 정도 34.4%)

→ 불필요 26.6% (별로 18.2% + 전혀 8.4%)

❖ 응답자 10명 중 7명이 통일 필요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

❖ 9월 27일에 발표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17년 통일의식 조사'(2017년 7월 3일~28일 실시)에 의하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3.8%, '반반/그저 그렇다'가 24.1%, '필요하지 않다' 22.1%로 조사돼 민주평통의 조사 결과와 차이

전문가 조사[1] 및 민주평통 자문위원[2] 조사



※ '모름/무응답' 제외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전문가와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경우는 각각 98.0%, 97.4%로 조사된 반면, 일반 국민은 71.4%로 조사돼 이전 조사에 비해 큰 격차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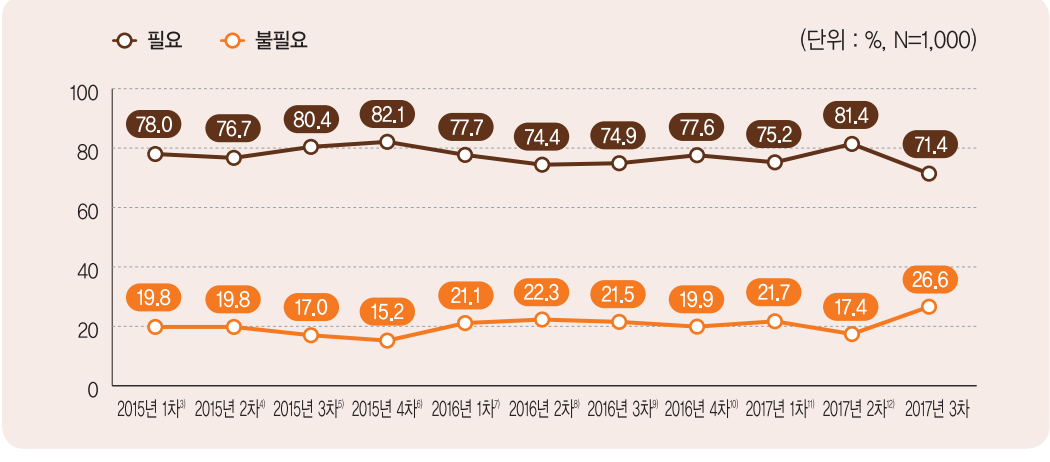
1) 2017년 3차 전문가 조사는 2017년 9월 15일~20일 총 6일간,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통일·북한 관련 교수, 연구자 등 전문가 15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SMS)를 동시 병행 조사로 실시했으며, 그에 응답한 100명(응답률: 66.7%)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신뢰수준 95%에 최대허용 표본오차 ±5.66%P)

2) 민주평통에서 실시한 2017년 3차 자문위원 조사는 2017년 9월 15일~20일 총 6일간, 자문위원 전체(19,710명)를 대상으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SMS)를 동시 병행 조사로 실시했으며, 그에 응답한 6,058명(응답률: 30.7%)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신뢰수준 95%에 최대허용 표본오차 ±1.05%P)

❖ 2017년 2차 조사와 비교해 전문가와 자문위원의 긍정적 응답은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인 반면, 일반 국민의 긍정적 응답은 10.0%P 하락하여 국민의 통일 인식 변화가 확연

❖ 전문가와 자문위원의 경우 통일을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반면, 일반 국민은 정권 교체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로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는 상황에 실망하여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

추이비교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017년 1차 조사까지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2017년 2차 조사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크게 상승

3) 2015년 1차 : 3월 21일~23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4) 2015년 2차 : 5월 16일~1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5) 2015년 3차 : 10월 2일~4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6) 2015년 4차 : 11월 20일~22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7) 2016년 1차 : 3월 12일~14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8) 2016년 2차 : 6월 11일~13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9) 2016년 3차 : 9월 23일~25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10) 2016년 4차 : 11월 19일~2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11) 2017년 1차 : 3월 14일~16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12) 2017년 2차 : 6월 9일~1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 그러나,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 2017년 3차 조사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0.0%P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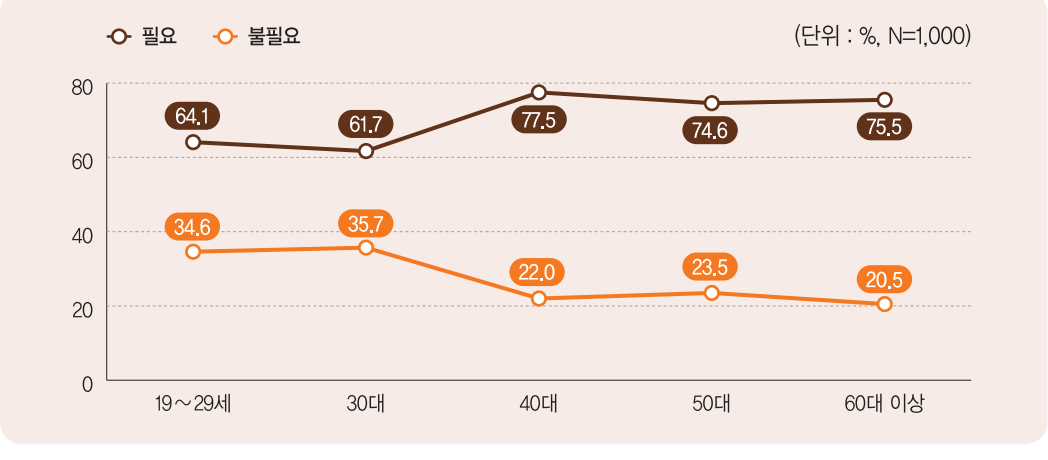
변수별 차이

❖ 성별

→ 통일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은 남성(77.4%)이 여성(65.4%)보다 12.0%P 높게 나타났는데, 2017년 2차 조사에서 나타난 성별 격차(9.6%P)에 비해 더 증가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017년 2차 조사 대비 남성은 8.9%P 하락한 반면, 여성은 11.3%P 하락하여 남성보다 여성의 인식 변화가 두드러짐

❖ 세대별



→ 통일 필요성에 대한 연령별 응답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 20대와 30대의 응답률은 64.1%와 61.7%로 평균 응답률 71.4%보다 낮은 반면, 40대~60대 이상은 평균 응답률보다 높게 조사

- 2017년 2차 조사와 비교해 전체 연령대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감소했는데, 특히 30대의 응답률 감소폭이 16.8%P로 가장 크게 변화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 중 최고 응답률(40대 77.5%)과 최저 응답률(30대 61.7%)의 격차가 15.8%P로, 2017년 2차 조사에서 최고 응답률(50대 86.1%)과 최저 응답률(20대 76.6%)의 격차 9.5%P보다 더 증가

❖ 지역별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강원/제주에서 7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경북지역의 응답률이 67.4%로 최저
- 전반적으로 2017년 2차 조사에 비해 전체 지역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감소한 가운데 지역 간 응답률 격차가 크지 않으나, 대구/경북지역의 응답률 변동(2017년 1차 63.9%, 2차 78.0%, 3차 67.4%)이 가장 두드러짐

❖ 이념별

- 진보 응답자의 77.8%가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한 반면, 보수 응답자는 64.7%가 공감하여 이념성향 집단 간 큰 응답격차 발생
- 2017년 2차 조사와 비교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진보 집단과 중도 집단에서는 공통적으로 9.3%P 감소하였고, 보수 집단에서는 7.8%P 감소하여 진보와 중도 집단의 감소폭이 더 큼

❖ 안보상황 인식별

(단위 : %)	안정	보통	불안정
통일 필요	80.0	72.8	67.9
통일 불필요	18.3	25.3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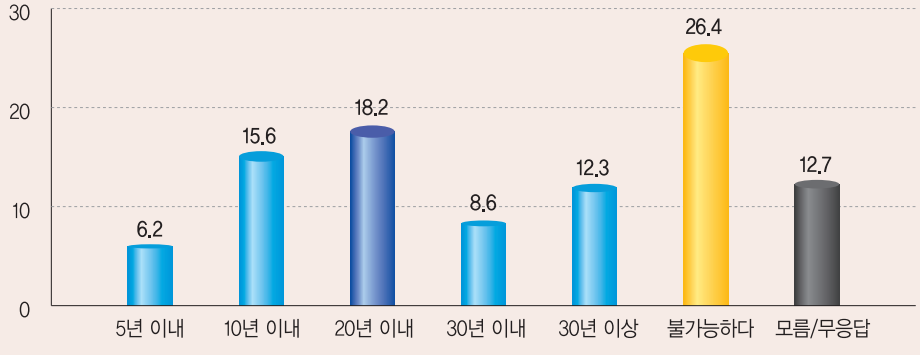
- 안보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한 응답자들 가운데 80.0%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안보상황이 불안정하다고 한 응답자들은 67.9%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

→ 이 결과는 안보상황이 통일 공감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

2) 통일 예상시기

20년 이내 18.2% ≒ 10년 이내 15.6% 불가능 26.4%

(단위 : %,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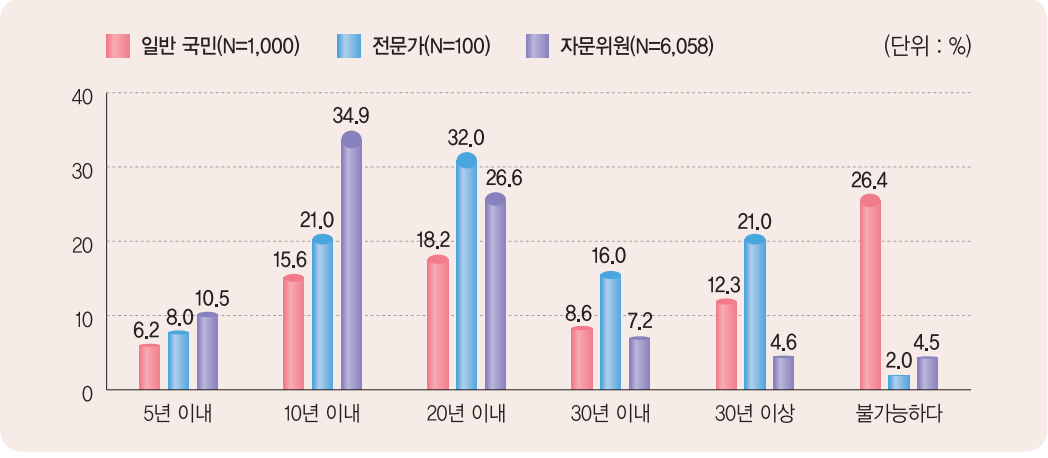
❖ 통일 예상시기에 대해서는 '20년 이내'라는 응답이 1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10년 이내'(15.6%), '30년 이상'(12.3%), '30년 이내'(8.6%), '5년 이내'(6.2%) 순

❖ 한편,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26.4%로 조사돼 '20년 이내' 보다 더 높게 응답

❖ 2017년 2차 조사와 비교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7.0%P 증가했고, 전반적으로 통일 예상 시기가 더 늦어짐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9월에 발표한 '2017년 통일의식조사'에서도 전년 대비 통일 예상시기가 전반적으로 더 늦어지고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민주평통의 조사와 비슷한 응답 패턴

전문가 조사 및 민주평통 자문위원 조사



※ '모름/무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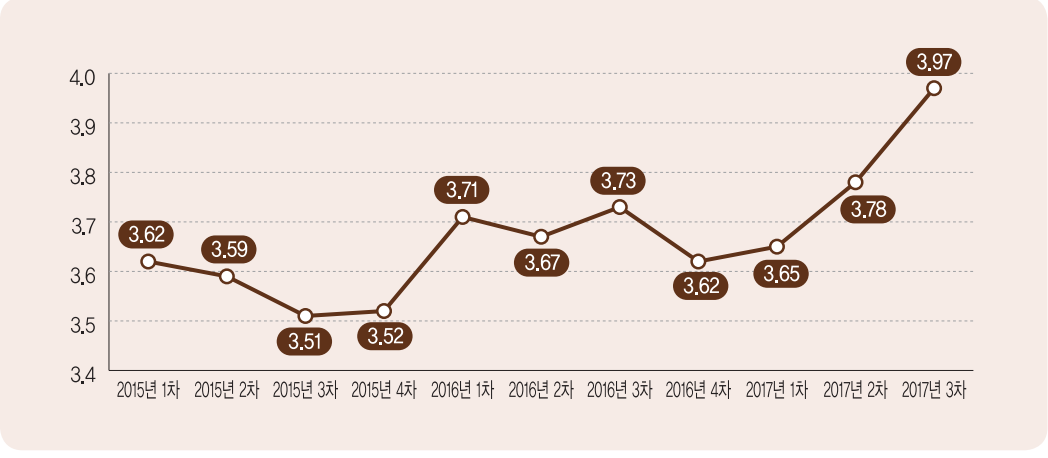
❖ 일반 국민과 전문가는 통일 가능시기를 '20년 이내'로 예상하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자문위원은 '10년 이내'로 예상하는 응답이 가장 많음

❖ 일반 국민 중 26.4%가 통일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전문가 및 자문위원의 경우 2.0%와 4.5%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과 큰 격차

❖ 이러한 비교 결과는 통일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일반 국민에서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줘 통일 공감대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 필요

추이비교

〈통일 예상시기 평균값 추이〉



❖ 위 그래프에서 '통일 예상시기 평균값'은 '5년 이내=1, 10년 이내=2, 20년 이내=3, 30년 이내=4, 30년 이상=5, 불가능하다=6'을 대입해 조사 시기별로 평균을 구한 것으로, 값이 클수록 응답자들의 통일 예상시기가 늦어진다는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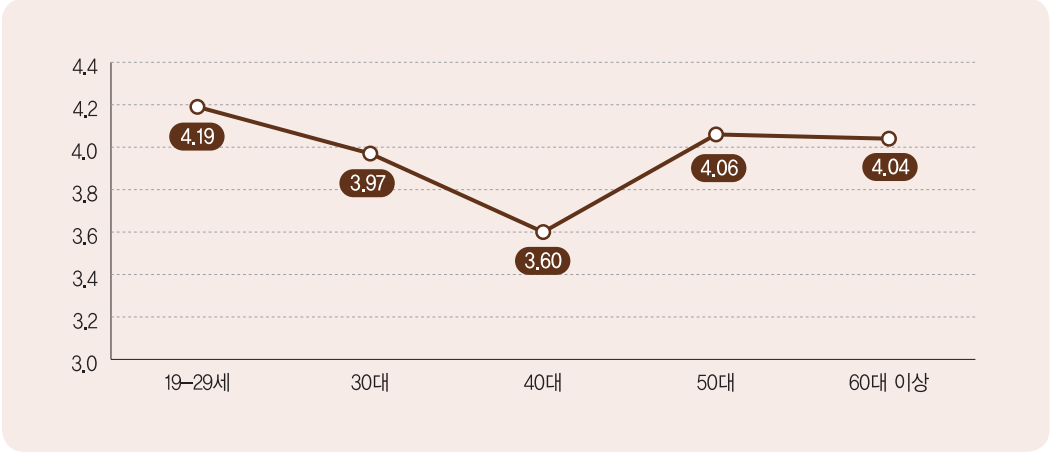
❖ 이번 조사에서는 평균값이 3.97로 2017년 2차 조사(3.78)보다 높아졌는데 그만큼 통일 예상 시기가 늦어졌다는 의미

❖ 이 결과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수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무력도발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 부정적인 대북인식이 통일 예상시기에 대한 국민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변수별 차이

세대별

〈세대별 통일 예상시기 평균값〉



- 통일 예상시기의 평균값을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 위 그래프에서 40대는 통일 예상시기를 가장 가깝게 예측하는 반면, 20대는 가장 멀게 예측
- 2017년 2차 조사에서는 50대가 3.46으로 통일 예상시기를 가장 가깝게 예측하였고 그 다음이 40대(3.52), 30대(3.70) 순이었으며, 20대가 4.12로 가장 멀게 예측
- 통일의 필요성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50대와 60대 이상에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각각 32.8%, 32.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이례적인 결과

학력별

(단위 : %)	5년 이내/10년 이내	20년 이내/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
중졸 이하	16.5	11.0	2.1	33.8
고졸	20.0	23.4	10.5	34.3
대재 이상	23.7	32.3	15.4	20.9

→ 고졸 이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대재 이상에서는 '20년 이내/30년 이내'의 응답이 가장 높음

→ 2017년 2차 조사와 비교해 모든 학력 응답집단에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증가했는데, 특히 고졸 응답집단에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12.1%P 증가

❖ 이념별

(단위 : %)	5년 이내/10년 이내	20년 이내/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
진보	27.1	35.4	13.3	18.0
중도	19.5	28.8	15.5	27.5
보수	23.2	20.9	8.4	31.4

→ 진보와 중도 응답집단은 통일 예상시기 중 '20년 이내/30년 이내'의 응답 비중이 가장 큰 반면, 보수 응답집단은 '불가능하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2017년 2차 조사와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중도 응답집단에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10.6%P 증가하여 진보(5.8%P 증가)와 보수(0.4%P 감소)의 응답과 대조적인 결과를 보임

❖ 통일의 필요성 인식별

(단위 : %)	5년 이내/10년 이내	20년 이내/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
통일 필요	27.9	30.5	11.2	16.4
통일 불필요	6.4	17.9	15.1	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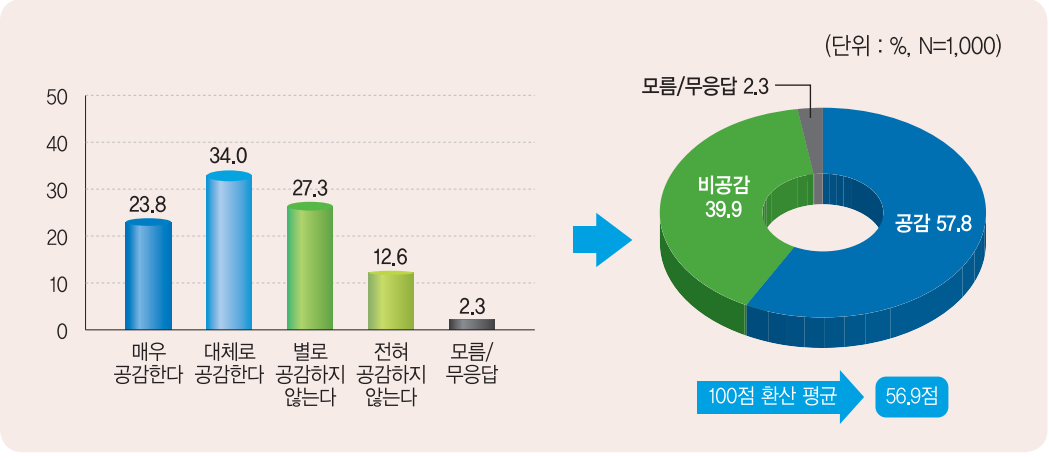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통일 예상시기의 응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통일 예상시기 중 '20년 이내/30년 이내'의 응답이 30.5%로 가장 높음

→ 반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나 통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낮으면 통일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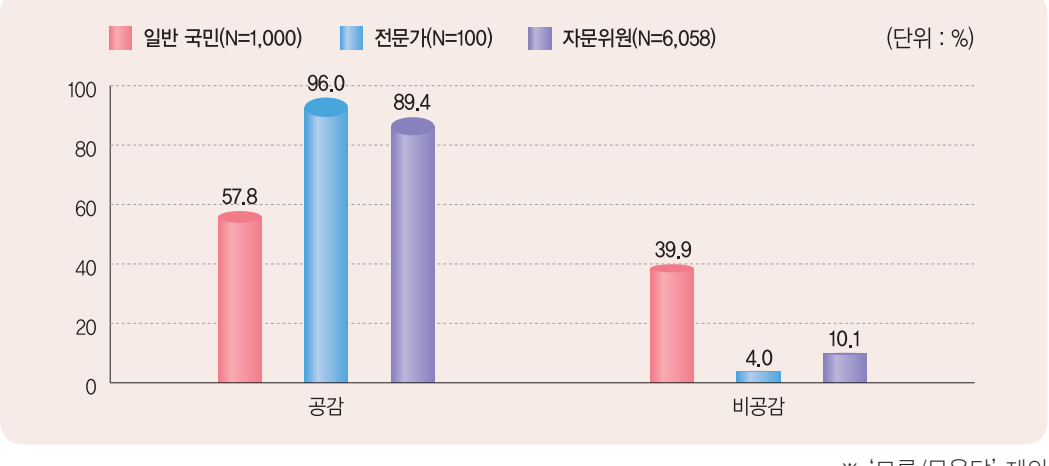
3) 통일 후 국가발전 공감 정도

공감 57.8% > 비공감 39.9%



※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고, 잘살게 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7.8%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인 반면, 39.9%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임

전문가 조사 및 민주평통 자문위원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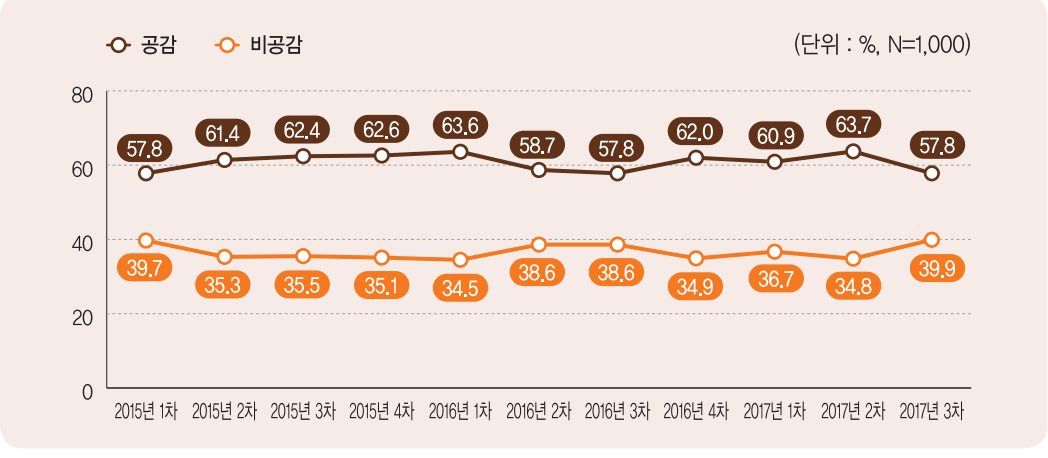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 일반 국민 조사에서는 57.8%가 통일 후 국가발전에 공감하는 것에 비해, 전문가와 자문위원 조사에서는 각각 96.0%, 89.4%로 나타남

❖ 일반 국민과 오피니언 리더 그룹 사이의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 국민이 통일 후 국가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통일 교육 및 공감대 확산에 오피니언 리더 그룹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추이비교



❖ 통일 후 국가발전에 공감하는 응답이 이전 조사에 비해 감소해 최근 1년 중 가장 낮은 결과

❖ 구체적으로 2017년 2차 조사와 비교하면 '공감한다'는 응답은 5.9%P 감소한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1%P 증가

❖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미 간 대립이 고조되고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등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가 통일 후 국가발전에 대한 공감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

변수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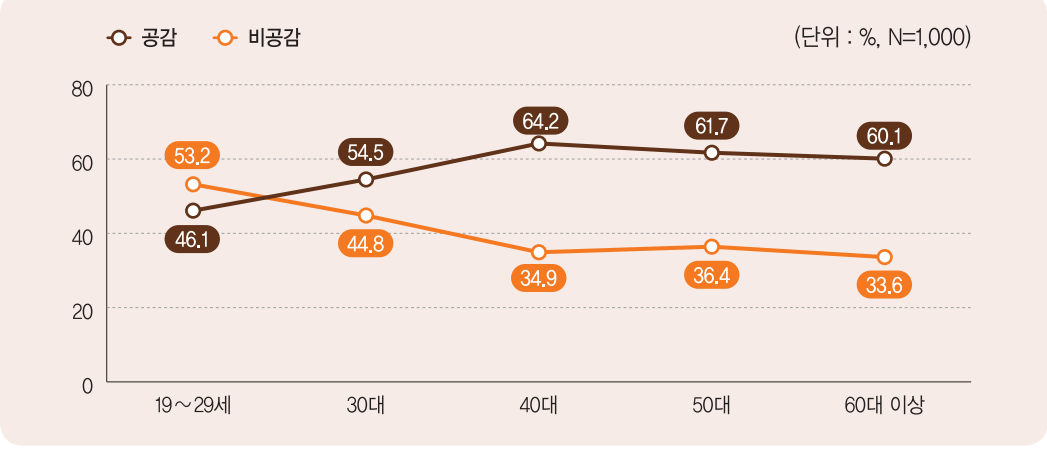
❖ 성별

→ 남성이 여성보다 통일 이후 국가발전 가능성에 더 많이 공감하는 경향을 보임

→ 남성 65.7%가 통일 이후 국가발전 가능성에 공감한 반면, 여성은 50.0%만이 공감

→ 2017년 2차 조사와 비교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남성은 4.0%P 감소한 반면 여성은 7.7%P 감소해 남성보다 여성의 기대감이 더 크게 위축된 것으로 예상

❖ 세대별



→ 통일 후 국가발전 가능성에 대해 가장 높은 공감 수준을 나타낸 연령집단은 40대이고, 가장 낮은 공감 수준을 보인 연령집단은 20대

→ 2017년 2차 조사와 비교해 모든 연령층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감소

→ 구체적으로, 40대의 경우 '공감한다'는 응답이 76.4%에서 64.2%로 12.2%P 감소하였고, 20대의 경우 54.9%에서 46.1%로 8.8%P 감소해 40대와 20대에서 인식 변화가 두드러짐

❖ 이념별

- ㄱ 이념 성향에 따른 공감 차이를 나타내는데 진보 응답자의 경우 65.9%가 공감하는 반면, 보수 응답자의 경우는 52.9%가 공감
- ㄱ 2017년 2차 조사와 비교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중도 성향의 감소폭(5.9%P)이 가장 두드러짐

❖ 통일 필요성 인식별

(단위 : %)	공감	비공감
통일 필요	72.2	25.3
통일 불필요	22.5	76.0

- ㄱ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 태도는 통일 후 국가발전 가능성에 대한 공감 정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 ㄱ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통일 후 국가발전 가능성에 대해 공감 비율이 72.2%이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통일 후 국가발전 가능성에 공감하지 않는 비율이 76.0%로 나타남

❖ 북한 인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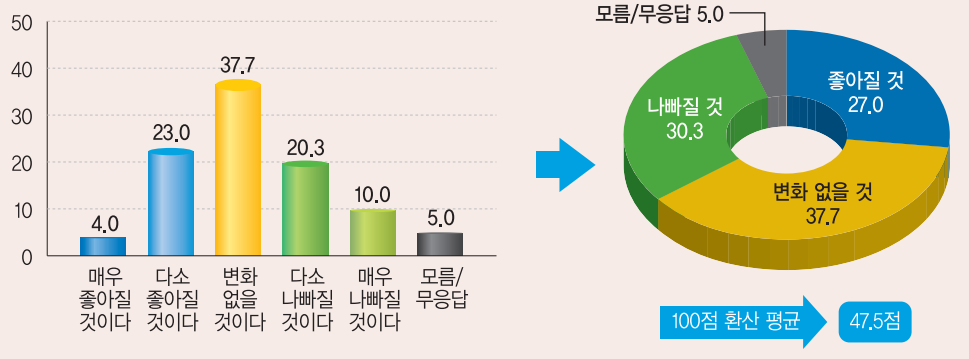
- ㄱ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가에 따라 통일 후 국가발전 가능성에 대한 공감 정도에 큰 차이 발생
- ㄱ 북한을 협력 또는 지원 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들은 통일 후 국가발전 가능성에 대해 공감하는 비율이 82.4%로 나타난 반면, 북한을 경계 또는 적대 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들은 통일 후 국가발전 가능성에 대해 공감하는 비율이 50.2%에 그침
- ㄱ 북한을 남한과 상관없는 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는 통일 후 국가발전 가능성에 대해 공감하는 비율이 37.1%, 공감하지 않는 비율이 61.2%로 나타나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관련

2. 남북관계 인식

1) 남북관계 전망

나빠질 것 30.3% ≒ 좋아질 것 27.0% 변화 없을 것 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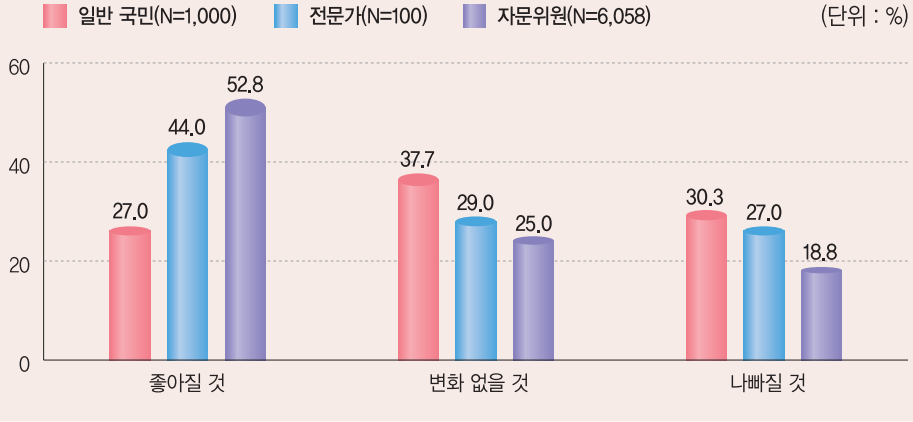
(단위 : %, N=1,000)



❖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이 27.0%(매우: 4.0% + 다소: 23.0%), '나빠질 것이다'는 응답이 30.3%(매우: 10.0% + 다소: 20.3%)로 나타나, 긍정적인 전망보다 부정적인 전망이 더 높음

❖ '변화 없을 것이다'는 응답은 3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전문가 조사 및 민주평통 자문위원 조사



※ '모름/무응답' 제외

❖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자문위원이 가장 높고, 일반 국민이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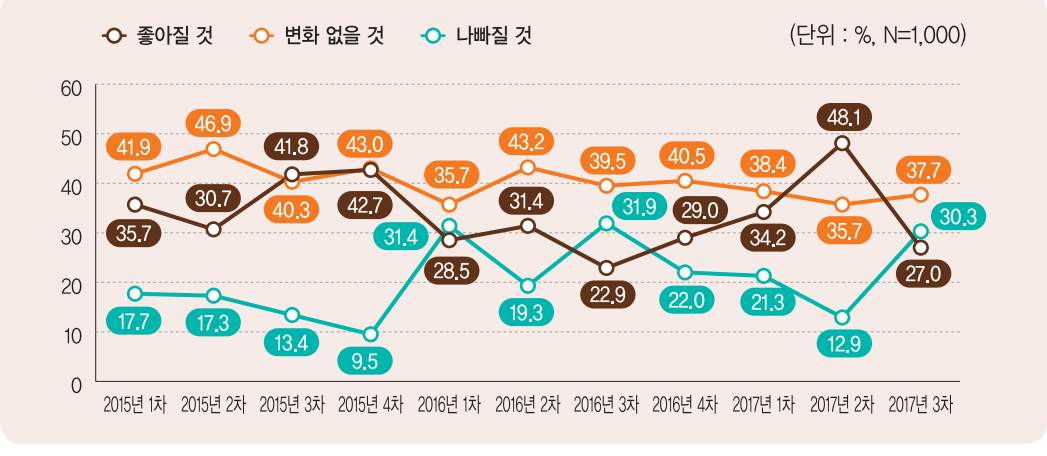
❖ 일반 국민, 전문가, 자문위원 응답집단 모두 2017년 2차 조사와 비교해 향후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이 크게 감소

→ '좋아질 것이다': 일반 국민 48.1%(2차)→27.0%(3차), 전문가 74.0%(2차)→44.0%(3차), 자문위원 63.9%(2차)→52.8%(3차)

❖ 반대로, '나빠질 것이다'는 응답은 2017년 2차 조사와 비교해 세 응답집단 모두에서 크게 증가

→ '나빠질 것이다': 일반 국민 12.9%(2차)→30.3%(3차), 전문가 7.0%(2차)→27.0%(3차), 자문위원 8.5%(2차)→18.8%(3차)

추이비교



❖ 최근 2년 동안 실시된 조사 결과 추이를 비교했을 때 이번 조사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가장 큰 폭(21.1%P)으로 하락

→ 이전에 실시된 조사에서 '좋아질 것이다'의 응답률이 가장 낮았던 것은 2016년 3차 조사(22.9%)로 북한의 5차 핵실험('16.9.9) 여파로 이전 분기에 비해 14.2%P 하락

❖ 또한, 2016년 4차 조사 이후부터 2017년 2차 조사까지 '나빠질 것이다'의 응답은 감소세가 유지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다시 크게 반등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등 계속되는 무력도발로 인해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크게 증가

변수별 차이

❖ 세대별

(단위 : %)	좋아질 것	변화 없을 것	나빠질 것
19세~20대	16.8	53.6	27.2
30대	27.3	46.2	26.5
40대	31.5	36.2	29.0
50대	32.3	31.5	33.4
60대 이상	25.7	26.7	33.7

→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20대~40대의 경우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는 응답이 긍정 또는 부정적 전망보다 우세

→ 2017년 2차 조사와 비교해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적 전망이 크게 감소하고 부정적 전망이 증가했는데, 특히 40대의 긍정적 전망이 29.1%P 감소하여 가장 큰 변화

❖ 이념별

→ 진보 응답자가 중도와 보수의 응답자에 비해 향후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전망

→ 2017년 2차 조사와 비교해 세 이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감소했는데, 보수 집단(29.6%→23.0%)보다는 진보 집단(65.7%→37.2%)과 중도 집단(42.9%→21.4%)에서 더 크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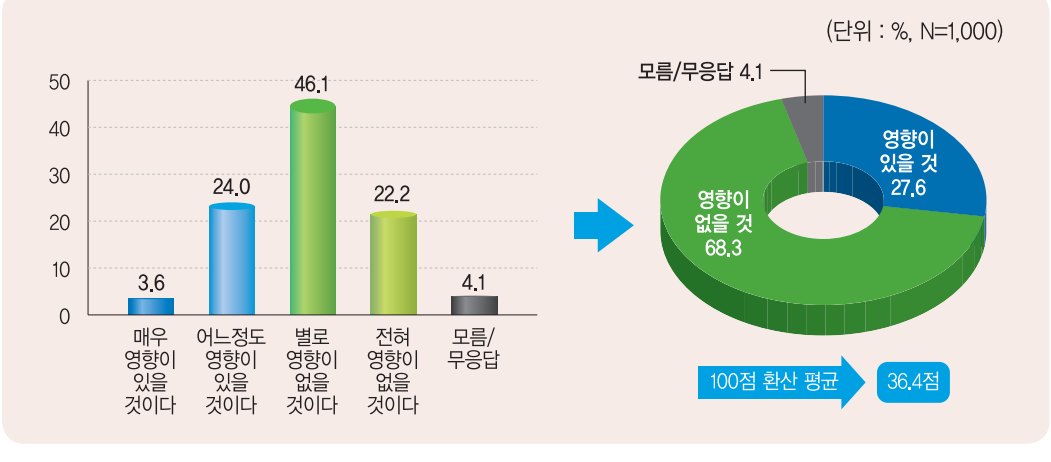
❖ 북한 인식별

(단위 : %)	좋아질 것	변화 없을 것	나빠질 것
협력/지원 대상	48.5	36.0	10.7
경계/적대 대상	17.0	36.2	43.2
상관없는 대상	16.9	49.4	29.5

-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이 크게 다름
- 북한을 협력 또는 지원 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들은 향후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48.5%로 나타난 반면, 북한을 경계 또는 적대 대상으로 보거나 우리와 상관없는 대상으로 보는 경우는 각각 17.0%, 16.9%에 불과

2)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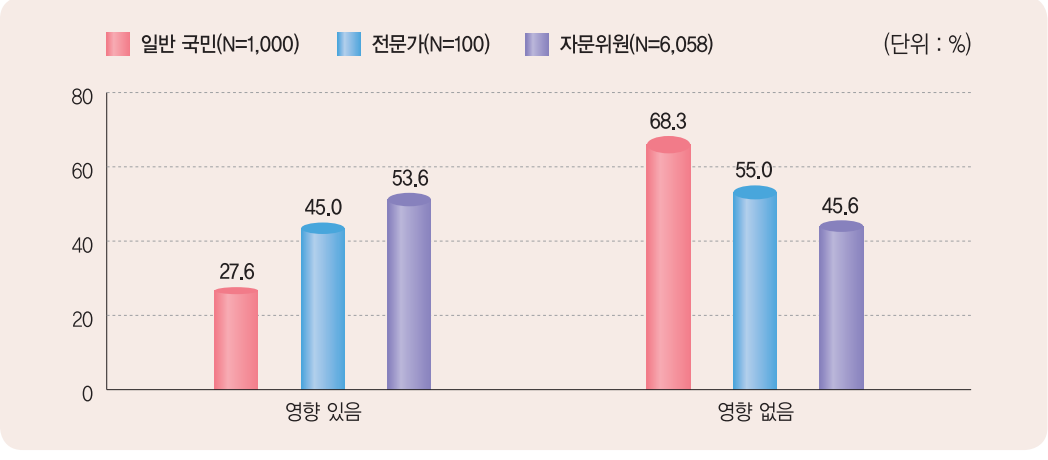
영향 없을 것 68.3% > 영향 있을 것 27.6%



❖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물어본 결과, '영향이 있을 것이다'는 응답이 27.6%(매우: 3.6%+대체로: 24.0%), '영향이 없을 것이다'는 응답이 68.3%(전혀: 22.2%+별로: 46.1%)로 나타남

❖ 이 결과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올림픽의 평화정신을 연계하여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활동의 필요성을 시사

전문가 조사 및 민주평통 자문위원 조사



※ '모름/무응답' 제외

❖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자문위원에서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전문가와 자문위원 집단과 달리 일반 국민의 경우 '영향이 있을 것이다'와 '영향이 없을 것이다'의 응답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 실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국민 이해 제고가 필요

변수별 차이

❖ 이념별

→ 진보 응답자의 경우 중도와 보수 응답자에 비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우세

→ 반면, '영향이 없을 것이다'는 응답의 경우 진보 62.5%, 중도 71.0%, 보수 75.2%로 나타나 이념 성향에 따라 공감도에 차이

❖ 북한 인식별

(단위 : %)	영향이 있다	영향이 없다
협력/지원 대상	39.2	57.3
경계/적대 대상	22.1	74.8
상관없는 대상	21.2	74.9

→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 차이가 뚜렷

→ 북한을 '협력/지원 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는 57.3%가 '영향이 없을 것이다'고 응답한 반면, 북한을 '경계/적대 대상' 또는 '상관없는 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는 각각 74.8%와 74.9%가 '영향이 없을 것이다'로 응답해 큰 견해 차이 발생

❖ 북핵문제 해결방법 인식별

(단위 : %)	영향이 있다	영향이 없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 외교적 해법	43.8	51.0
국제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	20.4	77.4
군사적 수단을 통한 압박	13.9	84.3

→ 북핵문제의 해법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견해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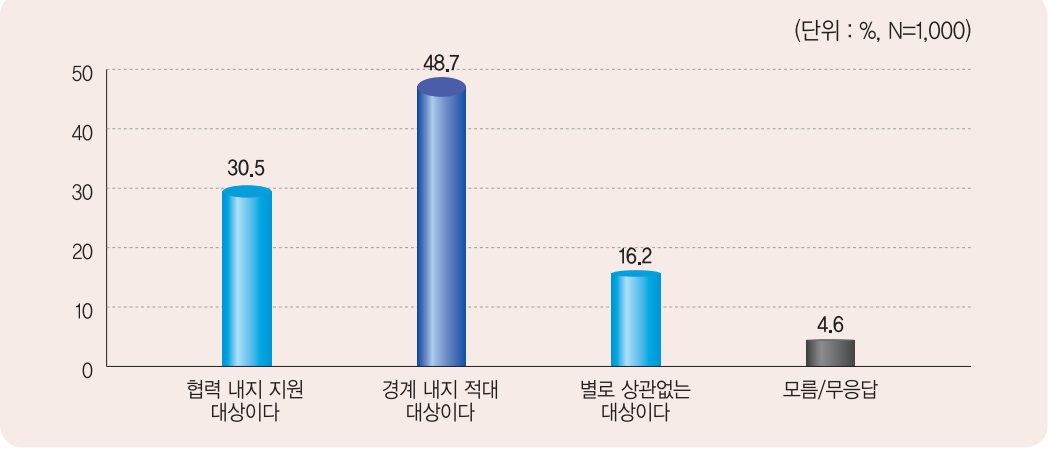
→ 북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응답자의 경우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우세

→ 반면, 북핵문제를 '군사적 수단을 통한 압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경우 '영향이 없을 것이다'는 응답률이 84.3%에 도달

3. 북한 인식

1) 북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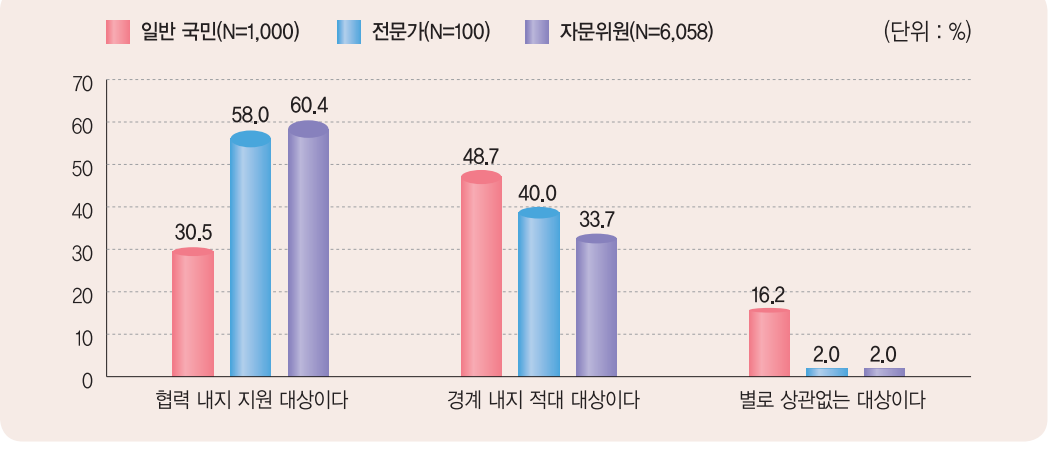
경계 내지 적대 대상 48.7% > 협력 내지 지원 대상 30.5%



❖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경계 내지 적대 대상이다'는 응답이 48.7%로 '협력 내지 지원 대상이다'는 응답 30.5%보다 높게 나타남

❖ 그 외에 '별로 상관없는 대상이다'는 응답은 16.2%로 조사

전문가 조사 및 민주평통 자문위원 조사



※ '모름/무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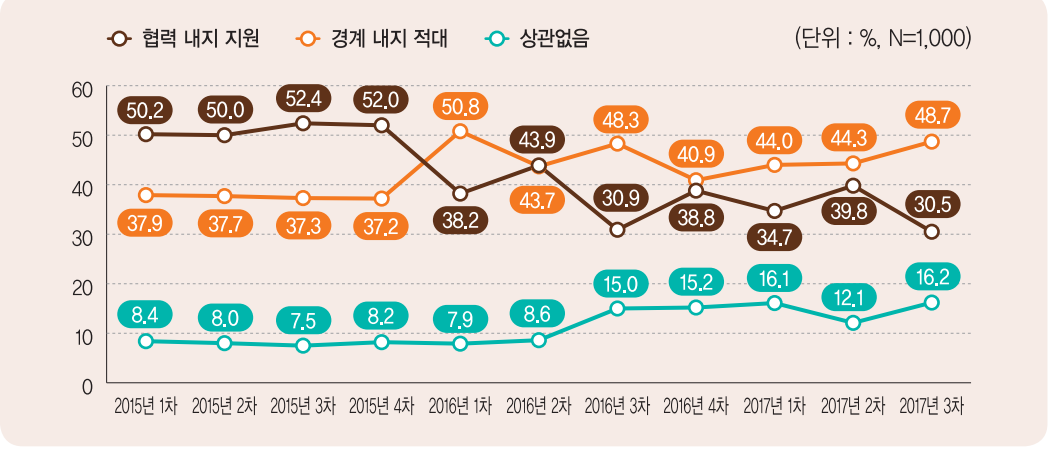
❖ 북한을 '협력 내지 지원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일반 국민(30.5%)의 경우보다 전문가(58.0%)와 자문위원(60.4%)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남

❖ 반대로 북한을 '경계 내지 적대 대상'으로 보는 응답은 일반 국민(48.7%)의 경우 전문가(40.0%)와 자문위원(33.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북한을 '별로 상관없는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일반 국민의 경우 16.2%로 조사되었으나, 전문가와 자문위원의 경우는 모두 2.0%에 불과해 대북 인식에 차이가 존재

❖ 2017년 2차 조사와 비교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에서는 공통적으로 북한을 '경계 내지 적대 대상'으로 보는 응답이 증가한 반면, 자문위원에서는 '협력 내지 지원 대상'으로 보는 응답이 증가

추이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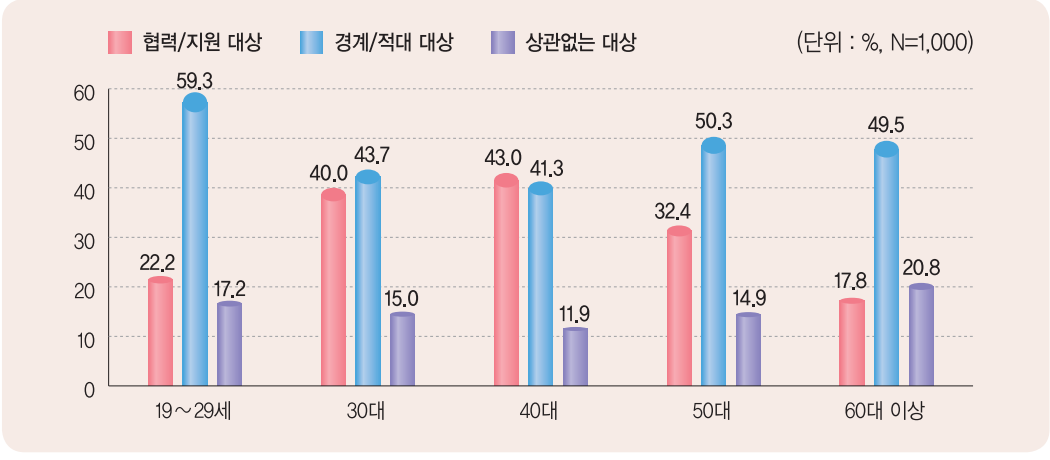


❖ 2017년 2차 조사와 비교해 '협력 내지 지원 대상'의 응답은 9.3%P 하락한 반면, '경계 내지 적대 대상'의 응답은 4.4%P 상승하였고, '상관없는 대상'의 응답은 4.1%P 상승

❖ '화성-12형', '화성-14형' 등 장거리 미사일 발사, 6차 핵실험(수소탄), '괌 포위사격' 발언 등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 공세로 인해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크게 하락하고 부정적인 응답이 상승

변수별 차이

❖ 세대별



→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40대의 응답자(4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인식은 20대의 응답자(59.3%)에서 가장 높게 조사

→ 북한을 우리와 무관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0대 이상(20.8%)에서 가장 높음

→ 2017년 2차 조사에서는 북한을 '경계 내지 적대 대상'으로 보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연령집단이 60대 이상이었던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20대가 가장 높게 조사돼 북한의 무력도발 공세로 인한 젊은 층의 대북 인식 변화가 뚜렷

❖ 이념별

→ 이념 성향에 따른 대북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진보 응답자는 북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보수와 중도 응답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

→ 북한을 '협력 내지 지원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진보의 48.0%, 중도의 27.2%, 보수의 16.4%로 나타났으며, '경계 내지 적대 대상'으로 보는 응답은 진보의 36.9%, 중도의 53.4%, 보수의 62.8%로 조사

→ 2017년 2차 조사와 비교해 북한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은 진보와 보수 모두 큰 변화가 없으나, 북한을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은 진보 집단에서 크게 하락하고 보수 집단은 거의 변화가 없는 특징

❖ 남북관계 전망 인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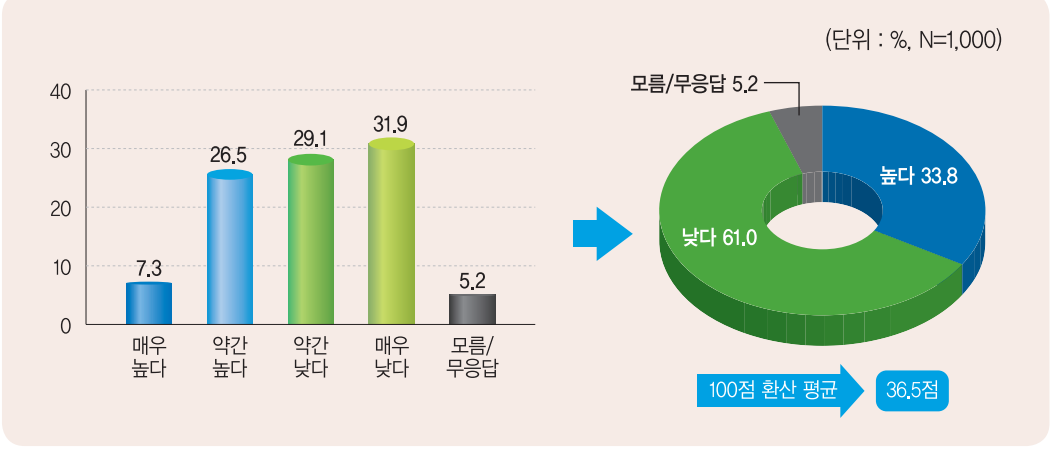
(단위 : %)	협력/지원 대상	경계/적대 대상	상관없는 대상
좋아질 것	54.9	30.7	10.2
변화없을 것	29.1	46.7	21.2
나빠질 것	10.8	69.5	15.7

→ 향후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자는 북한을 '협력/지원 대상'으로 보는 응답이 54.9%로 '경계/적대 대상'으로 보는 응답(30.7%)보다 우세

→ 반대로, 남북관계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자는 북한을 '협력/지원 대상'으로 보는 응답이 10.8%인 반면, '경계/적대 대상'으로 보는 응답은 69.5%에 달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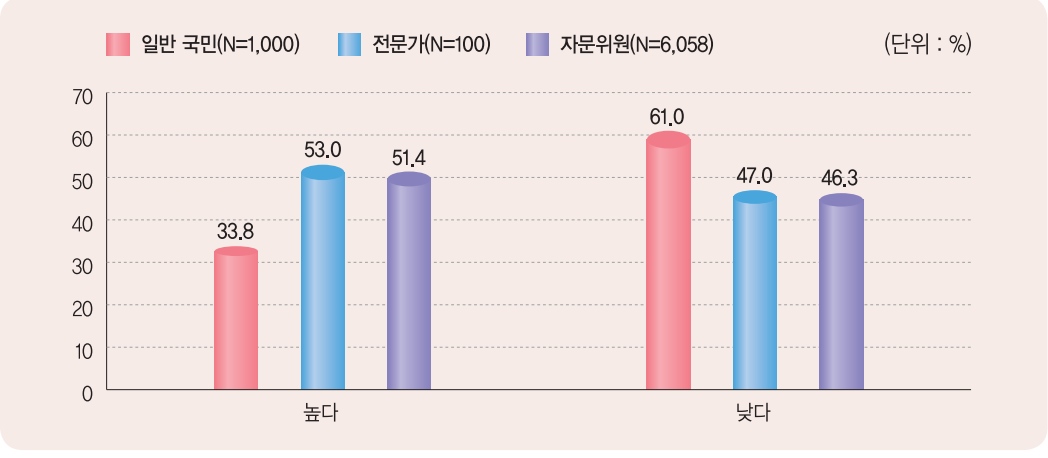
2) 향후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

낮다 61.0% > 높다 33.8%



❖ 향후 북한 체제의 개혁 ·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높다'는 응답이 33.8%(매우: 7.3% + 약간: 26.5%), '낮다'는 응답이 61.0%(매우: 31.9% + 약간: 29.1%)로 '낮다'는 응답이 더 높게 조사

전문가 조사 및 민주평통 자문위원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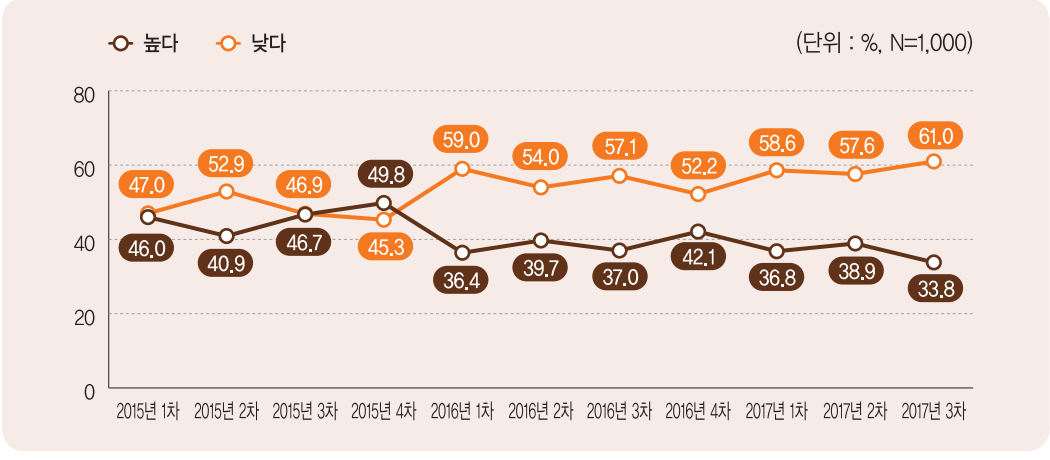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 일반 국민과 달리 전문가와 자문위원의 집단에서는 향후 북한의 개혁 · 개방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응답이 낮게 보는 응답보다 더 많게 조사

❖ 북한의 개혁 · 개방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응답은 일반 국민의 경우 33.8%에 불과하나 전문가 53.0%, 자문위원 51.4%로 조사돼 인식의 차이 발생

❖ 2017년 2차 조사와 비교해 세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북한의 개혁 · 개방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응답이 증가하고 높게 보는 응답이 감소했는데, 전문가 및 자문위원에서보다 일반 국민에서의 변화폭이 더 크게 나타남

추이비교



❖ 2016년 1차 조사 이후 향후 북한 체제의 개혁 · 개방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높다'는 응답을 추월하는 추세가 지속

❖ 북한 체제의 개혁 · 개방 가능성에 대해 '낮다'의 응답과 '높다'의 응답 간의 격차가 2016년 1차 조사 이후로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27.2%P로 가장 큰 격차 발생

❖ 이 결과는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로 인해 북한의 정책 전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시사

변수별 차이

❖ 세대별

→ 모든 연령층에서 향후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이 변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 북한의 개혁 · 개방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 연령집단은 30대(39.1%)이고, 가능성을 가장 낮게 보는 연령집단은 20대(71.9%)로 나타남

→ 2017년 2차 조사에서는 북한의 체제 변화 가능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하던 연령집단이 60대 이상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0대로 바뀌었으며, 오히려 60대 이상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가장 낮게 조사

❖ 이념별

- ㅋ 이념 성향의 차이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이 더 높게 조사
- ㅋ 그러나, 상대적으로 진보 응답자가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더 높게 전망하고 보수 응답자가 가능성을 더 낮게 보는 경향은 지속

❖ 남북관계 전망 인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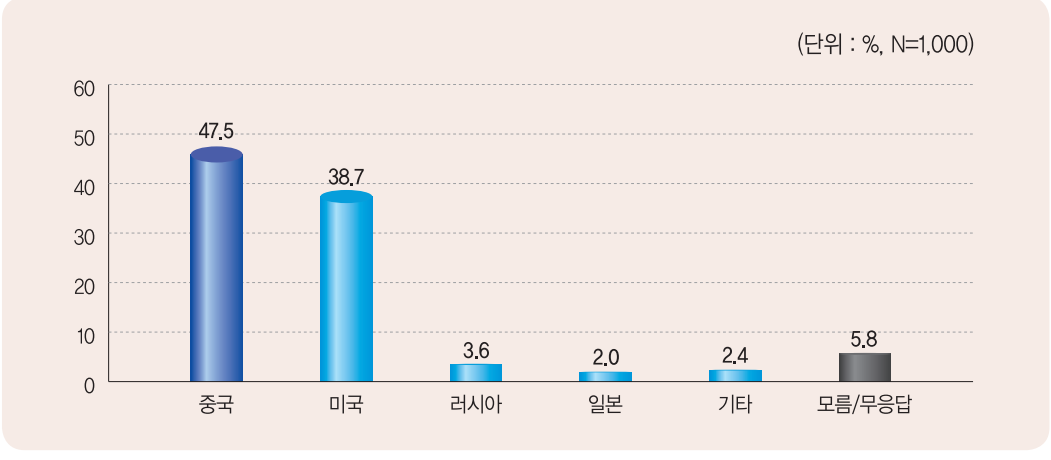
(단위 : %)	가능성 높다	가능성 낮다
좋아질 것	58.9	35.9
변화없을 것	25.9	71.9
나빠질 것	23.2	72.2

- ㅋ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인식 차이는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부정적인 인식 간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
- ㅋ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58.9%는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35.9%는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
- ㅋ 반면, 남북관계가 '나빠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23.2%만이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72.2%는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

4. 국제관계 인식

1) 우리나라의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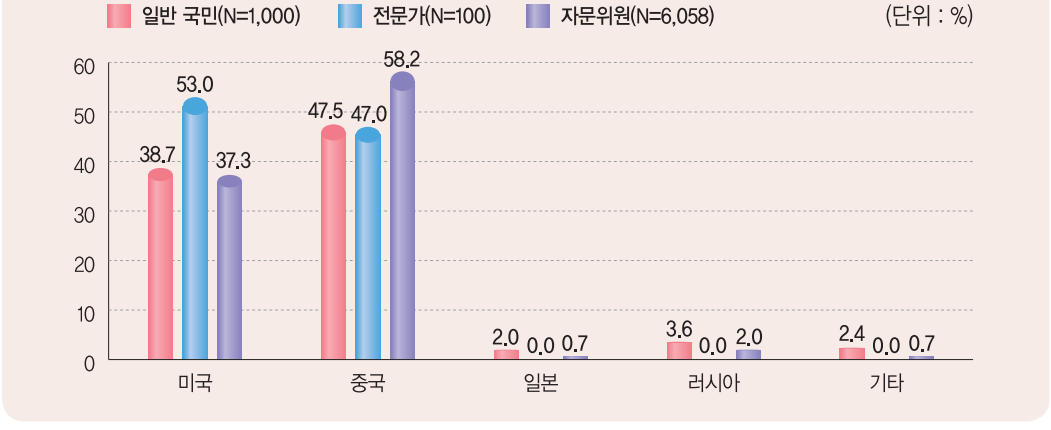
중국 47.5% > 미국 38.7%



❖ 주변국 중 한반도의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나라를 질문한 결과, '중국'이라는 응답이 47.5%로 '미국' 38.7% 보다 높게 조사

❖ 이어서 '러시아'(3.6%), '일본'(2.0%) 등의 순

전문가 조사 및 민주평통 자문위원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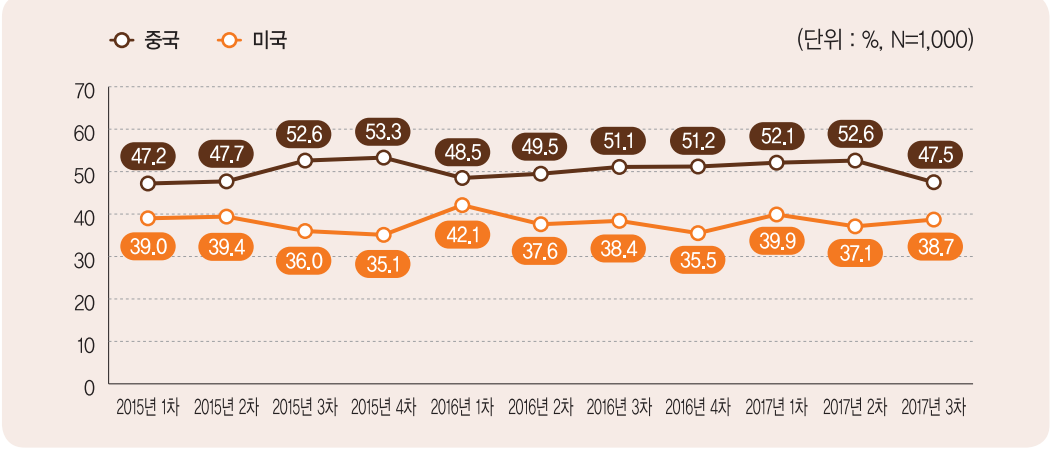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 일반 국민과 자문위원 집단은 우리나라의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나라로 '중국'을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전문가 집단은 '미국'을 가장 많이 응답해 견해 차이 발생

❖ 이 결과는 2017년 2차 조사에서 세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중국'을 가장 많이 응답했던 것과 대조적

→ 전문가 집단의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 증강에 대응하여 한미 공조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정세 변화를 고려하여 통일에서도 미국의 역할을 더 높게 평가

추이비교



❖ 2015년 1차 조사부터 2017년 3차 조사까지 '중국' 응답이 가장 높고, '미국' 응답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 지속

❖ 2017년 2차 조사와 비교해 '중국' 응답은 5.1%P 하락한 반면, '미국' 응답은 1.6%P 소폭 상승

❖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에 대응하여 중국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반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제재와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한반도 안보에서 중국보다 미국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여론이 작용

변수별 차이

❖ 세대별

(단위 : %)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19~29세	31.8	55.7	5.1	2.0
30대	49.8	41.1	1.1	1.3
40대	55.0	35.9	2.4	2.3
50대	56.7	29.5	2.7	2.3
60대이상	43.5	34.5	6.1	1.9

→ 30대~60대 이상의 응답자는 공통적으로 중국이 미국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고 응답하였으나, 예외적으로 20대의 응답자는 미국이 더 영향력이 크다고 응답

→ 20대의 경우 미국을 선택한 비율이 55.7%로 과반의 응답자들이 미국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

→ 반면, 40대와 50대의 응답자에서 중국을 선택한 비율은 각각 55.0%, 56.7%로 과반 이상이 중국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

❖ 이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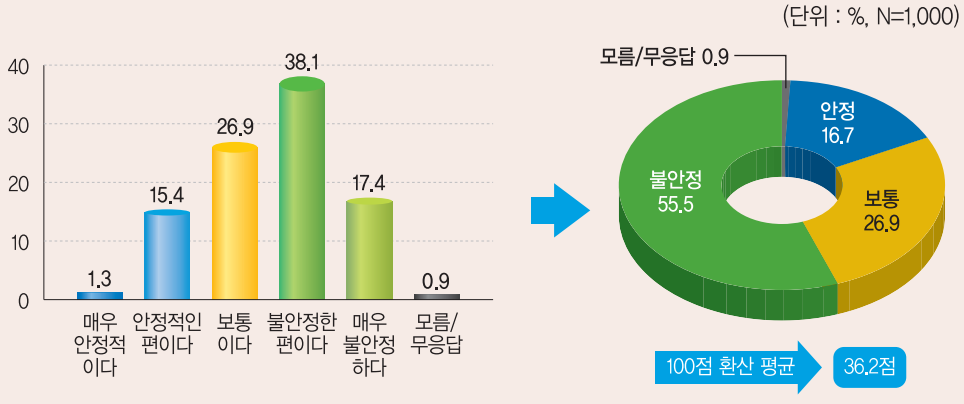
→ 진보, 중도, 보수 세 이념집단 모두 미국보다 중국의 영향력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

→ 2017년 2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영향력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이념 집단은 중도 집단

→ 이전 조사에서는 보수 집단이 진보 집단보다 '미국'의 영향력을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진보 집단(42.3%)이 보수 집단(38.4%)보다 미국의 영향력을 더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남

5. 안보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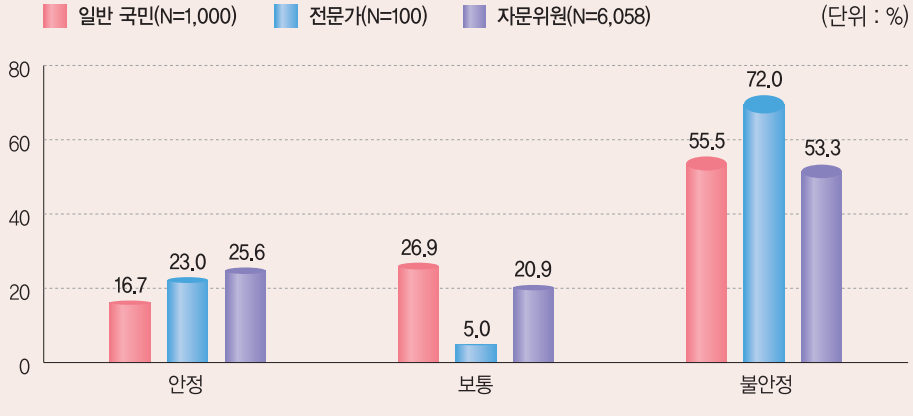
불안정 55.5% > 안정 16.7% 보통 26.9%



❖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대해서 '안정적이다'는 응답은 16.7%(매우 안정적: 1.3% + 안정적인 편: 15.4%), '불안정하다'는 응답은 55.5%(매우 불안정: 17.4% + 불안정한 편: 38.1%)로 나타나, 불안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조사

❖ 그 외에 '보통이다'는 응답은 26.9%로 나타남

전문가 조사 및 민주평통 자문위원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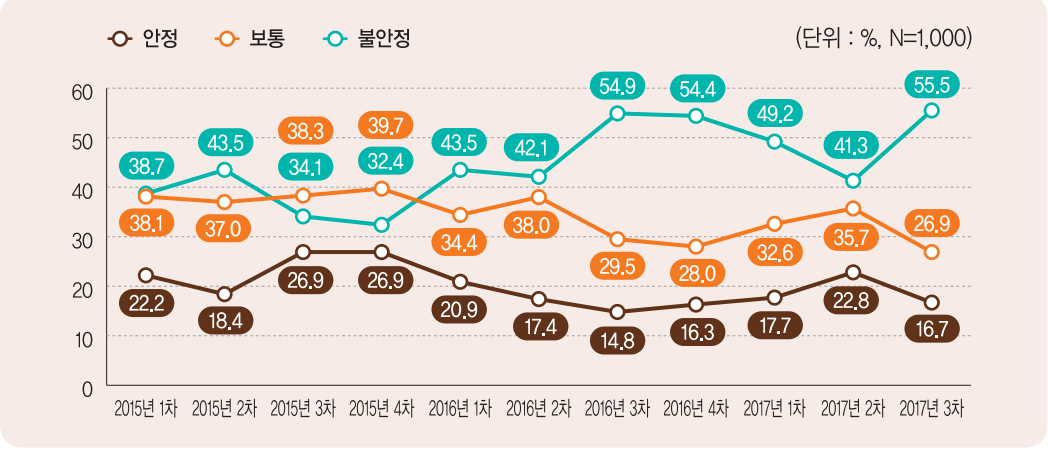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제외

❖ 일반 국민, 전문가, 자문위원 세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현 안보상황이 '불안정적이다'는 응답이 '안정적이다'는 응답보다 더 높게 조사

❖ 이번 조사에서는 '불안정적이다'는 응답이 일반 국민과 자문위원의 경우 각각 55.5%, 53.3%로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전문가 집단은 72.0%로 나타나 큰 격차 발생

❖ 6차 핵실험 이후 북·미 간 대립 양상이 크게 고조되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보는 여론이 전 사회적으로 크게 증가

추이비교



❖ 2016년 4차 조사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안보 '불안정' 응답이 이번 조사에서 다시 크게 상승하여 최근 3년 조사에서 최고치

❖ 이 결과는 7월~9월 사이에 북한이 5차례 이상의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등을 연속적으로 감행함으로써 북·미 간 대립 양상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국민의 안보 불안이 크게 증가

변수별 차이

❖ 성별

→ 이전 조사에서는 대체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안보 불안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던 것에 반해, 이번 조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안보 불안이 모두 크게 증가하여 남녀 간 응답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

→ 특히, 2017년 2차 조사와 비교해 여성보다 남성에서 안보 불안의 응답률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나 안보가 '불안정하다'는 응답은 남성 53.2%, 여성 57.8%로 나타남

❖ 세대별

(단위 : %)	안정	보통	불안정
19~29세	17.9	33.6	48.5
30대	24.2	32.5	43.3
40대	21.7	30.0	47.5
50대	13.2	27.3	59.1
60대 이상	9.4	15.5	72.9

→ 안보 불안을 가장 크게 느끼는 연령집단은 60대 이상으로 응답률이 72.9%에 달해, 안보 불안을 가장 덜 느끼는 연령집단인 30대의 응답률 43.3%와 매우 큰 격차

→ 6.25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60대 이상의 연령집단은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공세로 인해 고조되고 있는 남·북 및 북·미 간 대립 양상에 다른 연령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보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

❖ 지역별

→ 대구/경북 지역과 강원/제주 지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 보다 안보 불안을 더 크게 느끼는 지역들로 응답률이 각각 65.1%, 66.3%로 나타남

→ 반면, 북한과 물리적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서울 지역은 안보가 '불안정적이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거주 지역의 여론 분위기에 따라 안보 인식 좌우

❖ 이념별

(단위 : %)	안정	보통	불안정
진보	27.7	31.7	40.3
중도	13.6	31.3	54.5
보수	11.2	16.7	71.7

→ 현재 안보상황이 '불안정적이다'는 응답은 진보의 40.3%, 중도의 54.5%, 보수의 71.7%로 나타나 보수 응답자들이 진보와 중도 응답자들에 비해 안보 불안을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

→ 2017년 2차 조사와 비교해 안보 상황이 '불안정적이다'는 응답은 진보에서 10.0%P, 중도에서 12.0%P, 보수에서 13.6%P 증가

❖ 북한 인식별

(단위 : %)	안정	보통	불안정
협력/지원 대상	29.1	32.5	37.8
경계/적대 대상	11.0	23.2	65.3
상관없는 대상	11.8	32.5	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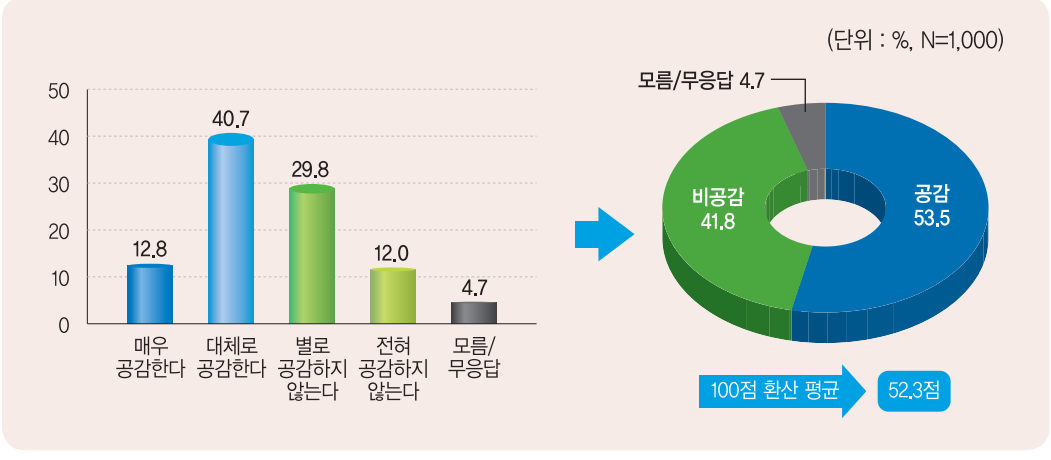
→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현 안보 상황에 대한 응답 차이가 뚜렷

→ 북한을 '협력/지원 대상'으로 보는 응답자 가운데 현 안보 상황을 '불안정적이다'라고 보는 응답은 37.8%인 반면, 북한을 '경계/적대 대상'으로 보는 응답자 가운데 '불안정적이다'라고 보는 응답률은 65.3%로 조사돼 큰 격차를 보임

6. 대북 · 통일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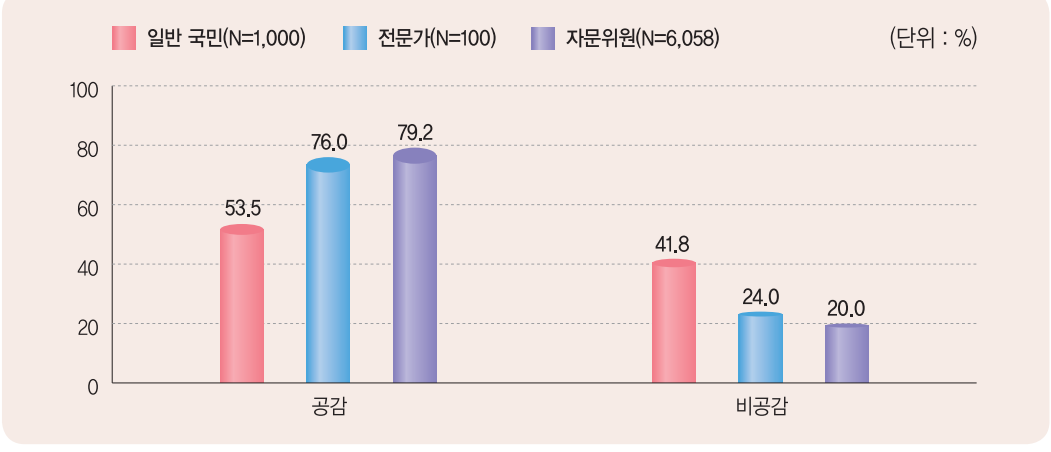
1)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공감도

공감 53.5% > 비공감 41.8%



※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53.5%(매우: 12.8%+대체로: 40.7%),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1.8%(별로: 29.8%+전혀: 12.0%)로 나타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공감

전문가 조사 및 민주평통 자문위원 조사



※ '모름/무응답' 제외

❖ 일반 국민, 전문가, 자문위원 세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더 우세

❖ 하지만, 전문가와 자문위원의 경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각각 76.0%, 79.2%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 국민은 53.5%에 그쳐 조사 집단 간 인식의 차이 발생

변수별 차이

❖ 세대별

(단위 : %)	공감	비공감
19~29세	53.4	44.5
30대	67.2	32.8
40대	58.2	38.1
50대	49.3	46.1
60대 이상	43.3	45.6

→ 60대 이상의 연령집단을 제외한 모든 연령집단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공감하는 응답이 공감하지 않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 정부의 대응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대는 30대(67.2%)로 가장 낮게 나타난 60대 이상(43.3%)의 응답보다 23.9%P 더 높게 나타나 연령집단 간 인식에 차이

❖ 이념별

→ 이념 성향에 따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공감도의 차이가 뚜렷

→ 진보 응답자의 경우 73.2%가 정부의 대응에 '공감한다'고 응답한 반면, 보수 응답자는 39.2%만이 공감한다고 응답

→ 반대로, 정부의 대응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진보의 24.8%, 중도의 46.4%, 보수의 58.1%로 나타나 진보와 보수 집단 간에 뚜렷한 견해 차이 발생

❖ 안보 인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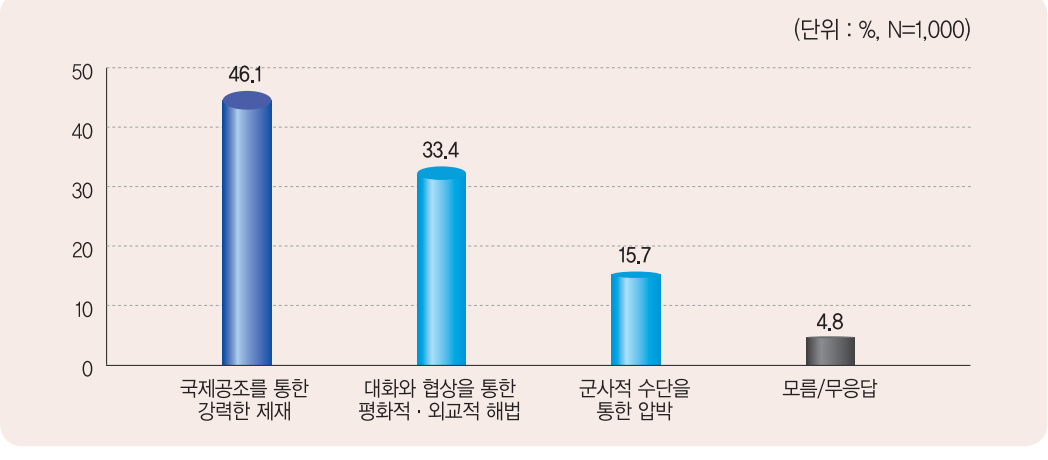
(단위 : %)	공감	비공감
안정	81.4	14.2
보통	66.0	30.2
불안정	39.6	56.0

→ 현재 안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공감도에 큰 견해 차이

→ 현재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보는 응답자의 81.4%가 정부의 대응에 '공감한다'고 응답한 반면, 안보 상황을 '불안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39.6%만이 '공감한다'고 응답

2) 북핵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법

국제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 46.1% >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 외교적 해법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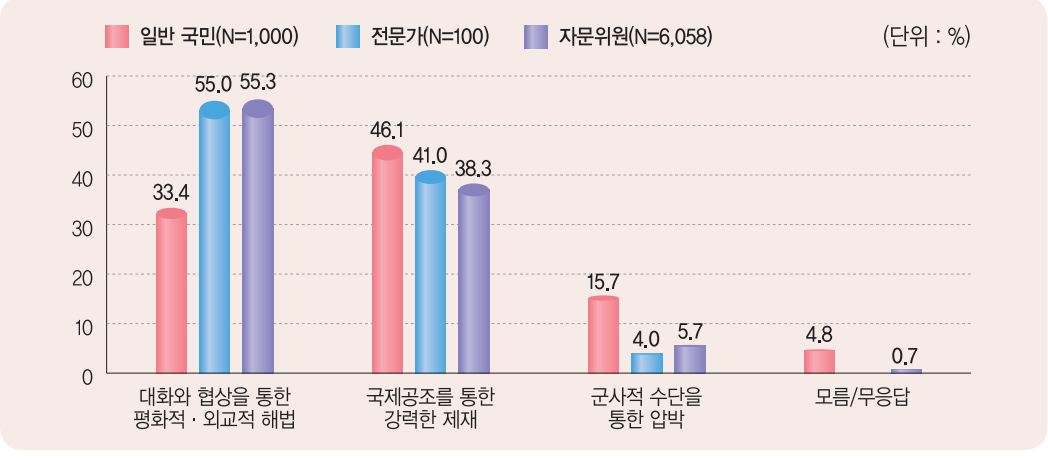


❖ 북핵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법을 조사한 결과, '국제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라는 응답이 46.1%로 가장 높게 조사

❖ 이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 외교적 해법'이라는 응답이 33.4%, '군사적 수단을 통한 압박'이라는 응답이 15.7% 순

❖ 이 결과는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군사적 수단의 사용보다는 제재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

전문가 조사 및 민주평통 자문위원 조사



※ '모름/무응답' 제외

❖ 북핵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법으로서 일반 국민은 '국제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를 더 선호하는 반면, 전문가와 자문위원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 외교적 해법'을 더 선호

❖ 세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군사적 수단을 통한 압박'은 가장 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변수별 차이

❖ 성별

→ 남성과 여성 응답자 모두 '국제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

→ 그러나, '군사적 수단을 통한 압박' 응답에서는 남성이 20.0%, 여성이 11.4%로 응답에 격차

❖ 세대별

→ 20대 응답자에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국제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군사적 수단을 통한 압박' 응답은 4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외교적 해법' 응답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연령층은 40대이고, '군사적 수단을 통한 압박' 응답에서는 50대와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 이념별

(단위 : %)	국제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외교적 해법	군사적 수단을 통한 압박
진보	38.6	48.6	11.7
중도	53.2	27.8	15.8
보수	50.7	23.3	21.9

→ 진보 응답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외교적 해법'을 선호하는 반면, 중도와 보수는 '국제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 '군사적 수단을 통한 압박' 응답은 진보의 11.7%, 중도의 15.8%, 보수의 21.9%에서 응답

❖ 북한 인식별

(단위 : %)	국제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외교적 해법	군사적 수단을 통한 압박
협력/지원 대상	35.0	58.5	3.7
경계/적대 대상	56.0	20.4	20.6
상관없는 대상	39.8	26.9	25.5

→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북핵문제의 해법에 대한 응답 차이가 뚜렷

→ 북한을 '협력/지원 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는 58.5%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외교적 해법'을 선택한 반면, 북한을 '경계/적대 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는 56.0%가 '국제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를 선호

→ 또한 '군사적 수단을 통한 압박'의 응답에서 북한을 '협력/지원 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는 3.7%에 불과한 반면, '경계/적대 대상'과 '상관없는 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는 각각 20.6%, 25.5%로 나타나 북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북핵 해법에 대해 뚜렷한 견해 차이

❖ 안보 인식별

(단위 : %)	국제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 외교적 해법	군사적 수단을 통한 압박
안정	35.0	56.0	6.5
보통	50.4	36.8	9.7
불안정	47.9	24.6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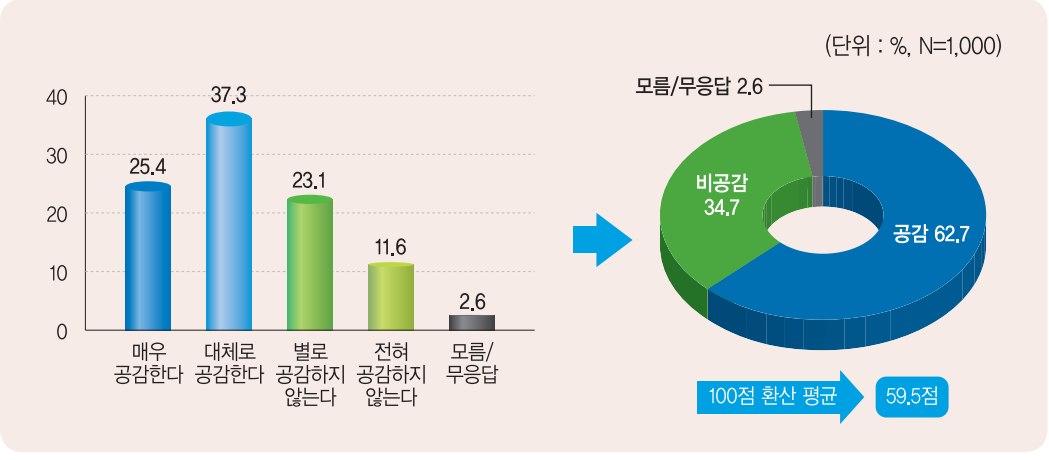
→ 현재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북핵문제의 해법에 대한 견해 차이

→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56.0%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 외교적 해법'을 선택한 반면, 안보 상황을 '불안정적' 또는 '보통'으로 보는 응답자는 각각 47.9%, 50.4%가 '국제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를 선호

→ '군사적 수단을 통한 압박' 응답에서는 안보 상황을 '안정적' 또는 '보통'으로 보는 응답자가 6.5%와 9.7%에 불과한 반면, 안보상황을 '불안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21.4%에 달해 큰 격차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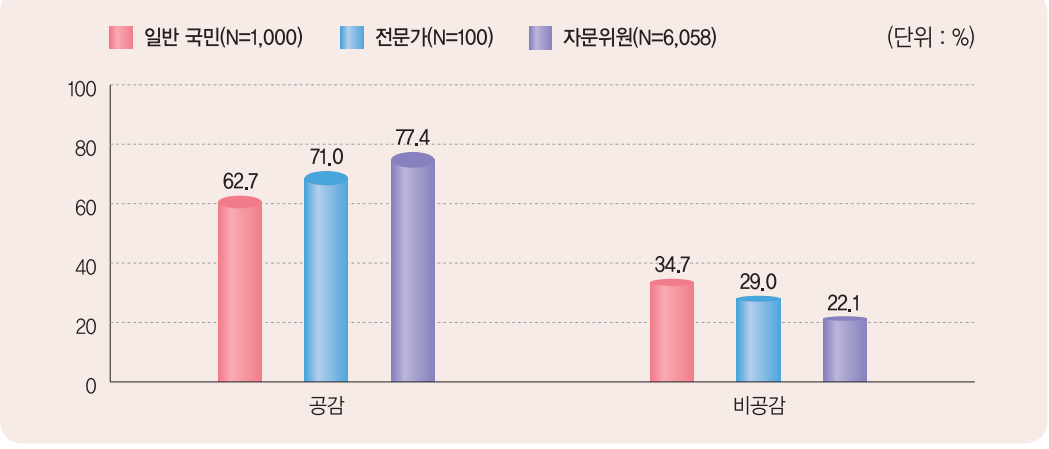
3)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에 대한 공감도

공감 62.7% > 비공감 34.7%



※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62.7%(매우: 25.4%+대체로: 37.3%),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4.7%(전혀: 11.6%+별로: 23.1%)로 나타나,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

전문가 조사 및 민주평통 자문위원 조사



※ '모름/무응답' 제외

❖ 일반 국민, 전문가, 자문위원 세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조사

❖ 이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제재와 대화의 병행에 대해 일반 국민은 물론 오피니언 리더 그룹도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

변수별 차이

❖ 세대별

→ 30대와 40대의 경우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3.8%와 70.5%로 다른 연령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 하지만 50대와 60대 이상의 응답자의 경우는 '공감한다'는 응답률이 57.7%와 53.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통한 압박'을 선호했던 것과 같이 일관된 태도 유지

❖ 이념별

→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에 대해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를 뚜렷하게 보였는데, '공감한다'는 응답이 진보 82.7%, 중도 61.6%, 보수 48.1%로 조사

→ 반대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진보 16.9%, 중도 37.6%, 보수 50.6%로 나타남

❖ 북한 인식별

(단위 : %)	공감	비공감
협력/지원 대상	87.7	9.4
경계/적대 대상	51.5	47.8
상관없는 대상	53.6	44.6

→ 북한을 '협력/지원 대상'으로 보는 응답자 가운데 87.7%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응답

→ 반면, 북한을 '경계/적대 대상'으로 보거나 '상관없는 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는 각각 51.5%와 53.6%만이 '공감한다'고 응답하여 북한 인식에 따라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 발생

❖ 안보 인식별

(단위 : %)	공감	비공감
안정적	84.4	12.9
보통	74.8	23.1
불안정	50.5	47.1

→ 현재의 안보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에 대한 공감도가 다르게 나타남

→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84.4%가 '공감한다'고 응답한 반면, '불안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50.5%만이 '공감한다'고 응답하여 견해 차이가 뚜렷

3장

통일논의 동향

Ⅰ. 국내 학계 동향

1. 개관 및 특징 71
2. 학계 동향 분석 72

Ⅱ. 국내 언론계 동향

1. 개관 및 특징 94
2. 언론계 동향 분석 95

Ⅲ. 해외 동향

1. 개관 및 특징 115
2. 해외 동향 분석 116

Ⅰ. 국내 학계 동향

1. 개관 및 특징[1)]

개관

❖ 북한의 6차 핵실험, ICBM급 미사일 발사 및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적 옵션 거론 등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관련 위기 해결책 모색이 주요 의제

❖ 북핵·사드 등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한 미·중 등 주변국 입장 분석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기하여 대북·통일정책의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

특징

❖ 3/4분기 국내 학계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전망 위주였던 2/4분기와는 달리,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출범 100일을 경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위기 대응 전략에 초점

❖ 현 위기 상황에서도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 정착을 위한 동북아 패러다임의 전환과 문재인 정부의 통일 비전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집중. 문제 해결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중·장기적 대북·통일플랜 동시 가동

1) 2017년 3/4분기(7월 1일~9월 30일)에 학회·연구기관 민간단체·정부기관 등에서 통일·북한 관련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 세미나 등을 정리

2. 학계 동향 분석

1) 대북·통일정책 논의

▣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동북아 국제정치 구조에 대한 이해와 한·중·일 협력 모색

▣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통일플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을 위한 단계별 이행전략 모색

▣ '新북방경제' 추진을 위한 주변국들의 발전 전략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의 관계, 공동 발전 모색

❖ 국립외교원·한국국방연구원·통일연구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공동 학술회의, '동북아 국제정치 패러다임 전환과 신정부의 과제' (7월 13일)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

→ 진보와 보수 정권의 대북정책 추진 과정과 공과를 성찰적으로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노력이 중요. 임계점에 도달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상태 달성과 아울러 중장기적인 통일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한 해법 모색이 필요한 시점

→ '한민족 생태계' 개념은 분단체제와 통일문제에 생태계 개념을 접목시킨 것으로, 남북관계의 단기적 현안을 넘어 단절된 한민족 공동체의 생태적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

→ 북한은 국제정치적 차원의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은 아니나, 일정한 핵공격 능력을 가진 사실상의 핵능력국가(nuclear capable country)에 근접. 북핵문제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문제 전체를 압도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 대북·통일정책에 관한 보·혁 및 여·야 간 협력구도를 형성하고, 민족문제의 정쟁화를 방지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 대북·통일 정책

에서 '협치의 정신'이 중요한 이유. 특히 야당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정기적 브리핑, 청와대·여·야 영수회담 등을 통해 북한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정보 공유와 아울러 국회 내 초당적 협의구도를 실질적으로 가동

→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상태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주도하는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 한국형 관여정책은 한국 주도의 비핵화 통일정책으로 북한의 핵무장 방지와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예방적 관여정책(Preventive Engagement Policy)과 북한 내 친통일 친민주 여건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차원의 포괄적 관여정책(Comprehensive Engagement Policy)으로 구분

→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통일국민협약 체결은 새로운 남북합의에 대한 사전적 국민동의의 과정으로 중요

▷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주제발표

→ 한반도는 국가 규모와 지정학적 취약성으로 인한 국난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국가적 생존과 번영을 지켜왔던바, 앞으로도 이 같은 국가적 특성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활용하는 국가안보전략의 수립이 긴요

→ 한국은 특이한 경험과 국가 특성으로 인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안보·평화·통일 등 3대 핵심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데, 이때 안보제일주의, 평화제일주의, 통일제일주의 등의 노선이 서로 충돌하며 남남갈등 발생. 안보·평화·통일의 병행추구 원칙 하에서 안보·평화·통일의 우선 순위를 정할 필요

→ 국가안보전략의 운영 원칙으로 자강, 국민합의와 지속성, 공동안보와 포괄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등 4개를 제시

▷ 윤봉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주제발표

→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위협들은 단순히 정보 갈취나 네트워크 장애를 유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 이에 주요 국가들은 사이버 침해 행위를 종래의 정보보안 측면이 아닌,

국가안보라는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고 정책을 집행

- 우리는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일반법이나 국가전략 수립에 있어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가 미흡. 특히 북한의 사이버공격 역량이 세계 5위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위협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법제적 기반 마련 필요
-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조기에 제정하는 등 범국가차원의 사이버 안보전략을 수립, 효율적인 대응체계 마련

▷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거의 대부분의 정책분야에서 변동을 가져오는데,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환경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
-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은 유럽에서 보여준 러시아의 행태를 답습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의 경제 보복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우려. 그러나 북한 핵 위협에 직면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미군 BMD 자산의 자국 배치를 추진한 폴란드의 용기를 참고할 필요
- 전작권 전환은 미국 대한(對韓) 방위공약의 약화 가능성을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추진하되, 전환에 합당한 군사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 대북 협상을 통해 북핵 위협을 크게 감소시키는 조치와 연계하여 추진
- 군은 국방예산이 증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군사력 건설 방향의 창의적 구상이 필요. 또한 국방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리직속 또는 대통령 직속의 기구를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
-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미국의 요구에 대해 재정부담 능력과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률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되, 소비자 물가 상승수준 이상의 반영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제시할 필요

▷ 이우태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독일의 '보이텔스바흐협약'과 같이 통일정책에 대해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적 지향점을 만들고, 사회 전반에 통일정책의 공감대를 넓힐 필요
- 남북 간 인적교류와 인도적 지원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는 관계없이 지속한다는 정치적·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며, 합의 가능한 분야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시작할 필요.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적극 활용
- 극도로 경색되고 신뢰가 무너진 현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 남북정상회담에 필요한 적절한 상황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선제적 조치이지만, 남북 특사 교환을 통해 핵 프로그램 중지나 비핵화 조치 등에 대해 일정부분 의견 공유 필요
- 남북 간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하였다면, 과감하게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고려

▷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토론

- 동아시아에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가 강화됨에 따라 향후 한·중관계에서도 여전히 군사·안보적, 전략적, 정치적 요인들이 경제, 사회·문화, 인적 교류 등의 발전을 저해하며 전체적인 양국 관계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새로운 이미지의 정부 출범, 한·중 수교 25주년, 한·중이 공유할 수 있는 민족주의적 요소들의 등장은 한·중관계 발전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한·중·일 산업분업화 구조의 변화가 점차 눈에 띄게 나타나며 기존의 한·중 경협의 기본 구조를 흔들고 있다는 점, 북핵문제에 관한 이견,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 동북아 강대국 정치의 도래와 미·중 전략적 경쟁구도의 심화, 한국 국민들의 대중 환경문제 불만 고조는 한·중 관계 발전의 도전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 신정부는 안보를 기초로 하고 외교적 노력을 시도하며 동시에 경제협력, 정치적 대화, 문화교류 등을 병행·추진함으로써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균형적으로 추진
- 북한의 변화 촉진 대전략을 세우고, 개혁보다는 개방을 통한 변화 추구 전략 구사

▷ 변상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토론

- 최근 영국 등 '오프라인'에서의 각종 대형 테러 모의가 사이버 상에서 이뤄지면서 사이버 규제의 시급성 부상. 영국 정부의 경우 '사이버 보안'을 테러와 국가간 군사적 충돌과 같은 제1급 국가 안보 위협으로 분류하고, 군사적 대응 전략의 핵심으로 간주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과학기술에 접목하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과학 기술력을 스마트 전력으로 활용하는 민·군 융합사업을 추진. 학계·기업·군·국가정보원의 최고급 인력들이 머리를 맞대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제언

▷ 송화섭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토론

- 한미동맹 관리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상호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된 시점에서 점진적으로 전작권 전환 등 현안과제 추진. 우리 입장에서는 동맹을 자주성에 대한 제약으로 인식하지 않고, 동맹을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
- 대북정책에 있어서 북·중 대(對) 한·미·일의 구도보다는 북한 대(對) 한·미·중·일의 구도라는 인식이 형성되도록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고 공통분모를 강조
- 한·미·일 공조와 한·중·일 협력을 통한 지역차원의 협력 메카니즘 모색
- 심각한 대치국면 속에서도 대화와 교류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하여 지속성 있는 대북정책을 정착시켜 나갈 필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비판하고 제재를 가하지만,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

❖ 국회입법조사처·국회 이수혁·백승주·최경환·하태경 의원실, 아시아미래지식인 포럼 공동세미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협력과 국회의 역할' (9월 14일)

○ 발제 1 : 북핵을 바라보는 한·중·일 및 미국의 시각과 북한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주제발표

→ 북한의 핵실험 의도는 수소탄이 원자탄보다 훨씬 위력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음

→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과 일대일로 수교, 평화정책이라는 상황을 연출하면, 국제적으로도 지위가 올라가지만 우선 대내적으로 김정은의 통치력이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효과

→ 미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리적 타격 같은 무력 대응 가능성은 낮음

→ 남북대화는 올 하반기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능력이 고도화된 시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

○ 발제 2 : 북핵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과 지경학적 해법

▷ 진징이 베이징대학 교수 주제발표

→ 북핵문제를 이해하는데 핵심 포인트는 바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소라 할 수 있고, 그 해법은 지정학적 요소의 약화와 지경학적 요소의 강화에서 찾아야 함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정전략과 냉전구조를 탈피하려는 북한의 지정학적 생존 전략이 부딪히면서 북핵문제가 동북아 국제질서 구축의 매개체로 등장. 북·미 간의 문제가 중·북 간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고, 중·미 갈등의 촉매제가 되어가고 있음. 이는 북핵문제의 발단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고, 그 전개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구축과 엮여져 있기 때문

- 미일동맹과 한미동맹, 한·미·일의 전략적 공조가 전례 없이 강화. 중·일관계는 장기적 갈등국면에 접어들었고, 중·북관계와 중·한 관계는 최악. 결과적으로 북핵은 역내 가장 주요한 모순체인 미·중 간의 갈등을 전방위적으로 증폭시켜 온 촉매제 역할
- 외부 압력이 강해질수록 북한 정권의 내부 응집력이 강화되는 역현상 발생. 사상 전례 없는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도 향상되어 보인다는 아이러니한 현상 발생
- 김정은은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민생활 향상 중시를 통한 경제건설의 중심지위를 확립. 계획경제와 집단화 강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개인주의와 시장경제의 개념이 깊숙이 뿌리를 박고 있음. 북한의 이러한 '자본주의화'는 도처에서 목격 가능
- 전통적 지정학이 '공간'에서 펼쳐지는 국제정치 주체들의 힘의 관계를 연구하고 각 국간의 대결과 힘겨루기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지경학은 경제적 지위와 경제적 관계에서 국제관계를 다루는 학문
- '지정학적 갈등'에서 '지경학적 접근'으로 전환하여 선경후정(先經後政)으로 지정학적 갈등을 봉합했던, 중국과 대만의 경험을 참고. 지난 시기 북한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했던 지정학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지경학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중국 동북의 진흥이나 북한 경제 회생에 긍정적인 역할
- 북핵문제의 또 다른 해법은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에 올인하도록 지경학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것임. 북한이 고속철도, 고속도로, 경제개발구 건설로 경제건설이 붐을 이루고, 시장경제화가 가속화된다면 북핵의 지정학적 요소도 약화

○ 발제 3 :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

▷ 히라이와 순지 난잔대학 교수 주제발표

- 국제사회의 관심은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만, 한반도에는 또 다른 위기가 존재. 즉, 핵·미사일 문제로 상징되는 북한의 '공격성'에서 비롯된 문제뿐만 아니라, 냉전 종결 이후 내부의

권력 투쟁, 경제상황의 악화 등 북한 체제의 '취약점'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는 우려. 북한 체제가 동요하고 최악의 경우 붕괴해 버리면 주변국에게 막대한 피해 발생

- ㅅ 트럼프 정부의 대북 메시지는 부정확. 북한이 본격적으로 자세를 변화시키기 전에 맥매스터 대통령 보좌관, 마티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의 중추적 인물이 군사력 행사는 어렵다는 발언을 반복. 북한은 미국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통해 군사력 행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
- ㅅ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체제의 '강인함', '기술력', '핵·미사일에 대한 강한 야심', 외교적 '교묘함', '빈틈없음' 등을 과소평가
- ㅅ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냉전 종식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또한 북한 체제의 힘, 외교적 강인성, 기술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곤란
- ㅅ 군사적 행동이 어렵다면, 북한과의 대화에 마주해야 할 것임. 그 경우, 북한 이외 국가와의 입장 차이를 북한이 이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요구.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안보환경 구축 과정이라고 한다면, 북한에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전제조건

❖ 국회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공동 세미나, '한국경제, 북방에서 미래를 찾다' (7월 21일)

○ 발제 1 :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중 협력

▷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주제발표

- ㅅ 강대국으로서 중국은 정체성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로, 스스로를 동아시아의 지역 강국으로서가 아니라 세계를 전략공간으로 간주. 이와 더불어 대륙국가라는 정체성에서 탈피하여 대륙-해양 국가라는 복합 정체성으로 전환. 일대일로 구상은 중국의 21세기 국가대전략
- ㅅ 중국은 기존의 성과를 가지고 한 단계 더 성숙한 새로운 제안을 준비. 일대일로에 북극항로를 의미하는 '일도'(一道)를 더해 '일대일로일도'(一對一路一道) 구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

-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는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구축'의 내용을 담고 있는바, 단순히 남북한만의 교류가 아닌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고 미래 국가전략구상에 연계 가능. 즉, 중국의 해상 일대일로 구상을 환황해-환동해-환북극해로 연계하는 전략으로 이끌어야 하고, 여기서 한국은 중요한 전략공간의 역할
- 일대일로와 동북아 안보 측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제 미국 중심의 구도에서 중국 중심의 북핵 대응구도로 바꾸려는 노력에 착수

○ 발제 2 : 새로운 대(對)러시아 북방협력 구상

▷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 · 유라시아 본부장 주제발표

- 러시아, 중국, 인도, 중앙아시아, 몽골 등 유라시아 대륙의 주요국들이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면서 유라시아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이 현저히 증대. 지난 16년 동안 이들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3.4%)을 훨씬 상회
- 이런 배경 하에 2012년 3기 푸틴 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의 동방정책 가속화. 러시아는 2012년 5월 역사상 처음으로 극동 개발부를 신설, 2013년 3월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국가프로그램을 채택, 2015년 9월 1차 동방경제포럼(EEF)를 개최하고 정례화. 또한, 극동 선도개발지구 설치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선포 등 조치를 취하면서 극동개발에 주력
- 러시아 및 유라시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 추진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 첫째, 정부 내 유라시아 협력 전담조직 신설 필요. 둘째, 정상회담 또는 2+2(외무 · 경제장관) 회담 정례화. 셋째, 한 · 러 전략대화(1.5 트랙) 부활. 넷째, 대러 및 대북방 협력 강화가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외전략으로 상정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인재양성 체제 구축이 시급한 바, '유라시아정책대학원'의 설립도 진지하게 검토

- 향후 대러 북방협력 확대 방안을 위해 첫째, 한국·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둘째, 한·러 투·융자 플랫폼 확대 및 적극적인 활용, 셋째, 중소기업 투자진출 지원 패키지 마련
- 또한 한·러 양국 간 산업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첫째, 러시아 극동지역의 선도개발구역 및 특별경제지대를 기반으로 한·러 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 둘째, 극동 콜드 체인(cold chain) 가공거점을 조성, 셋째, 극동지역 농업개발 참여 확대, 넷째, 교통·물류협력 확대, 다섯째, 북극항로 상용화를 위한 극동 항만·물류 네트워크 구축

▷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토론

- 문재인 정부의 북방정책은 첫째, 중국-몽골-러시아 회랑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환동해 협력, 둘째, 신 유라시아 대륙교 회랑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환황해 협력, 셋째,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자금을 조달받는 일대일로는 단기적으로 철도산업, 교통 물류인프라 건설, 중장비 수요 예상
- 일대일로와 한반도 신경제지도와의 접점을 찾는다면 이는 미래 한국의 신흥시장 뿐만 아니라 남북경제공동체, 유라시아시대에 우리의 미래 비전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전략연구실장 토론

-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서진전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구상의 부재 및 관심의 저하라는 점을 발견
- 시험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중단된 나진-하산 사업을 남북관계 진전의 마중물 및 신동방정책과의 연계라는 점에서 시도할 필요
- 북한문제 해결이 장기화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구상을 연계할 새로운 대안으로 '한·중 열차 페리사업'을 적극 검토

▷ 박흥수 글로벌경제평화연구소(GEPI) 이사장 토론

- 신북방정책 액션 플랜의 선결과제는 첫째, 대통령 직속의 북방위원회 신설, 둘째, 한·러 양국간 북방펀드 조성, 셋째, 지자체 차원의 북방정책 전담기구를 개설, 넷째,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 단기 프로젝트로 첫째, 한국·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 FTA를 조속 체결, 둘째, 북·러 국경 인접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 조성, 셋째, 극동시베리아의 선도개발지역에 6차 산업형 농장 건설, 최봉준 경영대상(가칭) 제정
- 중장기 프로젝트로는 첫째, 두만강 하구를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평화지대로 개발, 둘째, 남·북·러 3통 사업(TSR·TKR, PNG망, 전력망) 추진, 셋째, 2선 3점의 권역별 경제블록의 소다자(小多者) 협력체계 구축

❖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9월 19일)

○ 1세션 발제 1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과제

▷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주제발표

- 한반도 신경제지도 기본 구상의 비전은 한반도 경제통일과 북방경제시대의 개막. 목표는 첫째,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둘째 북한 변화와 남북한 경제통합 촉진, 셋째,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기반 조성
- 한반도 신경제지도 4대 정책은 첫째, 환동해 경제벨트, 둘째, 환황해 경제벨트, 셋째, 남북 접경지역 평화벨트, 넷째, 남북 '하나의 시장' 협력
- 추진 과제는 첫째, 북핵문제 해결 수준과의 관계, 둘째, 북한의 수용가능성, 셋째, 국내적 동력 확보, 넷째, 민간 경협 주체의 역량 제고, 다섯째,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여섯째, 재원 조달의 문제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조건이 갖춰져야 추진하는 일이 아님. 분단된 남북 경제를 하나로 연결하여 새로운 북방 경제시대를 열고,

경제통일을 실현하는 담대한 구상이자, 한반도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핵심 수단.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전략으로 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노력

○ 1세션 발제 2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이행 전략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주제발표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추진 전략은 첫째, 능동적 환경 조성과 유연한 접근, 둘째, 단계적 추진과 상호 연계, 셋째, 새로운 남북 경협방식의 모색, 넷째, 북한·중국·러시아 경제발전 전략과의 연계
- 추진 시 첫째, 북핵문제 해결과의 관계, 둘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의 관계, 셋째, 국민적 정서와 국내외 여론과의 관계 고려
-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첫째, 제도적 인프라 정비, 둘째, 대북 교역 및 투자안전장치 마련, 셋째, 기업의 남북경협 추진 동력 및 역량 구축, 넷째, 다양한 민간 경협 주체 발굴 및 지원제도 마련, 다섯째,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와의 사전 조율 및 관련 법제도 개선, 여섯째, 국내외 홍보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일곱째, 국제적 차원의 관심 제고 및 재원 마련 방안 검토
- 모색 단계에 추진 가능한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첫째,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측 호응을 전제로 인도적 지원 또는 개발지원 사업 추진 및 남북경협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고려(각종 재난 예방, 물관리, 농업, 보건의료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 한·러간 협력사업 등)
- 둘째, 구상 실현을 위한 사전 조사 및 탐색 차원의 사업으로 대북 투자자산 권리 행사를 위한 기업인 방북 추진, 기존 대북 투자분 회수를 위한 물품 반입 및 교역 기업의 선불금 잔량 물자 반입 허용, 국제 경제산업의 변화 동향 파악
- 추진 단계 설정은 핵문제 진전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 변화 등을 고려하되 기본적으로 '모색단계 1~2년차', '재개단계 3~5년', '본격화 단계 5년 이후'로 기준을 정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 추진 로드맵은 첫째, 단계별·권역별·내용별로 구분해 추진 가능한 주요 사업들을 제시, 둘째, 주변 정세변화, 남북관계 변화, 국제사회 제재 동향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 조정, 셋째, 정부 차원의 메가 프로젝트와 민간기업 차원의 비즈니스 구분
- 추진체계는 첫째,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둘째, 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 셋째, 남북한 및 동북아 차원의 협의 시스템 구축, 넷째, 한반도 신경제지도 정상포럼 개최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변화 촉진 등 북한 내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한 지렛대이자 대한민국 미래 생존의 전략적 수단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그러므로 핵문제로 인한 남북관계의 장기적 경색과는 별개로 우리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노력 지속

▷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북한 경제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경제개발의 토대가 되는 사회개발(보건, 교육, 생활 환경 등)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북측의 기존 경제개발정책 중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 남북관계 정상화 후에는 남북공동위원회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구상을 구체화하고 주요 사업 간 우선순위, 사업 내용, 로드맵 등 주요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
- 주요 프로젝트마다 북측 경영·기술인력(사업 기획·경영인력·연구개발 인력·산업기능 인력 등)을 참여시키고, 이들을 위한 지식 전수 프로그램도 가동

▷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한국유라시아학회 회장) 토론

- 한반도 통합철도망 사업은 한반도 경제통합과 동북아·유라시아 물류의 가교국가라는 공통비전의 공유가 필요. 북한 철도의 경우 초기에는 저비용 정부 주도형의 파급효과가 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고비용·국제투자가 가능한 민간 참여의 대규모사업

으로 확대해 가는 단계별 전략 필요

- 남북철도연결사업과 TSR-TKR 철도연계사업에 새로운 추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북한 철도 현대화를 공론화
- 주변국 개발전략과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과 동시에 초기에 한·중·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동북아 및 유라시아 전체 대륙으로 확산할 필요

▷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 인프라 개발이나 대규모 경제특구의 공동개발과 같이 정부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개발협력 사업과 NGO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및 중소규모 개발협력 사업, 그리고 민간이 수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산업협력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 범주의 협력사업에 대해서 적절한 추진 원칙을 확립
- 북한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단계적·점진적 확대도 중요. 현재 북한의 물적·인적·제도적 기반을 고려할 때, 당장 북한 지역의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산업협력은 리스크가 너무 크며, 우선은 설비반출형 위탁가공 교역 등 소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협력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이러한 소규모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규모가 큰 투자 협력사업을 검토
- 남북경협이 북한경제를 성장시키고 시장화를 촉진하며, 이를 통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접경지대나 주변부 중심의 남북경협 전략에서 벗어나 평양 등 핵심 대도시에 남북경협 거점을 추진하는 전략으로 전환
- 향후 남북한 산업협력은 각 산업 및 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접근. 글로벌 가치 사슬을 강화하는 데서 북한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

▷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토론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북한 경제개발정책(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과 5개년 전략, 경제개발구 등)과 연계하여 북한의 수요가 반영된 공동협력 방안을 제안

- 남북경협 재개 및 본격화 단계 이전에 국제화 방안 모색이 필요. 법·제도의 국제화(신변안전보장과 4대 경협합의서 등의 실질적 이행 등), 행정서비스의 국제화(3통과 노무관리 등), 자본의 국제화(다자간 협력과 국제 자본 유치)를 의미

○ 2세션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방안

▷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 정경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실현되기 어려운 구호이므로 경제관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치·정부의 역할을 조율할 필요. 정부가 모든 관계를 승인하고 허가하는 방식은 재고
- 북한의 민생을 지원하는 사업, 부족한 물자를 공급하는 사업, 물자 공급 능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가장 중요. 북한 주민들의 소비재·생필품 등에 대한 교역 수요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 또한 열악한 민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이 제안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호응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김은옥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토론

- 최근 북한의 ICT 시장이 확대되고 과학기술 중시정책이 추진되는 상황 등을 반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남북 협력사업 발굴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 고려사항은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는 것이므로, 북한의 시장화와 개방화를 촉진하는 '하나의 시장' 협력으로 북한 내부 변화의 동력을 확장

▷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 토론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투트랙(two track)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첫 번째는 단절된 기존 경협의 재개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한 경협 추진임. 북한은 두 번째 방식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바 북한의 인프라, 도시개발을 새로운 기술 실험

테스트 베드(test bed)로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

- ㄱ 북한 당국은 이미 남북이 합의했던 사업들(10·4선언 등)의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 또한 과학기술측면의 경협에 큰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이나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적으로 우리 수요와 상충
- ㄱ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에 초점을 맞춘 경협 추진이 중요. 특히 저성장, 고령화,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경협 패러다임 도출이 필요

▷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토론

- ㄱ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선 대북정책 기조인 투트랙(two track)의 지속성. 북핵 위기가 고조된다고 해서 과거 정부처럼 모든 것을 한미동맹 중심으로 치우쳐서는 곤란하고, 한국 주도의 대북정책 관철 의지는 지속적으로 표방할 필요
- ㄱ 국제사회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시점부터 북한의 수요 증가. 남북협력의 그림에서 북핵 이슈 해소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을 동시에 고려
- ㄱ 북한의 향후 경제발전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어떻게 확보·경제에 적용하는가에 좌우. 따라서 월등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이를 주도하면서 북한 개발의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이런 측면에서 남북 단일 시장을 조성하는 가운데 북한의 인력 개발을 내걸고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방안 모색

▷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 토론

- ㄱ 신경제지도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핵문제 해결이 근본이지만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필요. 북한 경제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해 확장성과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과거와 같은 시혜적인 자세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시도해서는 북한의 수용을 기대하기 힘듦

- 북한과 경제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산업별로 정량화하고, 그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려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
-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부처간 협업과 분업의 한계를 설정하고, 조정기구 설치도 검토

▷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토론

- 현실적인 평화 로드맵은 비핵화를 명시적 목표로 삼되, 그 경로는 보다 유연하게 설정하고 북한에게 비핵화의 편익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상. 결과적으로 신경제지도 구상의 구체화 과정이 북핵문제 해결의 환경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환경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
-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구상의 실현이 동북아 갈등구조 및 한반도의 구조적인 긴장상황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평화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개발
-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북한 및 한반도 문제 인식에 있어서 정치·군사적 안보 프레임에서 평화 프레임으로 전환
- 도시 재생은 북한 당국의 성과로도 연결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아이템

2) 출범 100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위기 대응 논의

▣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 발사,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적 옵션 거론 등 문재인 정부의 일련의 외교안보정책 관련 위기 해결책 모색

▣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 전략의 변화 모색

❖ 국민의당 한반도평화기획단 세미나, '대북정책 제3의 길을 모색하다' (8월 10일)

○ 발제 1 : 대북포용정책의 진화-변화된 현실과 변화된 접근

▷ 김근식 경남대 교수 주제발표

→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위한 고민들은 첫째, 북한의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 둘째, 북핵과 남북관계를 분리, 셋째, 북핵 뿐만 아니라 북한을 전략적으로 관리, 넷째, 군사적 억지력 필요, 다섯째,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을 견인하며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평화체제 구상, 여섯째, 평화공존과 남북경제공동체 지향 등

○ 발제 2 : 새로운 대북정책-비핵화와 한·미·중 협력은 가능한가?

▷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주제발표

→ 북한의 핵이 생존이라는 논리구조는 북한 스스로 핵을 생존과 동일한 지위에 올려놓음으로써 기능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한 한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을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짐

→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따른 구체적인 이익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남북한 평화,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들어설 통일된 하나의 국가 등은 동북아 지역질서의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치밀한 전략이 부족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정교한 제재와 국제공조, 둘째, 남북한 공존과 평화체제로의 전환, 셋째, 제3의 길로 핵문제를 위한 포획이론과 장기적인 평화프로세스가 있음. 경제학의 포획이론(capture theory)을 한반도 차원의 안보 논리에 적용. 북핵문제가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외교환경, 대북 관여정책, 대내적 제도 완비, 확실한 억지력, 자기 실천적 평화주의 등으로 북핵을 에워싸고 포획하는 것이 필요

→ 향후 우리 정부는 비핵화 논의 합의, 논의 시작, 논의 초기 단계, 논의 진전단계, 성과가시화 단계 등 다양한 단계의 국면마다 북한이 협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어떤 단계적 등가성 제안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

→ 콘텐츠, 전달 방식, 외교적 설득 노력, 해당국가 내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네트워크, 우리 정부의 도덕적 정당성 등 복합적인 외교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통일외교의 중요성을 인식

○ 발제 3 : 안보 위기 하의 대북정책 방향

▷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주제발표

→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의 3가지 수는 첫째, 한국이 북·미대화를 지지하고 그 과정에서 남북대화를 병행할 모멘텀을 확보, 둘째, 단기적으로 긴장완화와 신뢰회복, 중기적으로는 비핵화-평화체제-남북관계가 선순환하는 틀의 확립, 셋째, 주요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긴장완화라는 첫 단추로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제안

▷ 고수석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 북·미 제네바합의, 북·미 공동코뮤니케, 9·19공동선언 등의 정신을 계승해 입구-핵동결, 출구-핵 폐기로 북·미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

▷ 고유환 동국대 교수 토론

→ 한반도 문제 핵심 당사자인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의 포괄협상안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단계적 이행 로드맵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

▷ 송영훈 강원대 교수 토론

→ 제3의 길은 대북정책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길이므로 핵과 미사일 문제를 'only if'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다른 의제들을 충분히 다룰 수 없음. 비핵화를 장기적 비전으로 삼으면서도 인권, 개발협력, 평화체제 등 다방면의 대북정책, 외교정책을 통해 접점을 넓히기

위해 남북한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토론

- 기존 대북정책의 틀을 넘어서 신통일(neo-unification) 한반도 정책을 구상해 미래지향적·주도적 한반도 공영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행

▷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무국장 토론

-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분리, 민·관 분리,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
- 국제적인 수준과 기준에 부합하는 대북지원과 협력, 민간의 전문역량 구축이 필요

▷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토론

- 국제사회가 북핵을 포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불편한 진실'을 인정할 때가 임박. 핵무장은 북한 체제 생존전략의 핵심으로 김정은조차 건드리기 어려운 절대 성역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

❖ 국회의원 김종대·경실련 통일협회 토론회, '문재인 정부 100일, 베를린 구상 성공을 위한 진단과 제언' (8월 16일)

○ 발제 1 : 국제관계 측면에서의 진단과 제언

▷ 김준형 한동대 교수 주제발표

- 제재와 압박 일변도 전략은 북한 체제의 내구성, 한반도 주변강국의 역학, 제재 수단의 소진 등으로 인해 문제 해결에 드는 비용을 급속히 높이고 있음
- 국방력 강화와 함께 외교안보의 지렛대를 확보. 예방 공격이 아닌 예방 외교 적극 추진이 필요. 모든 채널을 동원해 가능한 모든 국가와 물밑 접촉을 시도

-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 필요. 국제제재에 참여하면서도 대화 창구로서 포지션은 굳건하게 유지

○ 발제 2 : 남북관계 측면에서의 진단과 제언

▷ 김진향 여시재 SD 주제발표

- 본질적으로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남·북 간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로 인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
- 평화의 의지를 곳곳에 나타내고 있지만, 문제는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 상황과 조건에 대한 인식의 오류, 한계 노정. 결국 상황 인식과 분석의 실패로 북측 입장에서는 우리의 대화를 받을 수 없는 내용. 결과적으로 남북대화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

▷ 이혜정 중앙대 교수 토론

- 미·중·북이 갈등할 때, 한국이 한미동맹에 묶여 있으면 중국이나 북한을 설득할 여지가 없음. 베를린 구상은 한미동맹의 군사적 관성을 승계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희망하고 있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국제정치 현실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움
-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고려 및 쌍중단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 담대한 구상과 전략을 통해 베를린 구상을 뒷받침

▷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 향후 중국은 사드 배치 철회와 북한 핵·미사일 해결의 주도권 확보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강한 압박과 동시에 사드 배치 철회, 대화·협상 복귀를 통한 쌍중단 요구 등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
-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 도발과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한·중, 미·중, 북·미 간 구조적이고 근본적 입장 차이와 대결적 구도 형성 가능성, 한반도 정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정세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

- 현재 한국이 직면한 한반도 안보정세 위험성 및 미·중관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현실적,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

▷ 박종수 GEPI 이사장(전 러시아 공사) 토론

- 베를린 구상의 실현 해법으로는 첫째, 전반적인 한반도 문제 해결은 남북한 당사자 및 주변국간 외교적 접근 병행, 둘째, 글로벌 시대에 미·중 G2 인식 공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 셋째, 신정부의 외교·통일·경제를 포괄하는 新북방정책 주력, 넷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 조건없는 대화 재개라는 단기적인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미국을 집중적으로 설득할 필요
- 대화 재개 노력과 함께 의제도 동시에 마련. 대표적인 것인 평화협정과 평화체제의 문제임. 한·미 양국은 '네 가지 NO'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을 조기에 개시하고 이를 비핵화 문제와 연동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Ⅱ. 국내 언론계 동향

1. 개관 및 특징[1)]

개관

❖ 3/4분기 언론계의 주요 내용은 △베를린 구상, 8.15 경축사, UN 기조연설로 이어지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독트린 △북한의 5번의 미사일 시험 도발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과 미국의 '화염과 분노' 발언으로 대표되는 8월 위기설 △북한의 6차 핵실험 △2번의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결의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를 중점적으로 보도

❖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집중적으로 조명

❖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화성 14형 미사일 발사에 대한 기술적 평가, 특히 대기권 재진입 기술 획득 여부에 대한 분석과 평가, 대응 방향에 대해 집중 분석

❖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화성 12형 미사일 발사, 특히 최초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기술적·정치적 의미에 대해 분석

❖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북한 6차 핵실험의 의미, 화성 12형, 14형 미사일 도발 등 북핵 능력 고도화에 따른 전술핵 도입 및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한 논란을 집중 분석

❖ 그 외 북핵 고도화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문제 집중 논의

1) 2017년 3/4분기(7월 1일~9월 30일)에 중앙일간지(조간/석간) 및 통신사 등 16개 언론사에서 보도한 통일·북한 관련 기사 내용을 주제별로 분석·정리

특징

❖ 1/4분기 언론보도의 주요 특징은 각 언론사마다 김정남 피살 관련 내용을 가장 많이 보도. 전반적 외교안보 현안 및 우리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들을 다수 소개

❖ 2/4분기 언론보도의 주요 특징은 문재인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우리의 외교안보정책 변화와 전망, 주변국의 반응을 집중적으로 보도

❖ 3/4분기 언론보도의 주요 특징은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베를린 구상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의 도전과 전망을 집중 보도

2. 언론계 동향 분석 : 주제별 언론 동향

1) 문재인 정부의 대북 · 통일정책 기조

▣ 베를린 구상과 후속조치

▣ 8.15 광복절 경축사

▣ UN 기조연설

❖ 베를린 구상

→ 문재인 대통령이 7월 6일(현지시간)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담은 '베를린 구상' 발표. '베를린 구상'의 5가지 정책방향은 ①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배제한 한반도 평화추구 ②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③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④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⑤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의 일관성 유지. 4대 제안은 ①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 제안

②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가 ③7월 27일 계기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④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대화 재개 (경향신문, 07. 07.)

- 정부는 후속조치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집에서 가질 것을 전격 제안 (한국일보, 07. 17.)
- 북한이 우리측 민간단체의 8·15 남북 공동행사 제안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도.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박명철 위원장이 광복절 기념행사를 남·북이 각자 분산 개최하자고 제안 (매일경제, 08. 03.)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남·북 외교장관이 8월 6일 의장국이 주최한 만찬을 계기로 짧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도. 강 장관은 정부의 대북제안에 북측이 호응을 하지 않고 있음을 언급. 이에 리 외무상은 대북제안은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입장을 표명 (뉴시스, 08. 07.)
-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적십자회담과 군사회담을 북핵문제와 무관한 대화로 규정,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고자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회담을 북핵문제와 분리하는 시도로 평가(서울신문, 08. 08.)

❖ 8 · 15 경축사와 대화 기조

- 문재인 대통령은 8 · 15 경축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위기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타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 또한 북한과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핵 동결’을 천명.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경우 북한의 체제 보장은 물론, 남·북 간 경제 교류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강조 (연합뉴스, 08. 15.)

-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금지선)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언급
(동아일보. 08. 18.)

-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북한과 기꺼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핵 실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언행 중단 등 3대 조건을 언급 (문화일보, 08. 17.)

- 북한의 9월 3일 핵실험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4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남·북 간 투트랙 대화 기조 차원에서 북한과 미국에 동시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
(한국일보, 09. 05.)

- 문재인 대통령은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어떤 종류의 대화도 피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적절한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 (문화일보, 09. 05.)

-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는 제재·압박 상황과는 별개”라고 언급
(한국경제, 09. 18.)

❖ 대북 지원 기조와 UN 기조연설

-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3세션 발제에서 북한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회원국들에 요청. 문 대통령은 “한국은 북한의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체계적이고 엄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제기구, 민간단체와 협력하고자 한다”며 G20 회원국들의 관심을 당부 (한겨레, 07.08.)

- 정부는 21일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800만 달러(약 90억 7000만원)를 지원하기로 결정. 다만 실제 지원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서울신문, 09. 21.)

→ 문재인 대통령은 UN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지만 평화에 방점을 두면서 “우발적인 군사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 이어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중앙일보, 09. 22.)

2) 북한의 핵 · 미사일 실험과 8월 한반도 위기설

▣ 화성 14형 미사일 1 · 2차 발사

▣ 동해로 단거리 발사체 3발 발사

▣ 화성 12형 미사일 1 · 2차 발사

▣ 6차 핵실험

▣ 8월 한반도 위기설

❖ 화성 14형 미사일 1차 발사

→ 북한은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힘. “시험발사는 북한 서북부 지대에서 최대 고각발사 체제로 진행하였으며 동해 공해상 목표수역까지 정점고도 2802㎞까지 상승하여 933㎞의 거리를 39분간 비행했다”고 발표
(연합뉴스, 07. 04.)

▷ 화성 14형 미사일 능력 평가

→ 국방부는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4일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와 비행거리, 속도, 비행시간, 단 분리 등을 고려할 때 ICBM급 사거리의 신형미사일로 평가된다”며 “지난 5월 14일 발사한 KN-17(화성-12형)을 2단 추진체로 개량한 것”으로 잠정 평가 (내일신문, 07. 05.)

-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북한의 'ICBM 발사 성공' 주장에 대해 "너무 섣부르다"며 평가절하. 중국 미사일문제 전문가 양청쥔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국제적 기준의 ICBM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 (매일경제, 07. 06.)
-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이르면 내년에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를 실전에서 타격할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 WP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북한 ICBM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 (머니투데이, 07. 26.)

▷ 화성 14형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반응과 대응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4일 북한의(ICBM 발사) 성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하지만 포괄적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확연한 입장차 노출 (한국경제, 07. 05.)
- 국회는 본회의에서 북한이 7월 4일 ICBM급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 (한국경제, 07. 06.)
- 미국이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7월 8일 전략무기인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격적으로 전개. 이들 B-1B 편대는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미 공군의 F-16 전투기와 함께 강원도 필승사격장 상공에서 북한 핵심 시설을 정밀 폭격하는 실사격 훈련 실시 (한국일보, 07. 10.)

❖ 화성 14형 미사일 2차 발사

- 북한은 "28일 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서 "화성-14형은 최대 정점고도 3724.9㎞까지 상승하며 거리 998㎞를 47분12초간 비행하여 공해상의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29일 주장. 북한은 '화성-14형'을 차량형 이동식발사대(TEL)로 옮겨 지상 발사대에 거치한 뒤 쏜 것으로

확인. 북한이 보여준 방식은 이동식발사대를 보호할 뿐 아니라 이동식발사대로 미사일 추가 발사를 시도할 수 있어 전술적으로도 이점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연합뉴스, 07. 29.)

▷ 화성 14형 2차 미사일 능력 평가

→ 러시아 국방부는 28일 오후 5시40분(평안북도) 동창동 훈련장에서 발사된 미사일 비행자료는 IRBM의 전술·기술적 특성에 부합한다고 발표. 러시아의 평가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ICBM급이라고 밝힌 한국·미국 정부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인 것. 미사일 발사 장소 역시 동창리(동창동) 미사일 발사장이라고 주장해 자강도 무평리 일대로 규정한 한·미 당국과 이견 (세계일보, 07. 31.)

▷ 화성 14형 2차 발사에 대한 반응과 대응

→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지 9분 만에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29일 오전 1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양국 군은 29일 동해안에서 '현무-2' 등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 또 정의용 안보실장은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을 현행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안을 미국에 제시. 이와함께 청와대는 배치 절차가 중단됐던 사드 발사대 4기를 경북 성주군 사드 부지에 임시 배치 결정 (조선일보, 07. 31.)

→ UN 안전보장이사회는 8월 5일(현지 시간)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 철광석, 납, 연광석, 수산물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을 제한하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15개국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 또 결의를 위반한 북한 선박의 입항과 북한과의 신규 합작사업 및 투자를 금지했고, 북한 외환을 관리하는 조선무역 은행을 비롯해 금융기관 4곳과 개인 9명을 제재 명단에 포함. 유엔은 이번 조치로 북한의 연간 수출액(28억 달러)의 3분의 1 수준인 10억 5000만 달러(약 1조1800억 원)의 외화 유입이 차단될 것으로 전망. 다만 미국이 강력히 요구했던 '원유 공급 금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에서 제외 (동아일보, 08. 07.)

❖ 북한, 동해로 단거리 발사체 3발 발사

→ 합동참모본부는 26일 “북한이 오전 6시 49분경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북 방향의 김책 남단 연안 동해상으로 불상의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힘. 북한이 쏜 발사체는 모두 3발로, 이들 가운데 첫 번째와 세 번째 발사체는 200㎞ 이상 비행했으나 두번째 발사체는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추정 (연합뉴스, 08. 26.)

❖ 화성 12형 미사일 1차 발사

→ 합동참모본부는 8월 29일 5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 탄도미사일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상공을 지나 발사 지점에서 약 2700㎞ 떨어진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으며,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550여㎞로 파악. 이는 탄도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발사한 것으로 대기권 재진입(re-entry) 기술을 처음으로 실전적 환경에서 시험한 것으로 평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일 가능성이 크다는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 (연합뉴스, 08. 29.)

▷ 화성 12형 미사일 능력 평가

→ 국정원은 순안비행장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설명. “비행장 아스팔트 위에서 발사하면 기동성이 빨라지고, 비용문제도 절감할 수 있다”면서 “김정은 입장에선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했다”고 분석 (서울신문, 08. 30.)

→ 미군 폴 셀바 합동참모본부 차장(공군 대장)은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이 미국을 사정거리에 두는 미사일을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핵무기를 싣고 미국을 정확하게 조준해 타격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췄다는 점은 아직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 (중앙일보, 08. 31.)

▷ 화성 12형 1차 발사에 대한 반응과 대응

→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힘 (연합뉴스, 08. 29.)

- 미국은 북한의 '화성-12형' 발사 이틀만인 31일 F-35B 스텔스 전투기 4대와 B-1B 전략폭격기 2대를 동시에 한반도에 출격시켜 폭탄투하 훈련을 하는 강력한 억제력을 과시. 특히 이들 전략무기는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4대와 첫 연합항공차단 작전을 수행 (문화일보, 09. 01.)
-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대북 옵션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면서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선택 방안이 분명히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 (경향신문, 09. 01.)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비판 (동아일보, 09. 29.)

❖ 6차 핵실험

- 북한은 9월 3일 오후 12시 30분(평양시간 12시)께 핵실험을 감행. 이날 오전 6시 30분(평양시간 6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핵무기 병기화사업 현지지도를 보도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수소탄 등의 사진을 공개한지 6시간 만에 핵실험을 진행 (연합뉴스, 09. 03.)
- 북한이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탄두로 장착할 '수소탄'을 개발하기 위해 단행한 6차 핵실험에서 성공했다"고 주장. 북한 핵무기 연구소는 실험한 핵무기를 '2단 열핵무기'로 언급하고 '분열 기폭 및 고온 핵융합 점화' 등의 표현을 사용 (연합뉴스, 09. 03.)

▷ 6차 핵실험 능력 평가

- 군 전문가들은 이번 규모 5.7의 핵실험 폭발위력을 50kt(1kt은 TNT 1천t) 정도로 평가. 지난해 5차 핵실험 때보다 5배 이상 큰 폭발위력 (연합뉴스, 09. 03.)
- 북한의 핵실험 폭발력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제시. 미국 정보기관들은 140kt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매트가 6일(현지시간) 보도. 노르웨이지진연구소(NORSAR)는 120kt을, 중국과학기술대학 지진 실험실 원롄싱(溫聯星) 교수

연구팀은 108kt을 제시했으며, 일본 정부는 당초 70kt에서 120kt으로 수정후 160kt으로 상향, 한국 국방부는 50~70kt의 당초 추정치를 고수 (연합뉴스, 09. 07.)

-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따른 지진 규모 추정치들이 잇따라 상향 조정됨으로써 폭발력 추정치 역시 250kt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12일(현지시간) 보도.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LANL)의 핵실험 전문가 프랭크 파비안 등 연구원들이 풍계리 만탑산 북쪽 갱도의 제어·지탱 가능한 폭발력을 최대 282kt이라고 계산한 것에 근접 (연합뉴스, 09. 13.)

▷ 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반응과 대응

- 중국 외교부는 "북한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함과 동시에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 3일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 등 중요 외교 행사가 있는 와중에도 지난달 26일과 2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때와 달리, 즉각 성명을 발표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경한 어조로 비판 (한국경제, 09. 03.)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청와대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 "이번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제 평화 안정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 (조선일보, 09 .04.)
-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보회의(NSC)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전멸(total annihilation)을 바라지 않는다" 면서도 미국이 군사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논의했음을 암시 (동아일보, 09. 04.)
-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해군 대장)은 5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한 자산을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고 밝힘. 스콧 사령관이 언급한 전략자산은 항모 강습단, 원정강습단, 이지스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잠수함 전력, F-35(스텔스 전투기), P-8(해상초계기), MH-60R(해상작전헬기) 등 (아시아경제, 09. 05.)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9월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 제재안의 주요 내용은 유류공급제한, LNG, 콘덴세이트 대북 수출 전면금지, 제재 대상 추가, 해상 검색 및 차단, 북한 해외노동자 제한, 북한과 합작 사업 설립 · 유지 · 운영 전면 금지 등을 포함
(한국일보, 09. 12.)

❖ 화성 12형 2차 미사일 발사

→ NHK는 15일 새벽 북한이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 일본 홋카이도를 통과해 태평양 쪽으로 비행한 것으로 보도. NHK는 홋카이도(北海道), 아오모리(青森), 이바라키(茨城)현 등에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럿)을 통해 이같이 정보가 통보됐다고 보도
(연합뉴스, 09. 15.)

→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 '화성-12형'의 발사 영상과 사진을 공개. 영상과 사진에는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그대로 발사되는 장면을 포함. 이런 방식은 지상 거치대에 세워 쏜 지난 시험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실전배치 준비가 완료됐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
(서울신문, 09. 16.)

▷ 화성 12형 2차 미사일 능력 평가

→ 북한이 15일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3700㎞로, 지난달 29일 시험 발사 때보다 비행거리가 1000㎞ 증가.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일본 방위성의 발표를 종합하면, 북한 미사일은 아침 6시 57분 발사돼 19분간 비행한 뒤 일본 홋카이도 에리모곶 동쪽 약 2200㎞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으며, 정점고도 770㎞로 괌타격 능력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 (한겨레, 09. 15.)

▷ 화성 12형 2차 발사에 대한 반응과 대응

→ 미국 본토에 주둔하는 포병부대가 9월 21일 한반도에 신속하게 전개해 장거리에 있는 적을 정밀타격하는 실사격 훈련을 실시
(조선일보, 09. 21.)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돈줄을 전방위적으로 죄는 행정명령에 서명. 미 재무부는 북한과 무역 관련 거래를 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직접 제재 가능. 또한 북한에 다녀온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180일 동안 미국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운송 제재도 포함 (중앙일보, 09. 22.)
-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 랜서가 북한의 동해 국제공역에서 비행하는 무력시위를 펼쳤다고 미 국방부가 23일 (현지시간) 공개. 다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21세기 들어 북한 해상으로 날아간 미군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통틀어 이번이 휴전선(DMZ) 최북쪽으로의 비행"이라고 언급 (국민일보, 09. 22.)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북한 은행 10곳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가까운 무더기 제재 조치를 시행 (연합뉴스, 09. 27.)

❖ 8월 한반도 위기설 확산

▷ 미·북 지도자 간 말대말 대결

- 북한은 8월 7일 발표한 '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준열히 단죄·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발표 (조선일보, 08. 07.)
- 북한의 탄도미사일 운용부대인 전략군은 9일 미국을 향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로 괌 포위사격을 위한 작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 (서울신문, 08. 09.)
-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솔직히 말해 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경향신문, 08. 09.)

- ㅋ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대화는 답이 아니다”고 언급. 북한과 대화 효용성을 아예 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조선일보, 08. 31.)
- ㅋ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북한에 군사행동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날은 북한에 아주 슬픈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 (경향신문, 09. 06.)
- ㅋ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타락한 정권”, “깡패 국가(rogue state)”로 지칭하며 원색적으로 비난. 특히 불가피하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발언 (한겨레, 09. 20.)
- ㅋ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미국의 대북 강경발언에 대해 “개 짖는 소리”라고 강하게 비난 (동아일보, 09. 21.)
- ㅋ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2일 본인 명의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늙다리 미치광이”, “깡패”라고 하며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발표 (조선일보, 09. 22.)

▷ 전술핵 재배치 논란

- ㅋ 토머스 버거슨 미 7공군사령관은 9월 7일 “미국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 버거슨 사령관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핵우산이 충분하다”고 부연 (코리아헤럴드, 09. 07.)
- ㅋ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핵무기 보유로 북한에 대응하게 되면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할 수 없고, 동북아의 핵무장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고, 전술핵 재배치 반대 의견을 공식화 (한국경제, 09. 17.)
- ㅋ 자유한국당은 17일 “방미 대표단이 워싱턴D.C.를 방문, 미국 행정부 및 의회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안보위기상황과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미 국무부 등은 이러한 요구에 사실상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 (한국경제, 09. 17.)

3) 북한 동향

▣ 북한 정치 동향에서는 이설주의 공식무대 재등장, 김정남 관련 뉴스, 북한의 핵무기 개발자들에 대한 우대 등을 집중 보도

▣ 북한 외교 동향에서는 북·중관계의 악화 속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말레이시아 및 이란 등 제3세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속에서 미국과의 물밑접촉 시도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

▣ 북한 경제 동향에서는 중국 및 러시아 등 북한의 주요 거래국과의 교역 규모와 교역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제재 효과를 중점적으로 보도

▣ 북한 사회 동향에서는 북한 가뭄 피해와 평양 거주민 축소,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인기 피서지, 핸드폰 사용, 미니소 열풍 등 변화하고 있는 북한사회의 양상에 대해 보도

▣ 인권과 인도적 문제 동향에서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UN, 미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스위스 등의 북한에 대한 식량, 약품 등의 인도적 지원 현황과 인권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

북한 정치 동향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인력, 이설주의 공식무대 재등장, 김정남의 스위스 망명시도설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

→ 김일성 사망 23주기 금수산 참배 시 김정은 위원장 좌우에 미사일 개발 4인방(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창하 국방과학원 원장, 전일호 당 중앙위 위원)이 포진. 이들은 모두 차관급으로 북한의 2인자 최룡해 당 부위원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앞 열 맨 끝자리에 위치. 장창하 원장은 중장(별 2개)에서 상장(별 3개)으로 한 계급 승진한 것으로 확인 (조선일보, 07. 10./연합뉴스 07. 11.)

→ 7월 10일 '화성-14형' 발사 성공을 자축하는 연회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참석. 임신설, 불화설이 있었던 리설주가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 3월 2일 김 위원장과 함께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아 원아들과 함께 식수행사를 한 이후 131일 만임 (세계일보, 07. 12.)

- 영국 BBC가 8월 14일 방영한 다큐멘터리 '북한-가족 내(內) 살인'에 김정남이 다녔던 스위스 제네바 국제학교의 친구들이 출연하여 김정남이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암살되기 전 유럽의 스위스로 망명을 원했다고 증언. BBC는 김정은 정권이 말레이시아와의 외교관계 단절 가능성까지 무릅쓰면서 김정남 암살에 나선 것은 김정남의 유럽 망명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분석 (중앙일보, 08. 15.)
- 언론 보도와 정부 성명으로 핵실험 성공을 발표한 과거 사례와 달리 6차 핵실험 직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 사진을 공개(김정은,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이는 통치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과 동시에 핵실험이 김정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으로 결정했다는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김정은의 정치적 부담을 낮추고 핵실험 결정의 정당성을 견고히 다지려는 목적 (동아일보, 09. 04.)
-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핵개발 주역은 홍승무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리홍섭 핵무기연구소 소장. 이들은 6차 핵실험 직전 이뤄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핵무기 병기화 사업 현지지도를 수행. 정부 관계자는 "노동당 군수공업부의 핵무기 담당인 홍승무가 총사령탑이라면 2인자 격인 리홍섭은 실무 책임자"라며 "두 사람은 핵 개발 분야의 최고 핵심"이라고 평가 (국민일보, 09. 05.)

북한 외교 동향

❖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한 가운데 러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등과 관계 개선과 미국과의 물밑접촉 시도를 중점적으로 보도

- 중국과 냉랭한 관계를 이어가는 북한이 19일 북·러 공동선언 채택 17주년을 맞이해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적극적으로 강조. 노동신문은 "조·러 공동선언은 21세기 조·러 친선협조 관계의 발전을 적극 추동한 역사적인 문건"이라고 공동선언에 의미를 부여

(헤럴드경제, 07. 19.)

→ 조선중앙방송은 이란을 방문하고 있는 류명선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세예드 메흐디 줄라이 이란이슬람교연합당 제1부총비서 사이의 회담을 공개. 이슬람연합당 관계자는 과거 김일성과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만남을 상기시키며 "이란 인민은 조선 인민과 함께 미국과 서방의 고립·압살 책동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매일경제, 07. 20.)

→ 미국과 북한의 외교 라인이 수개월 간 비밀 접촉을 해오고 있다고 AP 통신이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 양국 간 대화 통로는 미 국무부의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박성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로 윤 특별대표와 박 차석대사의 접촉이 정기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설명 (세계일보, 08. 12.)

→ 북한이 말레이시아 조호르 주의 왕세자인 이스마일 이드리스에게 자국 영공을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권리를 선사. 말레이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것으로 평가 (매일경제, 09. 20.)

→ 북한 정부 관리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들을 이해하기 위해 여당인 공화당과 끈이 있는 전문가들과 은밀한 접촉을 추진해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 (조선일보, 09. 27.)

→ 북한 외무성 최선희 북아메리카 국장이 29일(현지시간)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러시아 외무부 특임대사와 회담. 러시아는 회담에서 최 국장에게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것을 설득했을 것으로 관측 (중앙일보, 09. 30.)

북한 경제 동향

❖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집중적으로 보도

→ 워싱턴포스트는 10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가운데서도 아프리카 남부의 일부 국가들이 여전히 북한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 북한은 나미비아의 대통령궁, 국방부 청사 군수품 공장 건설을, 에리트레아에 군사 무선설비를, 콩고에 자동화기를 각각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앙골라와 우간다에는 군사 훈련교관을 파견 (세계일보, 07. 12.)

-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와 국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작년 3.9% 성장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년에 비해 3.9%P 증가 (동아일보, 07. 21.)
- 북한을 찾는 관광객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측과는 달리 북한은 연간 4000~4500명 정도의 서양 관광객을 유치.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절대다수인 95% 정도는 중국인이라고 보도 (매일경제, 07. 26.)
- 도쿄신문은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이미지 하락과 비자취득 요건 강화의 영향으로 중국의 북한 식당들이 심각한 영업난에 빠졌다고 보도. 도쿄신문에 따르면 올해 봄 이후 중국 당국의 북한 여성에 대한 예능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졌으며, 과거에는 묵인되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 북경 시내에 있는 십 수 개의 북한 식당 중 몇 곳은 조만간 폐점할 것으로 예상 (연합뉴스, 07. 27.)
- 3일 베이징 소식통과 코트라 등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무역 중 국별 의존도는 2016년 중국이 92.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2014년(90.2%), 2015년(91.3%)에 이어 3년 연속 90%대를 유지. 주목할 대목은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처음으로 50%를 넘었던 2005년(52.6%) 이래 지속해 늘고 있다는 점 (경향신문, 08. 08.)
-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돈줄'이 막히자 한국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광범위한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 북한은 지난 2012년부터 가상 화폐를 확보해 왔으며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2013년부터 매달 확보한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가치는 약 30만 달러(3억 3000만원)인 것으로 추산 (동아일보, 08. 24.)
- VOA는 러시아 연방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액이 약 6100만 달러(69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

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 양국 교역액인 3500만 달러보다 72.9%P 증가한 액수 (뉴데일리, 08. 24.)

→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작성한 중간보고서(작년 11월 제재결의 관련)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뒤 석탄 수출 대상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으로 변경했는데, 작년 12월~지난 5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수출이 금지된 석탄과 철광석 등의 자원을 해외에 판매해 최소한 2억 7157만 달러(약 3073억 원)의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 (헤럴드경제, 09. 05.)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한 여파로 평양의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휘발유 소매가는 최근 두 달 사이에 20% 정도가 올라간 것으로 AFP가 평양에서 확인 (연합뉴스, 09. 23.)

→ 일본 산케이신문은 1~8월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22억 8241만 달러(약 2조 5752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25.3%나 증가했다고 전하며,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대북제재에는 핵심이 빠졌다고 지적 (아시아투데이, 09. 24.)

→ 26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의 국가별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8월 북한으로부터 1억 3814만 달러 규모의 163만 6591t의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분석. 중국 상무부는 2월 19일 이후 5개월 만에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재개 (연합뉴스, 09. 26.)

북한 사회 동향

❖ 북한 가뭄 피해와 평양 거주민 축소,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인기 피서지, 핸드폰 사용, 미니소 열풍 등 변화하고 있는 북한사회의 양상에 대해 보도

→ 지난해 한국에도 진출한 저가형 생활용품 연쇄점인 '미니소'가 4월 북한 평양에 첫 매장을 열었으며,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 특권층이 이 매장에 열광하고 있다고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보도 (매일경제, 07. 03.)

- 북한이 지난해 4월 중국 내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을 계기로 해외 파견근로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 지방에서의 모집을 중단하고 평양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 (뉴데일리, 07. 19.)
- 북한 전역에 걸쳐 올해에만 이미 10여 곳에 동상이 세워지는 등 김일성·김정일 동상 건립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 (중앙일보, 08. 04.)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260여만 명에 달하는 평양시 인구를 200만 명으로 감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16일 보도.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 시민에 대한 식량 배급이 어려워지자 인구를 줄여서라도 평양 시민에게만은 배급을 계속하기 위한 김정은의 불안심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 (조선일보, 08. 16.)
- 미국의 비영리 인구통계연구소인 인구조회국(PRB)에 따르면 북한 인구는 2017년 현재 255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40만 명 증가했으며, 2050년에는 26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고 발표. PRB는 북한의 인구증가 추세가 2030년을 정점으로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북한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경향신문, 08. 16.)
-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에서 마약류 거래가 북·중 접경은 물론 도시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자들에 엘리트층이 포함됐을 정도로 광범위한 확산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북한 정부기관의 강연기록을 인용 보도. 작년 5월 A시에서 마약밀매로 적발된 사람은 200명, 주변 지역까지 합치면 그 수가 500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마약거래에 가족과 친척이 당과 사법기관의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많다”고 적시 (헤럴드경제, 08. 23.)
- 북한 인구 7명 중 1명꼴인 377만 명이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지만, 데이터전송과 인터넷이 금지돼 있어 주로 사진촬영과 동영상 보기 등 오락용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분석 (연합뉴스, 08. 30.)
- 북한 주민 사이에 9월 3일 핵실험 이후 “핵실험 관여하면 원인불명의 귀신병에 걸려 돌연사 한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나돈다고 아사히신문을 인용 보도 (서울신문, 09. 10.)

인권과 인도적 문제

❖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UN, 미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스위스 등의 북한에 대한 식량, 약품 등의 인도적 지원 현황을 집중적으로 보도

▷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어린이와 여성 등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 지표 조사를 2009년 이후 8년만에 시작 (뉴스 1, 07. 04.)
- 말레이시아의 의료 구호단체 '머시 말레이시아'(Mercy Malaysia)의 암란 마잔 사무국장 대행은 이달 말 함경북도 지역 병원과 의료기관에 구급차 여러 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언 (연합뉴스, 07. 04.)
- 12일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가 주관한 아시아 인권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대북제재와 별도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고 증언 (자유아시아방송, 07. 13.)
- 유엔인구기금(UNFPA)이 북한에 대한 5개년 지원계획을 마련. 1천만 달러를 투입해 생식보건 분야를 지원하고 인구 동태 파악에 주력할 계획 (조선일보, 07. 15.)
-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내년도 대북지원 예산을 5300만 달러(약 601억여 원)로 책정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 프랑스는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유엔의 사업에 미화 28만 달러를 추가 지원 (연합뉴스, 08. 16.)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은 가뭄 피해에 대응해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에 630만 달러를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 아일랜드는 올들어 북한의 가뭄과 홍수 피해복구 지원비 600만 달러를 지원 (연합뉴스, 08. 19.)
- 북한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지난 7월 북한에 지원한 식량 규모가 올 상반기 평균 지원 양에 비해 10% 감소. 이는 매달 1백만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세계식량계획의 목표치에도 크게 미달 (연합뉴스, 09. 07.)

- 캐나다 구호단체가 최근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메주콩을 지원. 이 단체는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에 미량 영양소 720만 포와 메주콩 200t을 지원 (연합뉴스, 09. 13.)
- 유니세프가 북한 어린이는 정치와 무관하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호소. 카린 홀쇼프 유니세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사무소장은 20일 성명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지극히 현실적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시급하다”고 호소 (중앙일보, 09. 21.)
-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를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비공개로 유엔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기구 관계자들을 만나 대북지원을 호소 (조선일보, 09. 25.)

❖ 인권문제 등

- 북한은 9일 20여 년간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펼치던 캐나다 한인 교회 임현수 목사를 석방. 임 목사는 2015년 1월 방북 당시 갑자기 체포된 뒤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으로 복역 (경향신문, 08. 09.)
-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생사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청원하기로 의결 (문화일보, 09. 12.)
-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USB 드라이버,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등 정보유입 기기를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이 미국 연방하원을 통과 (세계일보, 09. 26.)

Ⅲ. 해외 동향

1. 개관 및 특징[1)]

개관

❖ 3/4분기 해외지역 통일·북한 여론의 주요 관심 주제는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평가,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정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등

❖ 북한의 미국 위협과 미국의 대북 군사제재 가능성 검토로 촉발된 이른바 '한반도 위기설'이 국제사회에 확산

→ 미국과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 여론 고조

→ 중국과 러시아의 여론 논조는 북한을 비난하면서도, 대북 군사제재에는 반대

특징 및 전분기와의 비교

❖ 3/4분기 해외여론의 특징은 북한과 미국의 말폭탄 교환이 격화됨에 따라, 2/4분기 때보다 한반도 위기론이 더욱 고조

❖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 특히 원유 공급 중단, 북한 노동자 고용 중단 등 중국의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동참을 촉구하는 여론 확산

1) 2017년 3/4분기(7월 1일~9월 30일)에 통일·북한 관련 주요 해외 여론조사, 언론 보도, 국제사회 의견 및 국제학술회의 등 정리

❖ 또한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위기관리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외교를 전개한 것에 관심

2. 해외 동향 분석

1) 여론조사

❖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북한 위협에 대한 여론조사 공표 (7월 12일)

→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와 공동으로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

→ 미국인의 40%가 '북한'을 미국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 (테러조직 '대쉬(ISIS)'는 30%, 러시아는 16%)

→ 응답자의 49%가 '북한 김정은의 도발에 대응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타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3%는 '지상군을 파병해 동북아 지역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응답

→ 그러나 응답자의 78%는 미국의 '군사적 행동'보다 '외교적 수단을 활용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응답

❖ 미국 NBC 방송과 워싱턴포스트, 북한 위협 관련 여론조사 공표 (7월 19일)

→ 미국 NBC 방송과 워싱턴포스트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74%가 미국과 북한의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

→ 응답자의 81%는 북한을 미국의 위협으로 간주 (북한의 1차 핵실험 (2006년) 전인 2005년 조사 때보다 12%P 상승)

→ 응답자의 63%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해결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응답 (정치 성향별로는 공화당 지지층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우세)

❖ 일본 겐론NPO, 동아시아연구원과 공동으로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 결과 발표 (7월 21일)

- ㅋ 겐론NPO는 동아시아연구원과 공동으로 '제5회 한일 국민상호인식 조사' 발표
- ㅋ 동아시아연구원과 겐론NPO는 미국외교평의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가 주관하는 25개국 싱크탱크평의회(CoCs: Council of Councils)의 창립기관으로서 2013년부터 매년 한·일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수행
- ㅋ 동 조사에 의하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와 관련 일본인의 42.7%가 '미국 등에 의한 군사적 행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응답
- ㅋ 일본인 응답자의 25.6%가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꼽았고, 21.0%는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
- ㅋ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 기관이 '제5회 한일미래대화'를 일본 도쿄에서 개최(7월 28~29일)하였고,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일본연구센터 소장, 쿠도 야스시 겐론NPO 대표 등 참석

❖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와 CBS방송, 미국의 북핵 대응과 관련된 여론조사 공표 (8월 7일, 8일)

- ㅋ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공표(8월 7일)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2%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 (2015년 조사에서는 47%)
- ㅋ 응답자의 75%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 (2015년에는 55%)
- ㅋ 대북 경제제재에는 응답자의 76%가 찬성했으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과 기업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68%가 찬성
- ㅋ 그러나 북한 핵시설 공습에는 응답자의 40%만이 지지했고, 북한 핵시설 파괴를 위해 미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28%만이 찬성

- 미국 CBS 방송이 8월 8일 발표한 북한 관련 여론조사(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 결과에 의하면, 미국인의 72%가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
- 응답자의 35%만이 북핵문제를 다루는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을 신뢰하고, 61%는 우려
- 응답자의 60%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한 반면, '지금 군사행동을 필요로 하는 위협'이라는 응답은 29%에 불과

❖ 미국 CNN 방송과 워싱턴포스트, 북핵 위협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9월 21일, 23일)

- 미국 CNN이 수행한 여론조사 발표(9월 21일)에 의하면, 미국 국민의 50%가 북한을 '절박한 위협'으로 간주 (4월 여론조사 때는 37%)
- 응답자의 58%는 '외교 및 경제제재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군사적 수단 선택'을 지지
- 63%가 '군사적 수단은 다른 나라들의 지원과 참여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미국의 일방적 결정만으로 군사 행동에 나서도 좋다'는 응답은 29%에 불과
-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ABC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 발표(9월 23일)에 의하면, 응답자의 70%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
- 대북 선제공격에 대해서는 67%가 '북한이 먼저 공격했을 때만 공격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미국이 먼저 북한에 군사공격을 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친 것으로 조사

2) 언론 보도

❖ 중국 언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독일 정상회담 대대적 보도 (7월 7일)

- 중국 언론이 독일 한·중 정상회담(7월 6일) 시 양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철저한 이행에 합의했음을 대대적으로 보도
- 정상회담 시 한국 측이 제기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론에 대해 환구시보는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중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주장
- 환구시보는 1/4분기 북·중 무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37.4%P 증가된 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전체적으로는 북·중 무역이 감소되는 추세라고 주장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CNN, 중국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 보도 (7월 24일)

- 월스트리트저널과 CNN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중국군의 대비태세 강화를 집중 보도
-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1415Km에 걸친 북·중 국경 지역의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
- 또한 미국 전직 국방정보 담당 고위 관리의 "중국의 급변사태 준비태세가 단순한 국경안보 차원을 넘는다"는 발언을 인용 보도
- CNN은 중국 칭화대 국제정책센터 자오통 연구원의 "중국이 한반도에 점증하는 긴장과 군사적 충돌 위기 때문에 군사 비상계획을 확대하고 있다"는 발언 보도
- 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루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7월 25일)에서 중국군이 북·중 국경지역에서 정상적인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

❖ 미국 블룸버그통신, 대북 경제제재에 관한 러시아의 입장 조명 (7월 26일)

- 블룸버그통신은 러시아가 미국보다 북한과의 우호가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

-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유람선이 5월부터 운항을 시작했으나 적자 경영 상황
- 블룸버그통신은 또한 러시아의 북한 전문가 게오르기 톨로라야의 "러시아가 미국 편에 서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은 러시아의 이해에 어긋난다"는 발언과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국가는 없다"는 알렉산데르 가부에프의 발언을 인용 보도
- 아울러 미국이 러시아에게 3만~5만 명의 북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

❖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검토 보도 (8월 5일)

-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하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여부를 조만간 공식 검토할 것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
- 보도에 의하면, 방위성은 향후 1년 간의 검토를 걸쳐 결론을 도출하고 2018년 말 확정하는 방위대강에 관련내용을 삽입할 계획

❖ 동남아 주요 언론, 북한 핵도발 관련 아세안의 입장 보도 (8월 6일)

- 동남아시아 주요 언론들이 북한에게 미사일 및 핵 도발 중단을 요구한 아세안 외무장관 성명을 집중 조명하고, 아세안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올바른 행보라고 평가
- 태국 유력 일간지 방콕포스트는 아세안이 북한의 도발에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고 아세안 외무장관 성명을 평가하고, 아세안이 1980년대 베트남-캄보디아 전쟁 이후 처음으로 국제 위기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견해를 밝혔다고 논평
- 싱가포르 일간 더 스트레이트타임즈도 아세안이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
- 인도네시아 일간 자카르타 포스트는 올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집중 논의할 것이며, 미국이 아세안

국가에게 북한과의 통상관계를 대폭 줄이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

- ㄴ 말레이시아 일간 뉴스트레이츠타임스도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이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의 합의 도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

❖ 미국 워싱턴포스트, 북한이 대 중국 석탄 수출의 이익으로 무기개발을 했다고 보도 (8월 6일)

- ㄴ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북한이 석탄수출을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을 활용해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고, 이익금으로 무기개발을 했다고 보도
- ㄴ 동 매체는 "중국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북한 기업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한다는 것은 우스운 거짓말이고 북한에는 진정한 민간 산업이 없다"는 전 미 의회 자문관 조슈아 스탠턴의 발언 인용

❖ 영국 언론 더선, 북한이 괌 공격 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도 (8월 10일)

- ㄴ 영국 언론 더선(The Sun)은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미국령 괌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시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보도
- ㄴ 동 매체는 일본이 2016년 안보법을 제정하여 동맹국 미국이 공격받을 시 집단자위권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
- ㄴ 이는 일본의 점증하는 군사적 역할을 드러내며, 기존의 전수방위 개념에서 역행하는 것이라고 논평

❖ 중국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 북한의 괌 포위사격 검토에 분명한 반대 입장 표명 (8월 11일)

- ㄴ 중국 환구시보는 '한반도의 극단적인 게임이 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괌 포위사격으로 미국과 북한 간 전쟁이 촉발되면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북한에게 경고

- 아울러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타격으로 북한정권의 전복을 시도한다면, 중국은 이를 결연히 막을 것이라고 공언
- 글로벌타임스도 동일하게 미국과 북한과의 전쟁이 북한의 공격으로 초래된다면 중국은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으로 촉발된다면 북한을 수호할 것이라고 보도
- 환구시보의 논평에 대해 일본 산케이신문은 사설(8월 12일)을 통해 중국이 표면적으로 중립을 운운했지만, 사실상 북한이 괌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대립 시 중국이 북한 편을 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8월 12일)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중국 내 북한 근로자 실상 보도 (8월 17일)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2017년에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에 3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보도
-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7000명을 넘었다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파견된 북한 간부 소식통 인용(중국 전역에는 현재 약 3만 명 정도라고 추정)
- 북한 노동자 대부분은 옷 · 신발 · 식료품 가공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장에서 근무

❖ 중국 글로벌타임스, 호주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 요구 비난 (9월 2일)

- 호주 턴불 총리가 중국이 대 북한 석유공급을 중단하여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8월 31일)
- 글로벌타임스가 호주 총리의 발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조차 공개적으로 이를 요구한 적 없다”고 성토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중국 대학의 북한 유학생 입학 쿼터 제한 보도 (9월 20일)

-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중국의 대학들이 북한 출신 유학생에 대한 입학 쿼터를 줄이고 있다고 보도

- 보도에 의하면 중국 내 다수의 대학이 북한 학생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는데, 특히 핵무기와 관련된 물리학과 분야의 쿼터는 대폭 축소
- 기존 학생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학금 신청 불허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량 증가 보도 (9월 28일)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중국 해관총서를 인용하여, 7월~8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이 2016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도
- 특히 중국 옥수수, 밀 등의 대 북한 수출이 급증하였는데, 북한으로의 곡물 수출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서 제외
-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지 않는 한 북한과의 무역을 중지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랜트 뉴스햄 일본포럼 선임 연구원의 발언 인용

3) 국제사회 동향

❖ 토마시 대주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촉구 (8월 11일)

- 실바노 토마시 대주교(제네바 주재 유엔 교황청 전임 대사)가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대결을 피하기 위해 대화와 포괄적 협상 촉구
- 토마시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화를 항상 강조했다고 언급하고, 모든 관련 대상국이 협상을 통한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

❖ 호주 정계, 북한이 미국 공격 시 호주의 미국 지원 여부로 논쟁 (8월 12일)

- 호주 턴불 총리가 한반도 상황이 외교적, 경제적 수단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하지만,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호주는 미국과의 동맹조약을 발동하여 미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턴불 총리의 발언에 대해, 녹색당 리차드 나탈리 당수는 턴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는 것으로 호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
- 그러나 제1야당인 노동당은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접근하겠다며 녹색당 비난
- 호주 연방하원은 줄리안 리서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호주협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대북 규탄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8월 14일)

❖ 유럽연합,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북한 대응책 논의 (8월 14일)

- 유럽연합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의거하여, 북한 국적자 9명과 단체 4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 (8월 10일)
- 유럽연합이 북한문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치·안보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8월 14일)하였는데, 유럽연합이 유럽 외의 문제로 긴급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례적

❖ 필리핀·일본·호주 자국민 대피 계획 수립 검토 (9월 9일)

- 필리핀 실베스트르 벨로 3세 노동고용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반도 상황이 악화될 경우 한국 내 자국 근로자를 대피시킬 계획이 있다고 언급
- 일본도 6만 명에 가까운 자국민의 대피를 위해 대피방안 마련에 부심 중이라고 닛케이신문이 보도
- 호주 턴불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유사시 한국 등 동북아에 거주 또는 여행 중인 호주 시민을 피난시킬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발언

❖ 영국 국방장관, 북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촉구 (9월 10일)

- 마이클 팰런 영국 국방장관이 BBC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미국 로스앤젤레스보다 런던이 북한에서 더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

- 팰런 장관은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려
- 팰런 장관은 영국이 군사적 갈등보다는 외교적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

❖ 스페인, 북한 대사 추방 행렬에 동참 (9월 18일)

- 북한 핵 및 미사일 실험을 규탄하기 위해 멕시코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의 추방을 결정(9월 7일)하고, 쿠웨이트, 페루도 이에 동참(9월 11일)
- 남미와 중동에 이어 스페인도 유럽 최초로 자국 북한 대사 추방을 명령 (9월 18일)
- 대사 추방까지는 아니나 필리핀은 대북 무역 중단을 발표하였고, 태국은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대폭 축소

❖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보고서, 북·미 전쟁 불가피 주장 (9월 29일)

- 말콤 차머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K) 부 사무총장은 보고서에서, 북한 핵·미사일의 급속한 고도화를 고려할 때 미국이 북핵 문제를 더 늦기 전에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 북한과 미국의 일방에 대한 선제타격은 확전으로 이어지며,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십만 명의 사망자 발생
-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더 타임지가 동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보도

4)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등

❖ 중국 연변대학교, 세종연구소와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 (7월 6일)

- 연변대학교 조선반도연구원이 세종연구소와 공동으로 '동북아 평화 공영과 한·중관계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 회의의 주요 주제는 미국과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 정세, 북한 경제의 변화와 남·북·중 경제협력 전망,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중 협력 방향 등
- 박준우 세종연구소 이사장,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두안카이 길림성정부 동아시아 연구소장, 담홍매 길림사회과학원 조선한국연구소 부소장, 박동훈 연변대학 교수 등 참석

❖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북핵 위협관련 세미나 개최 (7월 10일)

- 미국 우드로윌슨센터는 '북한: 되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었는가?'를 주제로 세미나 개최
-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 미국의 대(對) 북한 가용 선택지, 북한이 미국이 설정한 금지선을 넘었는지 여부 등 토론
- Jane Harman 윌슨센타 소장, Aaron David Miller 윌슨센터 부소장, James Person 윌슨센터 국장, David Sanger 뉴욕타임즈 기자, Jean H. Lee 전 AP 평양 특파원 등 참가

❖ 미국 워싱턴 소재 주요 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전략대화 개최 (7월 11일~12일)

- 미국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주제로 워크숍 개최 (7월 11일)
- Bruce Klinger · Dean Cheng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위원, 이규창 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 참석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통일연구원과 동일한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7월 11일)하였는데, Victor Cha CSIS 한국석좌, Bonnie Glaser CSIS 국장, Rick Rossow CSIS 국장 등 참석
- 신미국안보센타(CNAS)도 동일한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7월 12일)하였는데, Patrick Cronin CNAS 선임국장 등 참석

❖ 미국 한미경제연구소, 한·미정상회담 관련 워크숍 개최 (7월 13일)

- ㅋ 미국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는 '제1차 트럼프-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결과와 한·미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워싱턴에서 세미나 개최
- ㅋ 한·미정상회담 후 한미동맹관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양국의 대응 등 논의
- ㅋ 전 국무총리,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안세영 서강대 교수, 아브라함 덴마크 전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 참석

❖ 스위스 안보전략연구소, 국립외교원과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 (7월 14일)

- ㅋ 스위스 제네바 소재 안보전략연구소(GCSP)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와 공동으로 '제4차 한·스위스 안보협력 세미나' 개최
- ㅋ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 안보정세, 한·미정상회담 후 한국의 대북정책, 베를린 구상의 개념 및 추진 방안 등 논의
- ㅋ Alain Guidetti GCSP 외교분야 선임 고문, Christian Buhlmann GCSP 지역프로그램 총괄자, Nicolas Desconeudres 주한 스위스 대사관 공사, 전봉근·전혜원·신범철·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 정상기 국립외교원 소장 등 참석

❖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세종연구소와 공동으로 한·러포럼 개최 (7월 20일)

- ㅋ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세종연구소와 공동으로 한·러 포럼 개최
- ㅋ 한·러 네트워크 구축, 동북아다자협력 증진 방안,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한·러관계 발전방향 등 토론
- ㅋ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고재남 국립외교원 교수, 홍완석 한국외대 교수,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talia Stupniskaya 극동연방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부학장보, Artyom Lukin 극동연방대학교 교수, Sergey Sevsakianov 극동연방대학교 교수 등 참석

❖ 일본 와세다대학교, 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한·일 워크숍 개최 (7월 21일)

- ㅋ 일본 와세다대학교 한국학연구소는 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동북아 정세 및 한국과 일본의 대북정책'을 주제로 공동 워크숍 개최
- ㅋ 북한 핵·미사일의 고도화 및 위협 증대에 따른 동북아 정세 변화, 한국과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및 방향, 한·일 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
- ㅋ 이종원 와세다대학 한국학연구소 소장, 이노우에 도모타로 교도통신 외신부 차장, 미야모토 사토루 세이가쿠인 대학 교수, 배정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등 참석

❖ 러시아전략연구소, 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전략대화 개최 (7월 26일)

- ㅋ 러시아전략연구소(RISS)는 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 신정부 출범과 한·러 협력'을 주제로 전략대화 개최
- ㅋ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러관계 전망, 한국과 러시아의 대북 및 북핵 정책,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방안 등 논의
- ㅋ 블라디미르 스베덴초프 RISS 극동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 안나 두다르 RISS 국제관계부장, 김규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우택·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 참석

❖ 미국 헤리티지재단,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관련 세미나 개최 (7월 26일)

- ㅋ 미국 워싱턴 소재 헤리티지재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 ㅋ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선제적 대응 방안,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현대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등 논의

- Dan Sullivan 미국 상원의원, Thomas Spoehr 헤리티지재단 국장, Kenneth Todorov 예비역 준장, Bruce Klingner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위원 등 참석

❖ 미국 신미국안보센터, 북한경제 관련 세미나 개최 (7월 27일)

- 미국 워싱턴 소재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미국의 대(對) 북한 정책에 있어서 경제적 레버리지'를 주제로 세미나 개최
- 북핵 현황 평가, 북핵 저지를 위한 경제제재 효과, 미·중관계에 있어서 북핵문제가 주는 함의, 경제제재로 인한 중국 기업의 손실 등 토의
- Patrick Cronin CNAS 선임연구위원, Edward Fishman 아틀랜틱 카운슬 비상임 선임연구위원, Peter Harrell CNAS 초빙 선임연구위원 등 참석

❖ 중국 연변대학교, 제주평화연구원과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 (9월 5일)

- 중국 연변대학교는 제주평화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 신정부의 대북 정책과 동북아 국제관계'를 주제로 연변에서 세미나 개최
-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핵문제 해결 방안 논의
- 진창이 연변대학교 교수, 박동훈 연변대학교 조선한국연구센터 부소장, 안국산 연변대학교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장, 서정하 제주평화연구원 원장, 기지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등 참석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국제교류재단과 공동으로 전략대화 개최 (9월 5일)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국제교류재단과 공동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제2차 한·미전략포럼' 개최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워싱턴에서 개최된 첫 대규모 공개포럼으로 한미동맹 제반사항에 관해 폭넓게 논의
- 한미동맹의 기회와 도전, 동북아 정세와 동맹, 한·미 경제 및 통상 협력방안 논의

- Richard Armitage 아미티지재단 회장, Stephanie Murphy 미국 하원의원, Victor Cha CSIS 한국 석좌, Abraham Denmark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 Michael Pillsbury 허드슨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현 외교부 2차관, 이시형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윤영관 서울대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 김흥규 아주대 교수 등 참석

❖ 중국 상해국제문제연구원, 세종연구소와 공동으로 전략대화 개최 (9월 8일)

- 중국 상해국제문제연구원(SIIS)이 세종연구소와 공동으로 중국 상해에서 전략대화 형식의 국제회의 개최
- 동북아 다자협력을 위한 한·중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개최된 동 회의에서 양국 전문가들이 '한국 신정부 출범과 한·중관계'를 주제로 토론
- 류밍 SIIS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위웨이민 화동사범대학 주변국가연구원 부원장, 궁커위 SIIS 아태연구센터 부주임, 정지용 복단대학 한국북한연구센터 주임,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차창훈 부산대학교 교수, 박상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등 참석

❖ 미일연구재단, 북핵과 한미동맹 관련 세미나 개최 (9월 18일)

- '미일연구재단(U.S.-Japan Research Institute, USJI)'은 '카네기 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과 공동으로 '나쁜 선택들을 고려하기: 북한과의 외교 회상과 동맹의 현재 선택지'를 주제로 미국 워싱턴에서 세미나 개최
- 동 세미나는 USJI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일주일 간의 행사 중 하나로 기획
- Christopher Hill 전 주한 미국 대사와 Mitoji Yabunaka 리츠메이칸 대학 교수가 실무 경험을 발표하고, 이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최대한의 압박과 이에 대응한 북한의 선택에 관해 토론

→ James Schoff 카네기 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 Douglas Paal 전 백악관 및 국무부 고문, Keiji Nakatsuji 리츠메이칸 대학 교수 등 참석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아산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전략대화 개최 (9월 25일)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아산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새로운 시대의 외교정책: 한국과 미국'을 주제로 미국 워싱턴에서 전략대화 개최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외교적 방법이 최선임을 역설

→ Victor Cha CSIS 한국석좌, Michael Green CSIS 일본석좌, Robert L. Gallucci 조지타운 대학교 특임교수, Madeleine K. Albright 전 미국 국무장관, Mark W. Lippert 전 주한미국대사,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김준형 한동대 교수 등 참석

4장

정책 시사점 및 과제

정책 시사점 및 과제

2017년 3/4분기 통일여론의 흐름과 논의 동향을 종합하여 관련 정책 추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민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정책 자문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방향을 제안

1. 국민여론을 반영하는 대북 · 통일정책 추진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통일공감대 약화, 남북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대북 경계·적대 의식 증가 등 국민여론의 흐름을 감안, 국민들의 안보불안 해소 및 통일공감대 확산에 주력

❖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대화 모색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 여론이 큰 것에 주목,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 방안 강구 등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키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

❖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정책건의 활성화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2. 한반도 평화담론의 개발 및 평화 공공외교 확산

❖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평화담론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평화의 의미, 필요성,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 평화통일에 이르는 길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평화담론을 개발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평화담론 플랫폼 마련

❖ 한반도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및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잡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요국 및 국제사회의 정부, 언론,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평화 공공외교 추진

❖ 특히, 민주평통의 해외네트워크를 활용, 거주국 교민사회와 공감 영역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거주국 민간사회와의 접점을 확대하여 평화 공공외교 활동에 주력

3. 국민소통과 화합에 기여하는 민주평통 역할 확대

❖ 지속적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풀뿌리 차원에서 '통일국민협약'의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 형성 노력

❖ 민주평통을 중심으로 지역 차원의 특성화된 통일인식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직능별로 공통분모를 마련하여 국민적 합의형성 도모

❖ 지역별·세대별·직능별 평화공감대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 NGO·연구단체·언론기관 등과 공동으로 평화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주요 집단 및 단체와의 연결고리 확대

❖ 주요 단체와 일반 국민들이 현장과 생활에서 평화담론의 필요성을 체득하고 평화공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체험형 평화공감 프로그램을 개발

부 록

주요 학술회의 목록

국민 통일여론조사 통계표

국민 통일여론조사 설문지

주요 학술회의 목록

3/4분기 통일 관련 주요 학술회의 정리
- 학술회의 개요, 일정 및 참가자 등 주요 정보는 아래 내용 참고
- 참가자의 소속 및 직위명은 행사 당시의 소속 및 직위명으로 기재

≪ 7월 학술회의 ≫

[흥사단] 금요통일포럼

- **일시 · 장소** : 2017.07.04. 흥사단 강당
- **주제** :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 **참석 및 발표**

사회 : 이기종(경희대 교수/도산통일연구소장)
발표 : 정세현(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전 통일부 장관)

[경실련통일협회] 토론회

- **일시 · 장소** : 2017.07.05. 대학로 경실련 강당
- **주제** :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환경과 방안
- **참석 및 발표**

사회 : 고유환(동국대 교수)
발표 :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토론 : 전영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김일한(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박사),
이해정(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진수(금강산투자기업협회 부회장)

[한국PD연합회] 특별심포지엄

- **일시 · 장소** : 2017.07.06. 방송회관 (사)한국PD교육원 강의실
- **주제** : 탈북민 3만명 시대, 방송을 말한다
- **참석 및 발표**

사회 : 공용철(KBS PD)
발표 : ① 'TV에 표출되는 탈북민의 이미지' : 박현선(이화여대 교수)
② '탈북민 보도, 바람직한 방향은?' : 장용훈(연합뉴스 동북아센터 기자)
토론 : 김경산(하나원 주무관), 박성우(프리랜서PD), 오현숙(CBS PD), 전규찬(언론연대 대표/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최성국(웹툰작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국제포럼

- **일시 · 장소** : 2017.07.10.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주제** : 한미정상회담과 베를린 연설 이후, 남북관계와 동북아 협력
- **참석 및 발표**

사회 :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발표 : ① '한미정상회담과 베를린 연설, 그리고 남북관계' : 이혜정(중앙대 교수)
② '한미정상회담과 동북아 평화협력' : 프레드릭 F. 캐리어(미국 시러큐스대학 한반도 문제센터 선임연구원)
토론 : 히라이 히사시(일본 리쓰메이칸대 객원교수), 이희옥(성균관대 교수), 안드레이 란코프(국민대 교수), 올리버 슈페얼링(주한 독일 대사관 일등 서기관)

[국립외교원/한국국방연구원/통일연구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

- **일시 · 장소** : 2017.07.13. 웨스턴조선호텔
- **주제** : 동북아 국제정치 패러다임 전환과 신정부의 과제
- **참석 및 발표**

[제1세션] 동북아 국제정치 패러다임 전환과 신정부의 정책 방향
사회 : 김영수(서강대 교수)
패널 : ① 김형기(평화재단 평화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
② 신봉길(한중일협력사무국 초대사무총장/전 요르단 대사)
③ 라종일(가천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보좌관)
④ 백군기(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센터장/제19대 국회의원)

[제2세션] 신정부의 통일 · 외교 · 안보정책 과제와 대응전략
사회 :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발표 : ①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② 전봉근(국립외교원 교수)
③ 윤봉한(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④ 부형욱(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이우태(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한권(국립외교원 교수), 변상정(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송화섭(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제주평화연구원] 공동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7.07.14. 제주평화연구원 세미나실
- **주제** : 북한 핵 능력 발전과 평화적 해결 방안의 모색
- **참석 및 발표**

발표 :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석 :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이성우(제주평화 연구원 연구위원),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배기찬(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안병민(교통연구원 유라시아 · 북한인프라연구소 소장),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달리(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진징이(북경대 교수), 진창이(연변대 동북아연구원장)

[사단법인 조각보] 포럼

- **일시 · 장소** : 2017.07.14.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
- **주제** :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 삶의 역사를 말하다
- **참석 및 발표**

사회 :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기조발표 : '아래로부터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 김현미(연세대 교수)
발표 : ① '젠더 & 디아스포라들' : 이해응(제주여성가족연구원)
② '경계를 넘는 인간' : 박준규(한양대 교수)
③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삶이야기 운동' : 김숙임(사단법인 조각보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 **일시 · 장소** : 2017.07.18. STX리조트
- **주제** : 대북정책 과제와 민주평통의 역할
- **참석 및 발표**

[제1세션] 대북정책 과제
사회 : 고유환(동국대 교수)
발표 : ① 김용현(동국대 교수)
② 전봉근(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제2세션] 민주평통의 역할
사회 : 박종철(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 ① 김종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
② 배기찬(전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7.07.18.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
- **주제** :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인권정례검토에 대한 북한의 권고 이행 조사
- **참석 및 발표**

발표 : ① 'UPR 권고안에 대한 북한 내부의 문제' : 이나경(북한정보센터 연구원)
② 'UPR 권고안과 관련한 국제사회 대응의 문제점과 2018년 UPR에 대한 제언' : 송한나(북한정보센터 연구원)
사회 : 최선영(북한정보센터 기획연구실장)
종합토론 : Signe Poulsen(유엔 서울사무소 소장), 오준(전 UN 한국 대사), 백범석(경희대 교수), 안명철(NK워치 대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 정책포럼

- **일시 · 장소** : 2017.07.18.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회의실
- **주제** :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과 남북관계 개선 모색
- **참석 및 발표**

사회 : 김영수(서강대 교수)
발표 : 이해정(현대경제연구원 박사)
토론 : 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국회 더미래 연구소] 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7.07.21.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제** :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 난관과 타계책
- **발표** :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더미래 연구소 이사장)

[국회 박광온 · 이현재 의원] 통일 재정정책 토론회

- **일시 · 장소** : 2017.07.21.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제** : 통일을 위한 재정제도의 정비–통일비용과 재정 건전화를 중심으로
- **참석 및 발표**

> **발표** : 장용근(홍익대 교수)
> **토론** : 권형둔(공주대 교수), 조정진(세계일보 논설위원/전 평화연구소 연구위원), 조정찬(숭실대 겸임교수), 왕선택(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국회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7.07.21.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제** : 한국경제, 북방에서 미래를 찾다–문재인 정부의 신(新)북방정책, 중국 일대일로 · 러시아 신(新)동방정책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 **참석 및 발표**

> **발표** : 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한 · 중 협력' : 김흥규(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 ② '새로운 대러시아 북방협력 구상' : 이재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 · 유라시아 본부장)
> **토론** : 나희승(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전략연구실장), 박종수(글로벌경제평화연구소(GEPI) 이사장, 임수석(외교부 유럽국장)

[민화협 범뉴욕협의회] 포럼

- **일시 · 장소** : 2017.07.21. 더블트리호텔
- **주제** : 동포사회 대화합
- **참석 및 발표**

> **연사** : 김덕룡(세계한인상공인연합회 이사장/민화협 고문), 김정호(후러싱제일교회 목사), 조민현(성미카엘한인성당 신부), 지광(뉴욕 원각사 스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토론회

- **일시 · 장소** : 2017.07.24. 국립외교원 교수회의실
- **주제** : 밀란 홉체이 주 북한 체코대사 방문 간담회
- **참석 및 발표**

> **패널** : Milan Hupcej(주 북한 체코대사), Petr Svacina(주한 체코 대사관 공관차석), 최우선 · 전봉근 · 정상기 · 조양현 · 민정훈 · 신성원 · 황일도 · 이진원 · 김자희(국립외교원)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국회의원 정종섭)] 토론회

- **일시 · 장소** : 2017.07.25.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주제** : 한미동맹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 **발표** : 김충남(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8월 학술회의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 평화학 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7.08.07.~08.09. 서울대 사회대 국제회의실
- **주제** : 북중관계에 대한 역사적 회고
- **발표** : 션즈화(중국 화동사범대 교수)

[(재)섬유패션정책연구원/한백통일재단/국회 소상공인포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국민대토론회

- **일시 · 장소** : 2017.08.08.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제** : 통일! 지금 그리고 여기에
- **참석 및 발표**

> **사회** : 정용상(동국대 교수/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1주제] 남북관계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남북경협
> **발표** : 이자형(한백통일재단 이사장)
> **토론** : 이경태(한민족대통합연구원 원장), 김서진(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상무)

[2주제] 남북화해협력의 상징, 개성공단의 즉각적 정상화
발표 : 강창범(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간사)
토론 : 김진향((재)여시재 선임연구위원), 최동진((주)대명블루진스 대표)

[국민의당 한반도 평화기획단] 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7.08.10.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제** : 대북정책 제3의 길 모색하다
- **참석 및 발표**

발표 : ① '대북포용정책의 진화 : 변화된 현실과 변화된 접근' : 김근식(경남대 교수)
② '새로운 대북정책 : 비핵화와 한 · 미 · 중 협력은 가능한가?' : 박인휘(이화여대 교수)
③ '안보 위기 하의 대북정책 방향' : 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토론 : 고수석(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고유환(동국대 교수), 송영훈(강원대 교수), 정낙근(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홍상영(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무국장), 홍진표(시대정신 상임이사)

[국회 김종대 의원/경실련 통일협회] 토론회

- **일시 · 장소** : 2017.08.16.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제** : 문재인 정부 100일, 베를린 구상 성공을 위한 진단과 제언
- **참석 및 발표**

사회 : 김종대(국회의원)
발표 : ① '국제관계 측면에서의 진단과 제언' : 김준형(한동대 교수)
② '남북관계 측면에서의 진단과 제언' : 김진향(여시재 SD)
토론 : 이혜정(중앙대 교수), 정재홍(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박종수(GEPI 이사장/전 러시아 공사),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7.08.17.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 **주제** : 미술작품을 통해 본 북한의 문화의식
- **참석 및 발표**

사회 : 김성경(북한대학원대 교수)
발표 : 문범강(조지타운대)

[국회 경대수 · 김학용 · 원유철 · 윤영석 · 이종명 · 정진석 의원/여의도연구원] 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7.08.17.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제** : 문재인 정부 외교 · 통일 · 국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 **참석 및 발표**

> **발표** : ① '한미 · 한중 ·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 이춘근(이화여대 겸임교수)
> ②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계와 국방정책' : 이무성(명지대 교수)
> ③ '국가안보와 THAAD' :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장)
> **토론** : 김석우(전 통일원 차관), 조영기(고려대 교수), 제성호(중앙대 교수)

[국회 정양석 의원실] 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7.08.22.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제** : 탈북난민 구조사업의 현실과 과제
- **참석 및 발표**

> **발표** : 김영자(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 김성은(갈렙선교회 목사), 지성호(나우 대표)

[국회 박병석 의원실/통일연구원] 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7.08.23.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 **주제** : 한국 주도의 통일 · 대북정책
- **참석 및 발표**

> **토론** : 박병석(국회의원), 손기웅(통일연구원 원장), 류길재(전 통일부장관), 권만학(경희대 교수), 김창수(코리아연구원 원장), 이상현(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박인휘(이화여대 교수), 이기태(통일연구원 기획부장), 김용호(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박종철(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 **일시 · 장소** : 2017.08.25. 강원도 고성 파인리조트 M&B 세미나실
- **주제** :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과 평화의 모색

• 참석 및 발표

[1세션] 통일을 위한 신뢰 회복
사회 : 김수민(선문대)
발표 : ① '통일을 위한 신뢰회복과 협상의 역설' : 김병규(동국대)
② '문재인 정부와 남북한 신뢰구축 : 현황과 방향' : 이정우(국제통상전략연구원)
③ '북한 형법의 변천과 특징에 관한 연구' : 권오국(경찰대)
토론 : 박은주(고려대), 나용우(통일연구원), 권영경(통일교육원), 함규진(서울교육대), 홍정표(일본 미와자키대), 김일기(국가안보전략연구원), 권수현(경상대), 정영애(선문대)

[2세션] 평화를 위한 한반도 불확실성의 극복
사회 : 조윤영(중앙대)
발표 : ① '북한의 ICBM 발사와 미국의 MD 개발 가속화' : 이윤식(고려대)
② '전쟁트라우마와 적대의 탄생 : 삐라와 포스터 속의 적대 이미지' : 전영선(건국대)
③ '21세기 중국 서북지역 국제인프라망의 정치경제 : 접경3국과의 교통, 운송 인프라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 김송죽(이화여대)
토론 : 이헌경(동아대), 유호근(청주대), 최춘흠(상해외국어대), 오미영(동국대), 윤지원(평택대), 고경민(제주연구원), 박형준(동국대), 주우철(선문대), 남광규(고려대), 김형수(단국대)

[한국정치정보학회/북한대학원대학교 SSK 남북한마음통합연구소] 학술회의

• 일시 · 장소 : 2017.08.28. 북한대학원대학교 대회의실
• 주제 : 남북 통합 과제와 마음통합의 접근
• 참석 및 발표

[1세션] 정치통합 의미와 과제
사회 : 박광기(대전대)
발표 : ① '남북통합의 현실과 과제' : 홍석훈(통일연구원)
② '남북갈등 상황과 분단의 대립구조에 관한 고찰' : 주승현(전주 기전대)
토론 :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윤철기(서울교대)

[2세션] 남북한 사회통합과 마음통합 논의
사회 : 이수정(덕성여대)
발표 : ① '남한 신식민/분단체제와 '민주수업'의 불가능성' : 연광석(북한대학원대학교 SSK 연구단 연구교수)
② '통일독일에 대한 이미지와 남북한 통합에의 시사점' : 최순미(북한대학원 대학교 SSK연구단 연구교수)
토론 : 이근영(연변대), 나용우(통일연구원)

[국회 송영길 의원/(사)먹고사는문제연구소/매일경제/먹고사는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연구모임] 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7.08.29.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제** : 한국 · 러시아 천연가스협력을 위한 논의 토론회
- **참석 및 발표**

발표 : ① 'Energy security in Northeast Asia and Russia–Korea Energy cooperation: a view from Russia' : Alexey M. Mastepanov(Prof. Oil&Gas Research Institute, Russian Academy of Science)
② '러시아 PNG가 한반도를 경유해야 할 8번째 이유' : 김태유(서울대 교수)
사회 : 신중호(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토론 : 권원순(한국외국어대 교수), 김세준(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저연구본부장), 신범식(서울대 교수), 이흥복(한국가스공사 E&P 사업처장), 정찬설(삼성엔지니어링 부사장)

[국회 홍익표 의원/(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 토론회

- **일시 · 장소** : 2017.08.29.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제**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실행방안 모색 토론회
- **참석 및 발표**

발표 : 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경협 모색' : 정낙근((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 고문)
② '시진핑 정부의 一帶一路 전략과 한 · 중 인프라 투자협력' : 이창주(동아시아평화연구원 연구위원)
③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방안' : 윤희로((사)남북경제협력사무소 전문위원)
토론 : 김종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 이현주(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 센터장), 임종일(국토교통부 과장), 김영일(통일부 과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북지원 국제회의

- **일시 · 장소** : 2017.08.29.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주제** :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
- **참석 및 발표**

[제1회의] 향후 한국의 대북지원 발전방안 모색
발표 : ① '남북관계 개선과 향후 대북지원 전략 모색' : 최용환(경기연구원 연구위원)
② '한국의 대북지원 프로그램 리뷰 및 향후과제' : 송영훈(강원대 교수)
③ '외부인의 시각에서 본 북한 그리고 남북관계' : Felix Abt(전 평양비즈니스스쿨 대표)
토론 : Nagi Shafik(공중보건자문관/전 WHO 북한프로그램 담당관), 강영식(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대북지원 국제NGO

[제2회의] 지속가능한 북한 개발협력의 모색
사회 : Sven Schwersensky(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발표 : ① '북한 개발협력에서의 국제적 규범과 기준의 적용' : 조정훈(아주통일연구소 소장)
② '국제 민간단체의 북한 역량강화사업의 경험과 향후 발전방안' : Katharina Zellweger(스탠포드대 CISC 객원연구위원/전 SDC 북한사무소장)
③ '한국 민간의 북한 역량강화사업의 경험과 향후 발전방안' : 이주성(월드비전 북한사업팀장)
④ '향후 개발협력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 수집 및 지속가능한 대북 파트너십' : Douglas Bond(하버드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토론 : 이명수(뉴욕대 아시아법연구소 박사), Bernhard Seliger(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박지연(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평화재단] 통일열린마당

- **일시 · 장소** : 2017.08.29. 평화재단 강당
- **주제** : 북한의 핵무장 현실화와 한반도 평화의 길
- **발표** :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근식(경남대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7.08.30.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 **주제** : 2017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 '병진노선'의 두 얼굴
- **참석 및 발표**

[제1회의]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사회변동 조사결과
발표 : ① '조사결과 개요' : 정동준(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② '대남 인식' : 문인철(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원)
③ '주변국 인식' : 조동준(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④ '탈북민의 남한적응' : 천경효(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⑤ '의식주 생활변화와 정보화' : 황정미(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
⑥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개혁 인식' : 천자현(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⑦ '사회보장 실태' : 이철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회의] '병진노선'의 두 얼굴
사회 : 김병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토론 : 고수석(중앙일보), 안경모(국방대학원),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임수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인애(통일연구원)

≪ 9월 학술회의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핵포럼)] 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7.09.04. 국회 본청 귀빈식당
- **주제** : 북한의 核 독점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 **참석** : 원유철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모임

[국회 정양석 의원] 외교통일정책 토론회

- **일시 · 장소** : 2017.09.05.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제** : 대한민국 외교영토 확장 전망과 과제
- **참석 및 발표**

> **발표** : 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 신범철(국립외교원 교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한국안보통상학회(KAST)/전략물자관리원/한국핵정책학회] 포럼

- **일시 · 장소** : 2017.09.06. 경희대 국제회의실
- **주제** : 미국의 대북제재와 전략물자수출관리제도
- **참석 및 발표**

> [1세션] 사회 : 김한택(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 ① '미국의 수출관리법제와 역외적용' : 강호(건국대 교수)
> ② '미국의 대북제재 법제' : 박언경(경희대 교수)
> **토론** : 유승민(외교부 과장), 조정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세션] 사회 : 전봉근(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 **발표** : ① '미국의 수출허가제도–수출통제제도 개혁동향' : 이경령(전략물자관리원 선임연구원)
> ② '원자력 수출통제 : UAE 원전수출 사례' : 신동훈(원자력기술통제원 실장)
> **토론** : 유준구(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진종열(전략물자연구원 선임연구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토론회

- **일시 · 장소** : 2017.09.07. 국립외교원 대회의실
- **주제** : 미 · 중 사이의 한국 외교

• 참석 및 발표

사회 : 조병제(국립외교원장)
토론 : 자칭궈(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 김성한(고려대 국제대학원장), 정재호(서울대 교수/미중관계연구센터 소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7.09.07,21,28/10.17,19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세미나실
• 주제 : 북한의 기초과학 현실과 전망
• 참석 및 발표

[1차(09.07)] 북한의 수의학 체계와 현실
발표 : 조충희(평성수의축산대학)
토론 : 우희종(서울대 수의과학대학 학장)

[2차(09.21)] 북한 유색금속 광산개발과 수출
발표 : 홍기동(김책 광산금속대학)
토론 : 민기복(서울대 공과대학)

[3차(09.28)] 김책공대 전자공학부의 교과과정과 IT
발표 : 강영실(김책공업대학 전자공학부)
토론 : 이종수(서울대 공과대학)

[4차(10.17)] 북한의 생물공학 발전
발표 : 김형수(만청산연구소 연구사)
토론 : 양태진(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5차(10.19)] 북한 도시공간의 변화: 시장과 전후
발표 : 길광혁(평양건축종합대학)
토론 : 전봉희(서울대 공과대학 건축학과)

[국회 김중로 의원실] 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7.09.08.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제 : 북핵문제, 이대로 좋은가! 북한 6차 핵실험, 외교안보정책 긴급 진단
• 참석 및 발표

발제 : 북한 핵 위협의 평가와 대응방향
발표 :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장)
토론 : 김민석(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유용원(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연세대 통일연구원] 국제학술회의

- 일시 · 장소 : 2017.09.08.~09. 김대중 도서관 컨벤션홀
- 주제 : Global IR Knowledge Production and IR Scholarship in/of East Asia
- 참석 및 발표

[Session 1] Rationality & Relational Practices in Chinese/Asian IR Contexts
Chair : Jungmin Seo(Yonsei University)
Panel : ① 'Contrasting the Theory of Balance of Relationships and the Relational Turn : Bilateralism, Self-restraint, and Anarchy' : Chih-yu Shin(National Taiwan University)
② 'Embedded Relationality : History and Hierarchy in Vietnam's China Policy' : Chiung-Chiu Huang(National Chengchi University)
③ 'Normative Power Beyond the Eurocentric Frame : Asian Perspective on the Definition of the 'Normal' in International Life' : Emilian Kavalski(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

[Session 2] Doing and Theorising IR Differently in Japan
Chair : Chih-yu Shin(National Taiwan University)
Panel : ① 'Nishida Kitaro's Incorporation with the Imperial Government : What went wrong with the Kyoto School?' : Kosuke Shimizu(Ryukoku University)
② 'Between Mosaic and Kaleidoscope Metabolist's Challenge for Theorising the World, 1960-1975' : Josuke Ikeda(University of Toyama)
③ 'Western or Non-Western IRT? One that catches the mouse' : Jae-Jung Suh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Session 3] Reading Post-Westphalian Practices via the Tianxia System
Chair : Yongjin Zhang(University of Bristol)
Panel : ① 'Competing Visions of a Post-Westphalian World Order: The Philadelphian System vs. the Tianxia System' : Taesuh Cha (Chung-Ang University)
② 'A Quest for Chinese Ethics of War: The Legitimate Use of Military Force in the Tianxia system' : Jay Hwang (Leiden University)

[Session 4] IR Scholarship in Japan - What/How to Study? For What Ends?
Chair : Kosuke Shimizu (Ryukoku University)
Panel : ①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in Japan Revisited' : Kazuya Yamamoto (Kyoto Sangyo University)
② 'The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of a Post-Western IR studies in Japan' : Ching-Chang Chen (Ryukoku University)

[Session 5] IR Scholarship in China and Korea - What/How to Study? For What Ends?
Chair : Chiung-chiu Huang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Panel : ① 'Why is There No Critical Chinese IR?' : Yongjin Zhang (University of Bristol)
② 'A Preliminary Observation on IR/Social Science Knowledge Production in South Korea: Struggling for THE Reference Point' : Young Chul Cho (Chonbuk National University)

[통일연구원] KINU포럼

- **일시 · 장소** : 2017.09.11.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
- **주제** : 북한을 무엇을 바라는가?
- **발표** : 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사)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KINS)] 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7.09.14.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제** : 북한 핵 · 미사일에 대한 한반도 안보위기와 우리의 대응
- **참석 및 발표**

발표 : 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 : 이호령(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② '북한의 핵미사일과 정치전략 그리고 우리의 대응' : 배정호(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KINS 원장/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토론 : 윤상직(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정태옥(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유용원(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강철환(북한전략센터 대표)

[국회 박재호 의원/(사)국가경영연구원] 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7.09.14.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제** : 기로에 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찾다
- **참석 및 발표**

[1주제] 북 · 미 군사충돌, 중국발 사드보복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
발표 :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주제] 대북제재 하에서 남북경제협력 추진 방안
발표 : 임강택(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 김용현(동국대 교수), 문성욱((사)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한용(인하대 초빙교수),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국회입법조사처/국회 이수혁 · 백승주 · 최경환 · 하태경 의원실/아시아 미래지식인 포럼] 공동 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7.09.14.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주제**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 · 중 · 일 협력과 국회의 역할
- **참석 및 발표**

사회 :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
발표 : ① '북핵을 바라보는 한 · 중 · 일 및 미국의 시각과 북한' :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② '북핵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과 지경학적 해법' : 진징이(베이징대 교수)
③ '북한의 핵 ·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방안' : 히라이와 순지(난잔대 교수)
토론 : 국회 이수혁 · 백승주 · 최경환 · 하태경 의원

[국회 한반도평화포럼(박선숙 의원실)] 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7.09.14. 국회본청 귀빈식당
- **주제** : 북한 핵 위기, 어떻게 풀 것인가?–문정인 교수에게 듣는다
- **발표** : 문정인(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연세대 특임명예교수)

[남북평화재단경인본부/(사)온누리사랑나눔/국회 유동수 의원실] 통일 포럼

- **일시 · 장소** : 2017.09.14.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제** :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다
- **참석 및 발표**

사회 : 정세일(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교역교류위원장/온누리사랑나눔이사)
발표 : ① '한국통일정책 정론' : 신창민(중앙대 명예교수)
②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사례' : 김의중(남북평화재단경인본부 상임대표/(사)온누리사랑나눔 총재)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국회 김규환 의원] 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7.09.14.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제**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비전

• 참석 및 발표

사회 : 서호(통일연구원 통일정책협력단장)
발표 : 윤영관(전 외교통상부 장관)
토론 : 김성재(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 김용운(단국대 석좌교수), 김정(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오준(전 UN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이재호(전 동아일보 논설실장), 홍문종(국회의원)

[남북장애인교류협회] 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7.09.15. 은평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 주제 : 북한 장애인 실태 및 남북장애인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 참석 및 발표

[1세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한 관계 전망
사회 : 강석승(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 조영기(고려대 교수)
토론 : 송유창(삼육대 교수), 송광석(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회장/통일교육협의회 공동의장)

[2세션] 남북 장애인 교류의 실상과 전망
사회 : 강석승(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토론 : 윤양중(한국중증장애인생산시설연합회 회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 정책포럼

• 일시 · 장소 : 2017.09.18.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회의실
• 주제 : 북한 6차 핵실험과 남북관계
• 참석 및 발표

사회 : 김영수(서강대 교수)
발표 : 김연철(인제대 교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국민의당 이상돈 의원/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7.09.19.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제** : 남북통일과 직업교육훈련 한국폴리텍대학의 역할과 과제
- **참석 및 발표**

사회 : 박봉순(한국폴리텍 교육훈련연구센터장)
발표 : 이영민(숙명여대 교수)
토론 : 이우영(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 전화익(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원장), 이문수(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최영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정동열(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김민호(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과장)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7.09.19.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강당
- **주제** : 문재인 정부 한반도 위기관리 가능한가?
- **참석 및 발표**

발표 :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토론 : 김홍걸(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 **일시 · 장소** : 2017.09.19.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주제** : 비핵 · 평화번영을 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참석 및 발표**

[1세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내용과 의미
사회 : 김수암(통일연구원 부원장)
발표 : 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과제' :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②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이행전략' :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토론 : 김석진(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나희승(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석기(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순직(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세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방안
사회 : 임강택(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 김경술(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은옥(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준(국토연구원 부원장), 이영훈(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주태(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최경수(북한자원연구소 소장), 최영배(기획재정부 남북경제과 과장),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7.09.20.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세미나실
- **주제** : 한국과 북한의 미래 에너지 시나리오
- **참석 및 발표**

> **발표** : Andre D. Thess (독일 항공우주센터 기계열역학 연구소 소장)
> **토론** : 신범식(서울대 교수), 민기복(서울대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정책포럼

- **일시 · 장소** : 2017.09.20. 서울대 교수회관 4회의실
- **주제** : 경제취약지역의 개발 전략 : 독일통일의 사례
- **발표** : 요아힘 라그니츠(독일 드레스덴 경제학 교수)

[남북물류포럼] 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7.09.21. 퍼시픽호텔
- **주제** : 나의 꿈, 나의 희망–한반도 종단 철도 · 도로 연결사업
- **발표** : 김한신((주) G–한신 대표)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포럼

- **일시 · 장소** : 2017.09.21. 평화재단 3층 강당
- **주제** : 한반도 평화문제의 해부, 새로운 방략을 구한다
- **참석 및 발표**

> **사회** : 고경빈(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운영위원장)
> **발표** : ① '한미동맹과 책임국방의 길' : 김민석(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 ② '북한의 핵무장과 우리의 대응' : 전성훈(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 **토론** : 이혜정(중앙대 교수), 이상현(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동학민족통일회] 시민강좌

- **일시 · 장소** : 2017.09.27. 수운회관
- **주제** : 북한의 종교와 통일운동
- **참석 및 발표**

> **사회** : 손윤(동학민족통일회 총괄의장/의암경영연구소 소장)
> **발표** : 임형진(경희대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7.09.27.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 **주제** : 2017 통일의식조사–정권교체와 안보위기–기대와 전망
- **참석 및 발표**

[제1회의] 2017년 한국인의 통일의식 조사결과 발표
발표 : ① '조사 개요' : 정동준(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② '통일 인식' : 송영훈(강원대 정치외교학과)
③ '북한 인식' : 문인철(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원)
④ '대북정책 인식' : 천자현(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⑤ '주변국 인식' : 조동준(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⑥ '경제평가와 통일의식' : 정동준(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⑦ '위협인식이 북한이탈주민과 통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황정미(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

[제2회의] 정권교체와 안보위기–기대와 전망
사회 : 정근식(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토론 : 성기영(통일연구원), 이상신(통일연구원), 정영철(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한정훈(서울대 국제대학원)

[국민정책연구원/국회 박주선 부의장] 토론회

- **일시 · 장소** : 2017.09.28.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제** : 한반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참석 및 발표**

사회 : 이태규(국회의원)
발표 : 김병연(서울대 교수)
토론 : 사이먼 리(미국 정부 대외관계 과장), 진준걸(중국 정무 참사관), 츠카모토 야스히로(일본 정무 참사관), 드미트리 쿨킨(러시아 정무 참사관)

[국방대/한국국제정치학회/한국평화학회] 세미나

- **일시 · 장소** : 2017.09.28. 국방대 신캠퍼스 컨벤션센터
- **주제** : 전쟁과 평화의 국제질서를 통해 본 한반도 평화 전략

• 참석 및 발표

[1세션] 국제평화체제의 흥망과 평화의 조건
사회 : 박영준(한국평화학회회장/국방대)
발표 : ① '베스트팔리아 체제 하의 전쟁과 평화' : 김준석(카톨릭대)
② '근대 유럽의 전쟁과 평화' : 홍태영(국방대)
③ '네르친스크 체제 하의 전쟁과 평화' : 김명섭(연세대)
토론 : 김학성(충남대), 유호근(청주대), 김일기(국가안보전략연구원)

[2세션]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국가 전략
사회 : 김유은(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한양대)
발표 : 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안보국방전략' : 한용섭(국방대)
② '한반도 평화와 통일 : 통일의 개념과 통일전략' : 김영호(성신여대)
토론 : 민정훈(국립외교원), 이기완(창원대)

[한국 핵정책 학회] 학술회의

• **일시 · 장소** : 2017.09.29.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주제** : 핵 시대의 위기와 도전–한국의 핵 옵션과 탈원전을 중심으로
• 참석 및 발표

[1세션] 북핵과 한국의 핵 옵션 : 비핵화, 미군 전술핵 재반입, 핵무장 어느 것이냐?
사회 : 이상현(세종연구소)
발표 : 박휘락(국민대), 전봉근(국립외교원)
토론 : 한용섭(국방대), 정욱식(평화네트워크)

[2세션] 원자력 시대의 한국의 탈원전 : 중단 혹은 확장의 기로에 선 한국의 원자력 정책
사회 : 황일순(서울대)
발표 : Michael F. Simpson(University of Utah), 김명현(경희대)
토론 : 조청원(서울과기대), 송명재(방사성동위원소 협회장)

국민 통일여론조사 통계표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총계(합계)가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함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 전 체 ◈		1,000	100
성별	남성	497	49.7
	여성	503	50.3
연령별	19~29세	176	17.6
	30대	174	17.4
	40대	203	20.3
	50대	201	20.1
	60대이상	246	24.6
거주지별	서울	197	19.7
	인천/경기	298	29.8
	대전/충청	106	10.6
	광주/전라	102	10.2
	대구/경북	102	10.2
	부산/울산/경남	154	15.4
	강원/제주	41	4.1
출생지별	서울	156	15.6
	인천/경기	138	13.8
	대전/충청	138	13.8
	광주/전라	188	18.8
	대구/경북	129	12.9
	부산/울산/경남	179	17.9
	강원/제주	60	6.0
	북한	6	0.6
	해외	6	0.6
학력별	중졸이하	137	13.7
	고졸	259	25.9
	대재이상	596	59.6
	모름/무응답	8	0.8
이념성향	진보	292	29.2
	중도	368	36.8
	보수	228	22.8
	모름/무응답	113	11.3
직업별	농/임/어업	36	3.6
	자영업	157	15.7
	블루칼라	152	15.2
	화이트칼라	271	27.1
	학생	76	7.6
	가사	212	21.2
	무직/기타	97	9.7
소득별	200만원 이하	189	18.9
	201~300만원	126	12.6
	301~400만원	165	16.5
	401~500만원	120	12.0
	501만원 이상	306	30.6
	모름/무응답	94	9.4
정보접촉 경로	TV/라디오	432	43.2
	신문/잡지	60	6.0
	인터넷/SNS	476	47.6
	주변사람	17	1.7
	기타/모름/무응답	15	1.5

[결과요약표]

구분		사례수	비율(%)
◈ 전 체 ◈		1,000	100
통일필요 정도	필요	713	71.3
	불필요	265	26.5
	모름/무응답	21	2.1
통일예상 시기	10년 이내	218	21.8
	30년 이내	268	26.8
	30년 이상	123	12.3
	불가능	264	26.4
	모름/무응답	127	12.7
통일 후 국가발전 공감정도	공감	578	57.8
	비공감	398	39.8
	모름/무응답	23	2.3
향후 남북관계 전망	좋아질 것	269	26.9
	변화 없을 것	377	37.7
	나빠질 것	303	30.3
	모름/무응답	51	5.1
북한에 대한 인식	협력/지원 대상	305	30.5
	경계/적대 대상	487	48.7
	상관없는 대상	162	16.2
	모름/무응답	46	4.6
북한 개혁/개방 가능성	높다	337	33.7
	낮다	610	61.0
	모름/무응답	53	5.3
통일에 영향력 큰 나라	미국	387	38.7
	중국	475	47.5
	일본	20	2.0
	러시아	36	3.6
	기타	24	2.4
	모름/무응답	59	5.9
안보상황 인식	안정	167	16.7
	보통	269	26.9
	불안정	555	55.5
	모름/무응답	8	0.8
북한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공감	535	53.5
	비공감	417	41.7
	모름/무응답	48	4.8
북핵문제 해결방법	대화와 협상	334	33.4
	강력한 제재	461	46.1
	군사적 압박	157	15.7
	모름/무응답	48	4.8
대화 가능성 공감정도	공감	627	62.7
	비공감	347	34.7
	모름/무응답	26	2.6
올림픽 남북관계 개선영향	영향 있을 것	275	27.5
	영향 없을 것	684	68.4
	모름/무응답	41	4.1

[통일 필요 정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매우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모름/무응답	필요	불필요	평균 (4점)	평균 (100점)
◈ 전 체 ◈		1,000	37.0	34.4	18.2	8.4	2.0	71.4	26.6	3.02	67.37
성별	남성	497	45.6	31.8	13.5	8.1	1.0	77.4	21.6	3.16	72.01
	여성	503	28.4	36.9	22.8	8.6	3.2	65.4	31.4	2.88	62.68
연령별	19~29세	176	17.1	47.1	24.6	10.0	1.3	64.1	34.6	2.72	57.36
	30대	174	25.3	36.4	20.8	14.9	2.6	61.7	35.7	2.74	57.99
	40대	203	40.7	36.8	15.5	6.5	0.5	77.5	22.0	3.12	70.76
	50대	201	43.0	31.6	16.5	7.0	1.9	74.6	23.5	3.13	70.92
	60대이상	246	51.5	24.1	15.4	5.2	3.9	75.5	20.5	3.27	75.61
거주지별	서울	197	38.5	34.2	15.0	10.0	2.3	72.7	25.0	3.03	67.83
	인천/경기	298	33.1	37.0	18.7	9.1	2.1	70.1	27.9	2.96	65.35
	대전/충청	106	33.1	36.3	21.3	8.4	0.9	69.4	29.6	2.95	65.01
	광주/전라	102	54.0	24.6	12.2	5.5	3.7	78.6	17.7	3.32	77.34
	대구/경북	102	35.1	32.3	20.0	8.3	4.4	67.4	28.2	2.99	66.20
	부산/울산/경남	154	33.6	36.5	22.9	6.9	0.0	70.1	29.9	2.97	65.61
	강원/제주	41	42.4	32.9	14.1	7.3	3.3	75.3	21.5	3.14	71.34
출생지별	서울	156	33.8	35.5	15.7	11.5	3.6	69.2	27.1	2.95	64.99
	인천/경기	138	27.7	38.6	23.0	7.8	2.9	66.3	30.9	2.89	62.88
	대전/충청	138	35.4	35.4	17.6	10.1	1.4	70.9	27.7	2.98	65.86
	광주/전라	188	50.2	26.9	16.4	5.0	1.5	77.1	21.5	3.24	74.70
	대구/경북	129	38.2	33.2	17.0	8.1	3.6	71.4	25.0	3.05	68.43
	부산/울산/경남	179	33.3	36.9	19.8	9.5	0.5	70.2	29.3	2.94	64.81
	강원/제주	60	35.0	40.2	17.6	5.0	2.2	75.2	22.6	3.08	69.19
	북한	6	46.1	28.3	10.5	15.2	0.0	74.3	25.7	3.05	68.42
	해외	6	48.6	15.0	36.4	0.0	0.0	63.6	36.4	3.12	70.74
학력별	중졸이하	137	52.9	22.1	15.9	5.4	3.7	75.1	21.3	3.27	75.75
	고졸	259	34.1	34.4	20.5	9.3	1.8	68.4	29.8	2.95	64.95
	대재이상	596	34.3	37.5	17.9	8.7	1.6	71.8	26.6	2.99	66.32
	모름/무응답	8	59.0	8.9	9.3	0.0	22.8	67.9	9.3	3.64	88.15
이념성향	진보	292	41.5	36.3	14.4	6.4	1.4	77.8	20.9	3.14	71.44
	중도	368	30.2	41.5	18.4	8.5	1.4	71.8	26.9	2.95	64.95
	보수	228	38.3	26.4	22.8	10.3	2.2	64.7	33.1	2.95	64.90
	모름/무응답	113	44.6	22.3	17.8	8.9	6.3	66.9	26.8	3.09	69.83
직업별	농/임/어업	36	51.1	20.4	15.4	5.2	7.8	71.6	20.6	3.27	75.82
	자영업	157	44.6	25.8	14.3	11.8	3.4	70.5	26.2	3.07	68.97
	블루칼라	152	26.3	40.1	22.1	11.6	0.0	66.3	33.7	2.81	60.36
	화이트칼라	271	38.2	37.9	15.3	7.4	1.2	76.1	22.7	3.08	69.41
	학생	76	23.4	39.5	24.0	11.7	1.3	62.9	35.8	2.76	58.52
	가사	212	36.2	35.1	20.4	5.1	3.2	71.3	25.5	3.06	68.57
	무직/기타	97	44.9	29.1	18.0	6.0	2.0	74.0	24.0	3.15	71.75
소득별	200만원 이하	189	43.9	25.1	19.6	6.1	5.3	69.0	25.7	3.13	70.94
	201~300만원	126	41.3	29.2	18.5	11.1	0.0	70.4	29.6	3.01	66.87
	301~400만원	165	29.3	41.2	23.3	4.9	1.2	70.6	28.2	2.96	65.39
	401~500만원	120	42.9	29.5	17.2	8.8	1.5	72.4	26.1	3.08	69.38
	501만원 이상	306	34.8	37.9	15.8	10.5	1.0	72.7	26.3	2.98	66.01
	모름/무응답	94	30.3	42.6	14.9	7.9	4.3	72.9	22.8	3.00	66.54
정보접촉 경로	TV/라디오	432	41.2	32.8	15.1	8.3	2.6	74.0	23.4	3.10	69.94
	신문/잡지	60	48.1	27.7	18.5	2.6	3.1	75.8	21.1	3.25	75.04
	인터넷/SNS	476	31.1	37.7	20.9	9.0	1.3	68.8	29.9	2.92	64.03
	주변사람	17	39.1	17.7	28.5	10.7	3.9	56.8	39.3	2.89	62.88
	모름/무응답	15	55.5	20.1	6.3	11.7	6.5	75.5	17.9	3.28	75.88

[통일 필요 정도]
(계속)

단위 : %		사례수	매우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모름/무응답	필요	불필요	평균 (4점)	평균 (100점)
◈ 전 체 ◈		1,000	37.0	34.4	18.2	8.4	2.0	71.4	26.6	3.02	67.37
통일예상 시기	10년 이내	218	59.0	32.3	6.5	1.3	1.0	91.2	7.8	3.50	83.47
	30년 이내	268	33.5	47.7	14.6	3.1	1.1	81.2	17.7	3.13	70.94
	30년 이상	123	24.8	40.0	23.6	9.1	2.6	64.8	32.6	2.83	60.87
	불가능	264	22.9	21.3	32.2	20.8	2.8	44.2	53.0	2.48	49.22
	모름/무응답	127	47.5	31.6	11.6	4.9	4.3	79.2	16.5	3.27	75.74
통일 후 국가발전 공감정도	공감	578	53.0	36.0	8.2	2.2	0.6	89.0	10.3	3.41	80.26
	비공감	398	13.2	32.1	33.1	17.6	3.9	45.4	50.7	2.43	47.57
	모름/무응답	23	44.8	31.1	13.0	3.7	7.4	75.9	16.7	3.26	75.42
향후 남북관계 전망	좋아질 것	269	57.9	31.3	8.9	0.6	1.3	89.2	9.5	3.49	82.85
	변화없을 것	377	20.1	43.0	22.1	12.1	2.7	63.1	34.2	2.73	57.72
	나빠질 것	303	34.3	28.6	23.1	12.1	1.9	62.9	35.2	2.87	62.28
	모름/무응답	51	66.9	21.1	8.6	0.0	3.5	88.0	8.6	3.60	86.80
북한에 대한 인식	협력/지원 대상	305	53.7	35.1	7.7	1.4	2.1	88.8	9.1	3.44	81.35
	경계/적대 대상	487	30.4	37.3	20.5	10.4	1.4	67.7	30.9	2.89	62.95
	상관없는 대상	162	20.2	26.2	32.9	17.0	3.7	46.4	49.9	2.51	50.47
	모름/무응답	46	55.3	26.9	11.2	1.9	4.8	82.2	13.1	3.42	80.79
북한 개혁/개방 가능성	높다	337	47.2	34.9	13.1	3.9	1.0	82.1	17.0	3.27	75.54
	낮다	610	31.0	34.8	21.1	11.1	2.0	65.8	32.2	2.87	62.48
	모름/무응답	53	40.7	26.5	17.0	5.2	10.5	67.2	22.3	3.15	71.61
통일에 영향력 큰 나라	미국	387	37.1	32.1	19.5	9.4	1.9	69.2	28.9	2.99	66.28
	중국	475	38.0	38.1	16.4	6.1	1.5	76.1	22.5	3.10	69.85
	일본	20	35.4	41.0	19.4	0.0	4.2	76.4	19.4	3.17	72.22
	러시아	36	41.2	30.9	17.9	9.9	0.0	72.1	27.9	3.03	67.81
	기타	24	18.7	20.2	16.1	36.0	9.0	38.9	52.1	2.24	41.26
	모름/무응답	59	33.2	24.8	24.5	10.9	6.6	58.0	35.4	2.86	61.99
안보상황 인식	안정	167	50.9	29.1	15.3	3.0	1.7	80.0	18.3	3.30	76.72
	보통	269	29.7	43.0	16.5	8.8	2.0	72.8	25.3	2.96	65.18
	불안정	555	36.3	31.7	20.2	9.9	2.0	67.9	30.0	2.96	65.44
	모름/무응답	8	36.2	42.0	0.0	0.0	21.8	78.2	0.0	3.46	82.09
북한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공감	535	41.7	37.0	14.4	5.8	1.1	78.7	20.2	3.16	71.95
	비공감	417	31.0	31.3	23.1	12.1	2.5	62.3	35.2	2.83	61.09
	모름/무응답	48	36.0	32.2	18.3	3.6	9.8	68.2	22.0	3.11	70.49
북핵문제 해결방법	대화와 협상	334	50.8	34.1	10.2	3.1	1.7	85.0	13.3	3.35	78.32
	강력한 제재	461	26.9	39.1	22.1	10.5	1.6	65.9	32.5	2.84	61.20
	군사적 압박	157	35.4	25.1	23.5	12.7	3.2	60.6	36.3	2.86	62.00
	모름/무응답	48	42.6	21.3	19.2	10.0	7.0	63.8	29.2	3.04	67.87
대화 가능성 공감정도	공감	627	42.0	36.9	14.6	5.3	1.2	78.9	19.9	3.17	72.31
	비공감	347	27.0	30.8	25.1	14.1	3.0	57.7	39.3	2.73	57.58
	모름/무응답	26	49.2	22.5	13.1	3.7	11.6	71.6	16.7	3.33	77.52
올림픽 남북관계 개선영향	영향 있을 것	275	46.6	34.5	12.8	4.5	1.6	81.1	17.2	3.25	75.11
	영향 없을 것	684	32.4	34.5	21.1	10.0	2.1	66.9	31.0	2.91	63.74
	모름/무응답	41	48.7	30.8	6.8	7.8	5.8	79.6	14.6	3.28	75.98

[통일 예상시기]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하다	모름/무응답	1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
◈ 전 체 ◈		1,000	6.2	15.6	18.2	8.6	12.3	26.4	12.7	21.8	26.8	12.3	26.4
성별	남성	497	6.0	18.1	19.8	8.7	13.1	24.1	10.2	24.1	28.5	13.1	24.1
	여성	503	6.4	13.1	16.6	8.5	11.5	28.7	15.3	19.5	25.1	11.5	28.7
연령별	19~29세	176	3.8	8.7	22.5	13.3	24.6	22.6	4.5	12.5	35.9	24.6	22.6
	30대	174	2.7	17.4	23.7	13.2	15.6	24.2	3.3	20.1	36.9	15.6	24.2
	40대	203	8.3	21.1	21.2	7.9	15.4	18.0	8.1	29.4	29.1	15.4	18.0
	50대	201	5.6	16.8	17.7	6.3	7.4	32.8	13.5	22.3	24.0	7.4	32.8
	60대이상	246	9.3	13.6	9.2	4.4	2.6	32.4	28.6	22.9	13.6	2.6	32.4
거주지별	서울	197	6.7	13.0	21.7	12.6	12.7	20.9	12.5	19.6	34.3	12.7	20.9
	인천/경기	298	6.8	16.3	18.6	10.1	13.6	24.5	10.1	23.1	28.7	13.6	24.5
	대전/충청	106	1.8	16.9	15.8	7.0	15.6	25.3	17.7	18.7	22.8	15.6	25.3
	광주/전라	102	6.6	19.4	21.3	4.7	6.5	23.2	18.3	26.0	26.0	6.5	23.2
	대구/경북	102	6.7	16.2	14.4	3.0	13.2	36.1	10.2	23.0	17.4	13.2	36.1
	부산/울산/경남	154	6.6	15.6	16.1	6.4	11.0	33.0	11.4	22.2	22.5	11.0	33.0
	강원/제주	41	7.7	8.0	14.6	14.6	9.3	28.0	17.7	15.8	29.3	9.3	28.0
출생지별	서울	156	5.1	17.3	19.6	16.1	16.2	17.8	8.0	22.4	35.7	16.2	17.8
	인천/경기	138	8.2	12.7	20.9	9.7	13.0	26.7	8.8	21.0	30.6	13.0	26.7
	대전/충청	138	2.1	13.5	19.7	7.8	14.0	25.6	17.3	15.6	27.5	14.0	25.6
	광주/전라	188	6.7	18.1	19.0	6.5	9.2	23.5	16.9	24.8	25.5	9.2	23.5
	대구/경북	129	5.0	15.4	19.5	3.7	10.7	34.6	11.1	20.4	23.2	10.7	34.6
	부산/울산/경남	179	8.2	15.6	13.6	6.6	12.5	31.9	11.7	23.8	20.2	12.5	31.9
	강원/제주	60	8.5	16.8	17.0	11.9	9.9	23.7	12.1	25.3	28.9	9.9	23.7
	북한	6	15.2	10.5	0.0	13.1	0.0	30.9	30.3	25.7	13.1	0.0	30.9
	해외	6	0.0	0.0	0.0	0.0	19.7	33.3	47.0	0.0	0.0	19.7	33.3
학력별	중졸이하	137	4.5	12.0	7.2	3.8	2.1	33.8	36.6	16.5	11.0	2.1	33.8
	고졸	259	7.4	12.6	16.9	6.5	10.5	34.3	11.7	20.0	23.4	10.5	34.3
	대재이상	596	6.0	17.7	21.5	10.7	15.4	20.9	7.7	23.7	32.3	15.4	20.9
	모름/무응답	8	12.0	12.4	0.0	0.0	12.4	52.4	10.8	24.4	0.0	12.4	52.4
이념성향	진보	292	3.7	23.4	24.3	11.1	13.3	18.0	6.2	27.1	35.4	13.3	18.0
	중도	368	4.5	15.0	19.2	9.6	15.5	27.5	8.7	19.5	28.8	15.5	27.5
	보수	228	11.9	11.3	13.6	7.3	8.4	31.4	16.1	23.2	20.9	8.4	31.4
	모름/무응답	113	7.0	5.7	8.6	1.4	6.9	34.5	35.9	12.7	10.0	6.9	34.5
직업별	농/임/어업	36	9.8	22.4	10.3	4.5	0.0	23.0	30.0	32.2	14.9	0.0	23.0
	자영업	157	6.8	17.8	18.5	9.6	12.7	29.0	5.6	24.6	28.1	12.7	29.0
	블루칼라	152	8.6	17.4	16.9	7.7	7.7	33.3	8.2	26.1	24.7	7.7	33.3
	화이트칼라	271	4.4	15.9	19.8	12.5	19.9	20.9	6.6	20.4	32.3	19.9	20.9
	학생	76	5.6	10.9	23.9	11.8	24.5	18.2	5.1	16.5	35.7	24.5	18.2
	가사	212	6.6	12.9	16.5	3.7	4.7	30.4	25.3	19.4	20.2	4.7	30.4
	무직/기타	97	4.8	14.9	17.7	7.1	9.4	25.6	20.5	19.7	24.8	9.4	25.6
소득별	200만원 이하	189	5.0	12.5	8.1	3.8	4.6	36.4	29.5	17.5	12.0	4.6	36.4
	201~300만원	126	7.7	15.9	16.8	6.9	10.3	31.3	11.2	23.6	23.7	10.3	31.3
	301~400만원	165	8.5	13.3	24.4	9.5	16.3	21.8	6.2	21.9	33.8	16.3	21.8
	401~500만원	120	5.5	22.1	19.8	10.6	10.2	26.1	5.7	27.7	30.4	10.2	26.1
	501만원 이상	306	5.5	17.7	20.2	11.6	15.0	24.2	5.9	23.2	31.8	15.0	24.2
	모름/무응답	94	5.9	9.8	20.9	6.8	17.0	15.5	24.1	15.7	27.7	17.0	15.5
정보접촉경로	TV/라디오	432	4.4	14.9	15.8	7.4	8.2	32.3	17.1	19.3	23.2	8.2	32.3
	신문/잡지	60	6.4	20.9	21.6	6.3	11.9	19.3	13.6	27.3	27.9	11.9	19.3
	인터넷/SNS	476	7.4	15.5	20.8	10.6	16.9	21.2	7.6	22.9	31.4	16.9	21.2
	주변사람	17	17.1	12.8	4.9	0.0	0.0	50.2	15.0	29.8	4.9	0.0	50.2
	모름/무응답	15	6.5	19.2	6.5	0.0	0.0	23.4	44.3	25.8	6.5	0.0	23.4

[통일 예상시기]
(계속)

단위 : %		사례수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하다	모름/무응답	1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
◈ 전 체 ◈		1,000	6.2	15.6	18.2	8.6	12.3	26.4	12.7	21.8	26.8	12.3	26.4
통일필요 정도	필요	713	7.6	20.2	21.4	9.1	11.2	16.4	14.1	27.9	30.5	11.2	16.4
	불필요	265	3.0	3.4	10.8	7.1	15.1	52.7	7.9	6.4	17.9	15.1	52.7
	모름/무응답	21	0.0	10.2	4.7	9.1	14.9	35.3	25.9	10.2	13.8	14.9	35.3
통일 후 국가발전 공감정도	공감	578	8.2	21.9	22.6	9.7	11.1	13.3	13.1	30.1	32.3	11.1	13.3
	비공감	398	2.9	7.0	12.2	7.5	14.4	45.8	10.1	9.9	19.7	14.4	45.8
	모름/무응답	23	12.6	4.8	10.7	0.0	4.6	19.3	47.9	17.4	10.7	4.6	19.3
향후 남북관계 전망	좋아질 것	269	10.5	26.1	23.4	6.4	10.7	11.3	11.7	36.6	29.8	10.7	11.3
	변화없을 것	377	2.7	14.6	19.0	12.7	13.2	30.6	7.2	17.3	31.7	13.2	30.6
	나빠질 것	303	7.1	8.5	14.9	6.2	14.7	37.0	11.7	15.5	21.2	14.7	37.0
	모름/무응답	51	4.5	9.4	4.0	4.0	0.0	12.0	66.3	13.8	7.9	0.0	12.0
북한에 대한 인식	협력/지원 대상	305	6.8	24.4	24.8	12.2	13.6	8.2	10.2	31.1	36.9	13.6	8.2
	경계/적대 대상	487	5.7	13.4	16.2	6.8	13.1	32.9	11.9	19.1	23.1	13.1	32.9
	상관없는 대상	162	3.8	7.4	15.1	8.4	11.1	41.8	12.5	11.2	23.5	11.1	41.8
	모름/무응답	46	16.7	8.7	6.4	4.6	0.0	24.6	38.9	25.5	11.0	0.0	24.6
북한 개혁/개방 가능성	높다	337	9.1	26.3	23.3	8.7	10.0	12.1	10.6	35.3	32.0	10.0	12.1
	낮다	610	4.7	10.4	16.4	9.0	13.9	34.7	10.9	15.1	25.4	13.9	34.7
	모름/무응답	53	4.9	7.2	6.7	3.8	7.7	22.0	47.8	12.0	10.4	7.7	22.0
통일에 영향력 큰 나라	미국	387	7.6	14.7	17.2	9.8	13.2	26.2	11.3	22.3	27.0	13.2	26.2
	중국	475	5.9	18.8	21.2	7.9	11.8	23.7	10.7	24.7	29.1	11.8	23.7
	일본	20	0.0	16.0	21.4	0.0	25.8	19.0	17.8	16.0	21.4	25.8	19.0
	러시아	36	8.2	5.6	13.2	19.3	4.2	36.5	13.0	13.8	32.5	4.2	36.5
	기타	24	0.0	11.3	13.3	0.0	13.5	47.8	14.2	11.3	13.3	13.5	47.8
	모름/무응답	59	3.1	2.8	4.8	6.0	10.1	37.1	36.0	5.9	10.8	10.1	37.1
안보상황 인식	안정	167	7.2	19.7	29.2	12.3	13.0	11.5	7.2	26.8	41.5	13.0	11.5
	보통	269	3.4	20.5	18.8	9.1	15.6	23.1	9.4	23.9	27.9	15.6	23.1
	불안정	555	7.2	12.2	14.8	7.4	10.6	32.7	15.1	19.4	22.2	10.6	32.7
	모름/무응답	8	11.3	0.0	0.0	0.0	0.0	11.0	77.7	11.3	0.0	0.0	11.0
북한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공감	535	5.2	20.7	20.9	9.5	13.8	18.6	11.3	25.9	30.4	13.8	18.6
	비공감	417	7.6	9.9	16.1	8.2	10.7	35.8	11.7	17.5	24.3	10.7	35.8
	모름/무응답	48	5.5	7.5	6.2	2.1	9.3	31.8	37.7	13.0	8.3	9.3	31.8
북핵문제 해결방법	대화와 협상	334	7.0	20.5	20.0	9.5	12.0	16.9	14.1	27.5	29.5	12.0	16.9
	강력한 제재	461	5.8	13.8	19.6	10.2	13.3	27.7	9.6	19.5	29.8	13.3	27.7
	군사적 압박	157	6.0	13.5	14.8	3.2	11.7	39.2	11.6	19.5	18.0	11.7	39.2
	모름/무응답	48	5.7	5.2	3.9	4.0	6.5	37.6	37.3	10.9	7.8	6.5	37.6
대화 가능성 공감정도	공감	627	6.4	19.6	21.2	9.8	13.2	19.3	10.4	26.0	31.0	13.2	19.3
	비공감	347	5.8	9.4	13.8	7.1	11.2	39.0	13.7	15.3	20.9	11.2	39.0
	모름/무응답	26	6.6	0.0	3.5	0.0	5.1	29.3	55.5	6.6	3.5	5.1	29.3
올림픽 남북관계 개선영향	영향 있을 것	275	6.3	22.3	19.5	11.6	8.6	16.8	15.0	28.5	31.1	8.6	16.8
	영향 없을 것	684	6.2	13.8	18.2	7.8	14.5	30.6	8.9	20.0	26.0	14.5	30.6
	모름/무응답	41	6.6	0.0	8.9	1.7	0.0	20.8	62.0	6.6	10.7	0.0	20.8

[통일 후 국가발전 공감정도]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고, 잘살게 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매우 공감한다	대체로 공감한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모름/무응답	공감	비공감	평균 (4점)	평균 (100점)
◈ 전 체 ◈		1,000	23.8	34.0	27.3	12.6	2.3	57.8	39.9	2.71	56.90
성 별	남성	497	30.5	35.2	21.4	11.8	1.0	65.7	33.3	2.85	61.74
	여성	503	17.2	32.9	33.0	13.3	3.7	50.0	46.3	2.56	51.99
연령별	19~29세	176	9.6	36.5	37.8	15.4	0.7	46.1	53.2	2.41	46.85
	30대	174	16.3	38.3	27.8	17.1	0.6	54.5	44.8	2.54	51.37
	40대	203	25.9	38.4	23.8	11.1	0.9	64.2	34.9	2.80	59.90
	50대	201	27.3	34.4	23.4	13.0	1.8	61.7	36.4	2.77	59.13
	60대이상	246	34.7	25.4	25.5	8.2	6.3	60.1	33.6	2.92	64.15
거주지별	서울	197	20.3	36.8	30.4	10.5	2.0	57.1	40.9	2.68	56.10
	인천/경기	298	22.6	33.5	29.7	11.8	2.4	56.1	41.6	2.68	56.14
	대전/충청	106	21.9	35.7	26.4	13.4	2.6	57.6	39.8	2.68	55.97
	광주/전라	102	34.1	34.8	20.1	6.5	4.5	68.9	26.6	3.01	67.04
	대구/경북	102	21.0	35.9	18.6	21.3	3.3	56.9	39.8	2.59	52.86
	부산/울산/경남	154	25.9	30.0	29.5	13.5	1.2	55.9	43.0	2.69	56.36
	강원/제주	41	27.5	29.2	27.6	15.8	0.0	56.7	43.3	2.68	56.12
출생지별	서울	156	20.1	32.1	36.3	10.9	0.6	52.2	47.2	2.62	53.96
	인천/경기	138	18.5	36.4	26.6	15.4	3.0	54.9	42.1	2.60	53.29
	대전/충청	138	25.9	32.5	21.5	16.7	3.4	58.4	38.3	2.70	56.63
	광주/전라	188	31.9	31.7	27.1	6.4	3.0	63.6	33.5	2.92	63.93
	대구/경북	129	20.0	40.6	21.0	16.4	1.9	60.7	37.4	2.66	55.18
	부산/울산/경남	179	22.8	33.2	29.4	12.7	2.0	55.9	42.1	2.67	55.79
	강원/제주	60	23.2	32.1	28.6	14.1	1.9	55.4	42.8	2.66	55.24
	북한	6	44.0	45.5	10.5	0.0	0.0	89.5	10.5	3.34	77.84
	해외	6	33.3	30.1	19.7	0.0	16.9	63.4	19.7	3.16	72.12
학력별	중졸이하	137	32.0	27.4	18.6	11.9	10.1	59.4	30.6	2.88	62.78
	고졸	259	24.9	29.0	32.6	11.7	1.8	53.9	44.4	2.68	56.07
	대재이상	596	21.6	37.9	26.7	13.1	0.7	59.5	39.8	2.68	56.16
	모름/무응답	8	12.4	24.4	40.4	12.0	10.8	36.8	52.4	2.42	47.24
이념성향	진보	292	27.9	38.0	25.3	8.2	0.6	65.9	33.4	2.86	62.07
	중도	368	19.9	37.0	28.4	13.9	0.8	56.9	42.3	2.63	54.48
	보수	228	23.8	29.0	29.0	15.6	2.6	52.9	44.5	2.63	54.26
	모름/무응답	113	25.7	24.1	25.3	13.5	11.3	49.8	38.9	2.70	56.62
직업별	농/임/어업	36	37.0	30.6	13.0	7.4	12.0	67.6	20.3	3.11	70.20
	자영업	157	28.3	33.5	22.7	14.9	0.5	61.8	37.6	2.76	58.54
	블루칼라	152	21.8	31.1	30.7	15.7	0.7	52.9	46.4	2.60	53.17
	화이트칼라	271	23.0	37.2	26.4	12.9	0.4	60.2	39.3	2.71	56.89
	학생	76	10.4	45.0	26.4	16.5	1.7	55.4	42.9	2.50	50.08
	가사	212	22.2	31.5	30.1	10.4	5.8	53.7	40.5	2.70	56.53
	무직/기타	97	30.6	28.9	31.2	6.6	2.7	59.5	37.8	2.86	61.90
소득별	200만원 이하	189	30.3	26.2	25.1	11.2	7.2	56.5	36.3	2.82	60.51
	201~300만원	126	26.6	36.6	22.1	12.2	2.6	63.2	34.3	2.80	59.86
	301~400만원	165	14.8	39.1	35.0	10.6	0.5	53.9	45.6	2.58	52.81
	401~500만원	120	29.7	29.9	24.6	14.9	0.9	59.6	39.5	2.75	58.38
	501만원 이상	306	21.9	35.4	26.8	15.3	0.6	57.3	42.1	2.64	54.78
	모름/무응답	94	21.2	38.5	29.8	7.5	3.0	59.7	37.3	2.76	58.56
정보접촉 경로	TV/라디오	432	27.2	31.8	24.8	12.1	4.1	59.0	37.0	2.77	59.05
	신문/잡지	60	29.5	32.8	25.5	12.3	0.0	62.2	37.8	2.79	59.80
	인터넷/SNS	476	20.0	36.6	30.0	12.5	1.0	56.6	42.4	2.65	54.93
	주변사람	17	29.4	14.5	21.9	28.5	5.7	44.0	50.3	2.48	49.22
	모름/무응답	15	17.4	45.6	25.3	11.7	0.0	63.0	37.0	2.69	56.24

[통일 후 국가발전 공감정도]

(계속)

단위 : %		사례수	매우 공감한다	대체로 공감한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모름/무응답	공감	비공감	평균 (4점)	평균 (100점)
◈ 전 체 ◈		1,000	23.8	34.0	27.3	12.6	2.3	57.8	39.9	2.71	56.90
통일필요 정도	필요	713	31.2	41.0	21.0	4.4	2.5	72.2	25.3	3.02	67.17
	불필요	265	5.8	16.7	42.8	33.2	1.5	22.5	76.0	1.95	31.67
	모름/무응답	21	0.0	17.5	44.4	29.9	8.2	17.5	74.3	1.87	28.85
통일예상 시기	10년 이내	218	37.6	42.3	14.3	3.9	1.9	79.9	18.2	3.16	71.93
	30년 이내	268	22.0	47.8	24.2	5.1	0.9	69.7	29.4	2.87	62.45
	30년 이상	123	16.0	36.3	36.0	10.8	0.9	52.3	46.8	2.58	52.65
	불가능	264	15.9	13.3	38.4	30.6	1.7	29.2	69.0	2.15	38.28
	모름/무응답	127	27.8	31.8	24.3	7.3	8.8	59.6	31.6	2.88	62.64
향후 남북관계 전망	좋아질 것	269	42.3	40.8	12.6	2.9	1.4	83.0	15.5	3.24	74.72
	변화없을 것	377	12.6	35.9	35.3	15.6	0.7	48.5	50.8	2.46	48.62
	나빠질 것	303	17.7	28.2	32.4	18.9	2.8	45.9	51.3	2.46	48.66
	모름/무응답	51	45.3	19.3	14.7	3.6	17.0	64.6	18.4	3.28	76.04
북한에 대한 인식	협력/지원 대상	305	38.4	44.0	14.3	2.4	1.0	82.4	16.6	3.20	73.19
	경계/적대 대상	487	18.4	31.7	32.1	16.1	1.7	50.2	48.1	2.53	51.15
	상관없는 대상	162	13.9	23.2	37.9	23.3	1.7	37.1	61.2	2.28	42.72
	모름/무응답	46	18.9	30.4	24.6	5.5	20.6	49.3	30.1	2.79	59.67
북한 개혁/개방 가능성	높다	337	35.4	37.2	20.9	5.9	0.6	72.6	26.8	3.03	67.56
	낮다	610	17.7	33.0	31.5	16.4	1.4	50.6	48.0	2.53	50.88
	모름/무응답	53	20.6	26.0	18.6	10.6	24.2	46.6	29.2	2.75	58.21
통일에 영향력 큰 나라	미국	387	23.4	33.3	28.9	12.7	1.8	56.6	41.6	2.69	56.19
	중국	475	25.1	37.8	25.4	10.9	0.9	62.9	36.3	2.78	59.26
	일본	20	39.8	36.4	19.6	4.2	0.0	76.2	23.8	3.12	70.61
	러시아	36	16.3	30.3	34.3	16.7	2.4	46.6	51.0	2.47	49.14
	기타	24	11.6	20.2	34.3	33.9	0.0	31.8	68.2	2.10	36.54
	모름/무응답	59	20.1	15.7	26.9	17.6	19.7	35.8	44.5	2.48	49.27
안보상황 인식	안정	167	33.3	42.4	18.3	4.9	1.2	75.7	23.2	3.05	68.43
	보통	269	23.3	38.7	29.1	8.6	0.3	62.0	37.7	2.77	58.95
	불안정	555	21.2	29.5	29.1	17.0	3.2	50.7	46.1	2.57	52.23
	모름/무응답	8	23.6	18.9	23.6	0.0	33.9	42.5	23.6	3.00	66.67
북한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공감	535	28.4	40.8	22.2	7.5	1.1	69.2	29.7	2.91	63.68
	비공감	417	18.9	26.2	33.7	19.1	2.0	45.2	52.9	2.46	48.64
	모름/무응답	48	15.0	26.5	27.1	12.0	19.3	41.5	39.1	2.55	51.74
북핵문제 해결방법	대화와 협상	334	33.9	38.1	18.8	6.2	2.9	72.1	25.0	3.03	67.61
	강력한 제재	461	18.3	35.4	31.6	13.3	1.4	53.7	44.9	2.60	53.19
	군사적 압박	157	19.6	24.0	34.9	20.9	0.6	43.7	55.8	2.43	47.52
	모름/무응답	48	19.3	25.5	19.5	22.6	13.2	44.7	42.0	2.48	49.25
대화 가능성 공감정도	공감	627	28.0	38.7	23.3	8.7	1.4	66.6	32.0	2.87	62.38
	비공감	347	16.7	26.4	35.5	19.5	1.9	43.1	55.0	2.41	47.04
	모름/무응답	26	17.4	24.0	14.0	13.3	31.3	41.4	27.3	2.66	55.40
올림픽 남북관계 개선영향	영향 있을 것	275	32.1	39.6	19.1	8.2	1.0	71.7	27.3	2.97	65.51
	영향 없을 것	684	20.5	31.8	31.7	14.4	1.7	52.3	46.0	2.59	53.14
	모름/무응답	41	23.4	33.1	8.9	12.0	22.6	56.6	20.9	2.88	62.60

[향후 남북관계 전망]

향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매우 좋아질 것이다	다소 좋아질 것이다	변화 없을 것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매우 나빠질 것이다	모름/ 무응답	좋아질 것	변화 없을 것	나빠질 것	평균 (5점)	평균 (100점)
◈ 전 체 ◈		1,000	4.0	23.0	37.7	20.3	10.0	5.0	27.0	37.7	30.3	2.90	47.51
성 별	남성	497	6.1	22.2	34.2	20.8	12.7	4.1	28.3	34.2	33.5	2.88	46.94
	여성	503	1.8	23.8	41.2	19.7	7.4	6.0	25.6	41.2	27.2	2.92	48.08
연령별	19~29세	176	1.9	14.9	53.6	22.0	5.2	2.4	16.8	53.6	27.2	2.86	46.47
	30대	174	1.3	26.0	46.2	19.3	7.2	0.0	27.3	46.2	26.5	2.95	48.76
	40대	203	8.0	23.5	36.2	18.1	10.9	3.2	31.5	36.2	29.0	2.99	49.85
	50대	201	4.5	27.7	31.5	17.8	15.6	2.8	32.3	31.5	33.4	2.88	46.88
	60대이상	246	3.5	22.3	26.7	23.4	10.3	13.8	25.7	26.7	33.7	2.83	45.72
거주지별	서울	197	4.7	19.5	39.2	19.5	10.7	6.4	24.2	39.2	30.2	2.87	46.81
	인천/경기	298	2.3	23.2	37.2	20.5	11.9	4.9	25.5	37.2	32.4	2.83	45.63
	대전/충청	106	3.6	22.5	32.4	25.3	8.8	7.4	26.2	32.4	34.1	2.86	46.45
	광주/전라	102	6.5	31.7	36.9	12.9	6.9	5.1	38.1	36.9	19.8	3.19	54.72
	대구/경북	102	5.2	18.5	43.8	21.9	8.3	2.4	23.7	43.8	30.1	2.90	47.56
	부산/울산/경남	154	4.6	27.1	34.2	20.1	9.6	4.4	31.7	34.2	29.7	2.97	49.25
	강원/제주	41	1.2	13.6	48.4	23.9	10.5	2.4	14.8	48.4	34.4	2.70	42.60
출생지별	서울	156	5.2	13.8	46.8	22.1	8.8	3.2	19.1	46.8	30.9	2.84	46.04
	인천/경기	138	0.0	23.4	37.8	20.8	13.8	4.2	23.4	37.8	34.6	2.74	43.47
	대전/충청	138	2.8	22.3	31.9	22.5	10.6	9.8	25.1	31.9	33.1	2.82	45.60
	광주/전라	188	5.6	31.7	34.3	14.0	7.1	7.3	37.3	34.3	21.1	3.16	53.97
	대구/경북	129	4.1	18.4	42.5	22.0	10.4	2.7	22.5	42.5	32.3	2.83	45.85
	부산/울산/경남	179	4.8	26.7	34.9	19.2	10.6	3.9	31.4	34.9	29.8	2.96	48.91
	강원/제주	60	2.3	18.5	40.3	26.6	10.6	1.7	20.8	40.3	37.2	2.75	43.71
	북한	6	15.2	0.0	15.2	54.5	0.0	15.2	15.2	15.2	54.5	2.71	42.87
	해외	6	15.0	48.3	19.7	0.0	16.9	0.0	63.4	19.7	16.9	3.45	61.15
학력별	중졸이하	137	7.0	25.3	22.9	19.1	7.5	18.3	32.2	22.9	26.6	3.06	51.55
	고졸	259	3.0	21.9	39.6	21.1	12.1	2.4	24.9	39.6	33.1	2.82	45.56
	대재이상	596	3.7	22.7	40.5	20.0	9.9	3.1	26.5	40.5	29.9	2.90	47.52
	모름/무응답	8	0.0	36.8	22.3	30.1	0.0	10.8	36.8	22.3	30.1	3.07	51.86
이념성향	진보	292	5.2	32.1	38.4	14.6	6.6	3.1	37.2	38.4	21.2	3.15	53.77
	중도	368	2.9	18.5	45.0	20.7	9.7	3.3	21.4	45.0	30.4	2.84	45.92
	보수	228	3.1	19.9	29.0	27.6	14.7	5.7	23.0	29.0	42.3	2.67	41.83
	모름/무응답	113	6.0	20.1	29.8	18.4	10.9	14.7	26.1	29.8	29.3	2.90	47.61
직업별	농/임/어업	36	7.2	27.0	28.2	15.5	4.8	17.4	34.1	28.2	20.4	3.19	54.86
	자영업	157	4.3	24.2	40.9	15.9	14.0	0.6	28.5	40.9	29.9	2.89	47.22
	블루칼라	152	6.2	20.1	37.8	24.4	9.2	2.3	26.3	37.8	33.5	2.90	47.38
	화이트칼라	271	3.7	23.3	42.2	17.4	10.5	2.9	27.0	42.2	27.9	2.92	48.01
	학생	76	3.1	14.7	43.1	29.6	6.0	3.6	17.8	43.1	35.5	2.79	44.64
	가사	212	1.7	27.0	33.6	20.9	6.3	10.5	28.7	33.6	27.2	2.97	49.16
	무직/기타	97	5.0	20.4	28.3	22.0	17.0	7.2	25.5	28.3	39.0	2.73	43.13
소득별	200만원 이하	189	6.5	22.6	29.3	19.8	8.7	13.1	29.1	29.3	28.5	2.98	49.55
	201~300만원	126	2.2	19.1	40.7	23.1	10.4	4.6	21.3	40.7	33.4	2.79	44.66
	301~400만원	165	2.3	29.9	39.4	19.2	8.7	0.6	32.2	39.4	27.9	2.98	49.47
	401~500만원	120	5.3	22.6	40.7	20.7	9.9	0.8	27.9	40.7	30.6	2.93	48.15
	501만원 이상	306	3.4	19.7	40.4	21.0	11.7	3.7	23.2	40.4	32.8	2.81	45.33
	모름/무응답	94	4.2	27.6	35.4	16.2	9.4	7.2	31.8	35.4	25.5	3.01	50.32
정보접촉 경로	TV/라디오	432	4.0	22.2	37.8	18.5	9.2	8.3	26.3	37.8	27.6	2.93	48.23
	신문/잡지	60	1.8	14.4	30.5	28.4	17.2	7.7	16.2	30.5	45.6	2.51	37.85
	인터넷/SNS	476	3.8	24.5	39.0	20.8	10.2	1.7	28.4	39.0	31.0	2.91	47.71
	주변사람	17	5.7	25.4	28.8	22.9	11.6	5.7	31.1	28.8	34.5	2.90	47.53
	모름/무응답	15	12.0	25.8	36.2	19.0	0.0	7.0	37.8	36.2	19.0	3.33	58.26

[향후 남북관계 전망]
(계속)

단위 : %		사례수	매우 좋아질 것이다	다소 좋아질 것이다	변화 없을 것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매우 나빠질 것이다	모름/ 무응답	좋아질 것	변화 없을 것	나빠질 것	평균 (5점)	평균 (100점)
◈전 체◈		1,000	4.0	23.0	37.7	20.3	10.0	5.0	27.0	37.7	30.3	2.90	47.51
통일필요 정도	필요	713	5.2	28.5	33.4	18.1	8.6	6.2	33.7	33.4	26.7	3.04	50.95
	불필요	265	0.9	8.7	48.6	26.2	14.0	1.6	9.6	48.6	40.2	2.56	38.90
	모름/무응답	21	0.0	16.8	47.9	17.7	9.3	8.3	16.8	47.9	26.9	2.79	44.72
통일예상 시기	10년 이내	218	8.0	37.2	30.0	12.5	9.1	3.2	45.2	30.0	21.6	3.23	55.84
	30년 이내	268	3.6	26.3	44.6	21.4	2.5	1.5	29.9	44.6	23.9	3.07	51.80
	30년 이상	123	2.5	20.9	40.5	22.5	13.6	0.0	23.4	40.5	36.1	2.76	44.03
	불가능	264	1.7	9.8	43.8	26.4	16.1	2.3	11.5	43.8	42.4	2.54	38.40
	모름/무응답	127	3.8	20.9	21.2	16.2	11.6	26.3	24.7	21.2	27.8	2.85	46.28
통일 후 국가발전 공감정도	공감	578	6.6	32.1	31.6	16.5	7.6	5.7	38.7	31.6	24.1	3.14	53.60
	비공감	398	0.4	10.1	48.1	25.6	13.4	2.3	10.5	48.1	39.0	2.57	39.36
	모름/무응답	23	0.0	16.2	11.5	22.5	13.2	36.7	16.2	11.5	35.7	2.48	37.10
북한에 대한 인식	협력/지원 대상	305	9.7	38.8	36.0	8.2	2.6	4.8	48.5	36.0	10.7	3.47	61.79
	경계/적대 대상	487	1.6	15.3	36.2	28.2	15.0	3.6	17.0	36.2	43.2	2.59	39.71
	상관없는 대상	162	0.0	16.9	49.4	20.5	8.9	4.2	16.9	49.4	29.5	2.78	44.40
	모름/무응답	46	4.4	20.3	24.2	15.2	10.7	25.2	24.7	24.2	25.9	2.90	47.47
북한 개혁/개방 가능성	높다	337	8.7	38.3	28.9	15.4	5.5	3.2	47.0	28.9	20.9	3.30	57.59
	낮다	610	1.3	14.5	44.4	23.1	12.7	3.8	15.8	44.4	35.9	2.67	41.82
	모름/무응답	53	3.8	22.7	16.4	18.2	7.9	31.1	26.4	16.4	26.1	2.95	48.65
통일에 영향력 큰 나라	미국	387	5.3	23.9	36.3	20.4	11.0	3.1	29.2	36.3	31.3	2.92	48.00
	중국	475	3.2	23.6	37.5	21.5	9.5	4.8	26.7	37.5	31.0	2.89	47.23
	일본	20	9.8	26.3	49.5	9.6	0.0	4.8	36.1	49.5	9.6	3.38	59.54
	러시아	36	2.8	22.1	51.7	15.3	2.8	5.3	24.9	51.7	18.1	3.07	51.80
	기타	24	0.0	16.7	41.4	14.4	23.3	4.3	16.7	41.4	37.7	2.54	38.41
	모름/무응답	59	1.7	13.7	34.8	18.6	11.0	20.1	15.4	34.8	29.7	2.70	42.62
안보상황 인식	안정	167	11.7	31.4	37.7	13.2	3.1	2.9	43.1	37.7	16.3	3.37	59.16
	보통	269	3.1	27.4	47.0	15.4	3.2	4.0	30.5	47.0	18.5	3.12	53.09
	불안정	555	1.9	18.3	33.8	24.9	15.6	5.5	20.2	33.8	40.5	2.64	40.99
	모름/무응답	8	11.3	23.4	0.0	11.0	0.0	54.3	34.7	0.0	11.0	3.77	69.15
북한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공감	535	6.0	31.0	37.7	16.1	5.3	4.0	36.9	37.7	21.4	3.17	54.21
	비공감	417	1.4	13.2	38.3	26.0	16.6	4.5	14.6	38.3	42.6	2.55	38.71
	모름/무응답	48	3.7	18.7	33.0	16.8	6.0	21.8	22.4	33.0	22.7	2.97	49.16
북핵문제 해결방법	대화와 협상	334	8.2	36.6	32.9	10.8	4.6	6.9	44.8	32.9	15.4	3.35	58.84
	강력한 제재	461	2.0	18.5	43.1	24.6	9.4	2.3	20.5	43.1	34.0	2.79	44.67
	군사적 압박	157	1.3	9.5	33.2	27.0	23.5	5.5	10.8	33.2	50.5	2.34	33.61
	모름/무응답	48	2.1	14.6	34.3	21.7	10.3	17.1	16.6	34.3	32.0	2.72	42.88
대화 가능성 공감정도	공감	627	5.7	30.3	38.7	16.1	4.9	4.3	36.0	38.7	20.9	3.17	54.17
	비공감	347	0.8	10.2	37.2	27.8	19.9	4.1	11.0	37.2	47.7	2.42	35.45
	모름/무응답	26	3.3	16.4	21.2	20.2	3.7	35.3	19.6	21.2	23.8	2.93	48.22
올림픽 남북관계 개선영향	영향 있을 것	275	8.3	39.2	29.7	13.2	5.0	4.7	47.5	29.7	18.1	3.34	58.59
	영향 없을 것	684	2.4	16.0	42.4	23.4	12.3	3.5	18.4	42.4	35.7	2.72	42.97
	모름/무응답	41	0.0	30.3	14.5	15.1	6.8	33.3	30.3	14.5	21.9	3.02	50.61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협력 내지 지원 대상이다	경계 내지 적대 대상이다	상관없는 대상이다	모름/무응답
◈ 전 체 ◈		1,000	30.5	48.7	16.2	4.6
성 별	남성	497	29.9	51.8	15.8	2.5
	여성	503	31.0	45.7	16.5	6.7
연령별	19~29세	176	22.2	59.3	17.2	1.3
	30대	174	40.0	43.7	15.0	1.3
	40대	203	43.0	41.3	11.9	3.8
	50대	201	32.4	50.3	14.9	2.4
	60대이상	246	17.8	49.5	20.8	11.8
거주지별	서울	197	33.2	46.1	14.0	6.7
	인천/경기	298	28.6	52.0	14.8	4.6
	대전/충청	106	31.0	50.9	15.3	2.8
	광주/전라	102	50.5	26.1	18.0	5.4
	대구/경북	102	22.6	56.1	18.0	3.3
	부산/울산/경남	154	24.6	52.1	19.3	3.9
	강원/제주	41	21.5	57.1	18.2	3.3
출생지별	서울	156	28.7	55.0	11.6	4.6
	인천/경기	138	25.8	55.1	17.1	2.0
	대전/충청	138	30.0	51.7	14.7	3.6
	광주/전라	188	43.8	29.9	19.2	7.2
	대구/경북	129	26.7	54.7	14.6	4.0
	부산/울산/경남	179	25.7	52.5	18.9	2.9
	강원/제주	60	27.3	48.0	17.1	7.6
	북한	6	30.3	39.4	15.2	15.2
	해외	6	31.7	36.4	0.0	31.9
학력별	중졸이하	137	16.8	39.8	28.2	15.2
	고졸	259	25.1	56.7	15.6	2.7
	대재이상	596	35.8	47.7	13.8	2.8
	모름/무응답	8	42.9	21.3	12.0	23.9
이념성향	진보	292	48.0	36.9	13.6	1.5
	중도	368	27.2	53.4	15.8	3.5
	보수	228	16.4	62.8	17.0	3.8
	모름/무응답	113	24.2	35.4	22.5	17.8
직업별	농/임/어업	36	28.3	37.5	26.7	7.5
	자영업	157	31.3	48.1	15.3	5.2
	블루칼라	152	26.6	53.5	18.5	1.4
	화이트칼라	271	41.7	44.5	12.3	1.6
	학생	76	23.5	62.0	11.5	3.0
	가사	212	25.4	47.7	15.7	11.2
	무직/기타	97	21.1	50.1	25.7	3.1
소득별	200만원 이하	189	20.0	46.4	23.2	10.5
	201~300만원	126	30.8	48.6	15.2	5.4
	301~400만원	165	31.0	55.0	12.9	1.0
	401~500만원	120	39.8	45.8	12.0	2.4
	501만원 이상	306	32.4	50.4	14.2	2.9
	모름/무응답	94	32.0	40.6	21.2	6.2
정보접촉 경로	TV/라디오	432	28.4	47.7	17.1	6.9
	신문/잡지	60	16.6	62.6	17.5	3.3
	인터넷/SNS	476	34.6	48.9	14.6	1.9
	주변사람	17	28.8	16.0	29.7	25.4
	모름/무응답	15	18.2	55.4	19.3	7.0

[북한에 대한 인식]
(계속)

단위 : %		사례수	협력 내지 지원 대상이다	경계 내지 적대 대상이다	상관없는 대상이다	모름/무응답
◈ 전 체 ◈		1,000	30.5	48.7	16.2	4.6
통일필요 정도	필요	713	37.9	46.2	10.5	5.3
	불필요	265	10.5	56.8	30.5	2.3
	모름/무응답	21	29.8	31.5	28.4	10.4
통일예상 시기	10년 이내	218	43.6	42.7	8.3	5.4
	30년 이내	268	42.0	41.9	14.2	1.9
	30년 이상	123	33.7	51.8	14.6	0.0
	불가능	264	9.4	60.6	25.6	4.3
	모름/무응답	127	24.4	45.7	15.8	14.1
통일 후 국가발전 공감정도	공감	578	43.4	42.3	10.4	3.9
	비공감	398	12.7	58.9	24.9	3.5
	모름/무응답	23	12.6	35.3	11.5	40.6
향후 남북관계 전망	좋아질 것	269	54.9	30.7	10.2	4.2
	변화없을 것	377	29.1	46.7	21.2	3.0
	나빠질 것	303	10.8	69.5	15.7	3.9
	모름/무응답	51	28.7	34.9	13.4	23.0
북한 개혁/개방 가능성	높다	337	49.0	36.4	11.3	3.3
	낮다	610	20.9	56.5	18.8	3.8
	모름/무응답	53	22.7	37.5	17.7	22.2
통일에 영향력 큰 나라	미국	387	27.8	54.4	13.5	4.2
	중국	475	35.8	45.8	15.1	3.3
	일본	20	26.0	44.9	29.0	0.0
	러시아	36	17.9	46.7	32.7	2.7
	기타	24	13.3	49.3	29.9	7.5
	모름/무응답	59	20.9	37.5	22.6	19.1
안보상황 인식	안정	167	53.0	32.1	11.4	3.5
	보통	269	36.7	42.0	19.6	1.7
	불안정	555	20.7	57.3	16.2	5.7
	모름/무응답	8	23.6	29.6	0.0	46.8
북한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공감	535	43.5	40.1	13.4	3.0
	비공감	417	13.9	62.5	19.6	4.0
	모름/무응답	48	29.3	25.4	17.6	27.7
북핵문제 해결방법	대화와 협상	334	53.4	29.8	13.1	3.7
	강력한 제재	461	23.1	59.1	14.0	3.8
	군사적 압박	157	7.1	64.1	26.4	2.4
	모름/무응답	48	17.7	30.5	26.0	25.8
대화 가능성 공감정도	공감	627	42.7	40.0	13.8	3.5
	비공감	347	8.3	67.1	20.8	3.8
	모름/무응답	26	32.6	14.1	10.8	42.5
올림픽 남북관계 개선영향	영향 있을 것	275	43.3	39.1	12.4	5.1
	영향 없을 것	684	25.6	53.3	17.7	3.4
	모름/무응답	41	26.0	36.5	15.4	22.0

[향후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

향후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름/무응답	높다	낮다	평균 (4점)	평균 (100점)
◈ 전 체 ◈		1,000	7.3	26.5	29.1	31.9	5.2	33.8	61.0	2.10	36.54
성 별	남성	497	9.2	24.5	27.7	35.5	3.0	33.7	63.2	2.08	35.90
	여성	503	5.3	28.4	30.5	28.3	7.5	33.7	58.8	2.12	37.19
연령별	19~29세	176	2.4	24.6	39.9	31.9	1.1	27.0	71.9	1.97	32.49
	30대	174	5.8	33.3	28.8	30.3	1.8	39.1	59.1	2.15	38.32
	40대	203	13.6	25.0	25.7	32.4	3.3	38.6	58.1	2.21	40.18
	50대	201	7.8	27.2	26.1	34.3	4.6	35.0	60.4	2.09	36.28
	60대이상	246	6.1	23.6	26.9	30.6	12.8	29.7	57.5	2.06	35.29
거주지별	서울	197	7.6	23.6	31.9	32.4	4.5	31.2	64.2	2.07	35.60
	인천/경기	298	9.9	24.2	28.2	34.8	2.9	34.0	63.0	2.09	36.46
	대전/충청	106	4.4	30.7	29.9	30.0	4.9	35.1	60.0	2.10	36.68
	광주/전라	102	5.1	37.9	26.2	23.8	7.1	43.0	49.9	2.26	42.07
	대구/경북	102	5.4	18.8	27.0	41.1	7.7	24.2	68.2	1.88	29.18
	부산/울산/경남	154	7.6	27.0	29.9	27.9	7.7	34.5	57.8	2.15	38.45
	강원/제주	41	2.4	34.8	30.3	25.1	7.3	37.2	55.4	2.16	38.57
출생지별	서울	156	7.8	27.9	28.8	32.3	3.2	35.7	61.1	2.11	37.16
	인천/경기	138	8.5	19.5	34.5	34.8	2.7	28.0	69.3	2.02	33.94
	대전/충청	138	6.2	31.4	23.7	33.4	5.3	37.6	57.1	2.11	37.01
	광주/전라	188	7.5	32.5	33.2	21.5	5.3	40.0	54.7	2.27	42.49
	대구/경북	129	6.0	20.6	29.7	37.5	6.2	26.6	67.2	1.95	31.60
	부산/울산/경남	179	7.1	24.2	27.2	33.2	8.3	31.3	60.4	2.06	35.22
	강원/제주	60	8.0	30.3	24.4	34.0	3.3	38.3	58.4	2.13	37.55
	북한	6	0.0	10.5	30.3	59.2	0.0	10.5	89.5	1.51	17.10
	해외	6	15.0	16.7	0.0	34.8	33.6	31.7	34.8	2.18	39.33
학력별	중졸이하	137	5.4	21.1	24.8	29.4	19.4	26.4	54.2	2.03	34.34
	고졸	259	5.7	24.5	28.0	37.5	4.3	30.2	65.5	1.98	32.80
	대재이상	596	8.5	28.6	30.5	30.2	2.2	37.0	60.7	2.16	38.55
	모름/무응답	8	0.0	24.8	33.2	19.2	22.8	24.8	52.4	2.07	35.76
이념성향	진보	292	8.1	38.4	28.8	22.7	1.9	46.5	51.5	2.33	44.19
	중도	368	5.9	24.6	31.5	34.7	3.3	30.5	66.2	2.02	33.94
	보수	228	9.7	19.7	26.5	40.0	4.0	29.5	66.6	1.99	33.06
	모름/무응답	113	4.5	15.1	27.4	30.1	23.0	19.5	57.5	1.92	30.70
직업별	농/임/어업	36	13.1	16.5	27.7	17.8	24.8	29.7	45.5	2.33	44.41
	자영업	157	10.0	23.9	26.3	36.0	3.9	33.9	62.2	2.08	36.09
	블루칼라	152	8.3	23.3	28.1	38.5	1.8	31.6	66.6	2.01	33.80
	화이트칼라	271	7.8	31.0	28.2	31.9	1.2	38.8	60.0	2.15	38.29
	학생	76	2.6	29.1	40.0	26.7	1.7	31.6	66.7	2.08	35.89
	가사	212	4.8	26.7	29.2	27.6	11.6	31.5	56.8	2.10	36.62
	무직/기타	97	6.6	24.0	29.8	33.6	6.0	30.6	63.4	2.04	34.61
소득별	200만원 이하	189	7.7	19.9	26.1	31.0	15.3	27.6	57.1	2.05	35.06
	201~300만원	126	6.0	31.5	24.7	34.7	3.1	37.5	59.4	2.09	36.34
	301~400만원	165	5.9	27.2	34.9	27.9	4.0	33.2	62.9	2.12	37.19
	401~500만원	120	8.1	30.9	29.4	30.7	0.8	39.0	60.2	2.17	38.84
	501만원 이상	306	8.1	25.2	29.3	35.4	1.9	33.4	64.7	2.06	35.39
	모름/무응답	94	6.6	29.9	29.8	26.8	6.9	36.5	56.7	2.17	39.12
정보접촉 경로	TV/라디오	432	7.2	25.4	27.7	31.0	8.6	32.7	58.7	2.10	36.58
	신문/잡지	60	4.7	18.2	34.3	36.6	6.1	22.9	71.0	1.90	30.13
	인터넷/SNS	476	7.5	28.3	30.0	32.1	2.1	35.8	62.1	2.11	37.16
	주변사람	17	10.7	23.8	26.1	33.6	5.7	34.6	59.7	2.12	37.47
	모름/무응답	15	6.5	33.1	23.4	29.9	7.0	39.6	53.3	2.17	39.15

[향후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
(계속)

단위 : %		사례수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름/무응답	높다	낮다	평균(4점)	평균(100점)
◈ 전 체 ◈		1,000	7.3	26.5	29.1	31.9	5.2	33.8	61.0	2.10	36.54
통일필요 정도	필요	713	9.1	29.7	30.0	26.3	5.0	38.8	56.2	2.23	40.93
	불필요	265	2.4	19.2	26.7	47.4	4.4	21.6	74.0	1.75	25.16
	모름/무응답	21	5.9	9.5	30.7	27.7	26.2	15.4	58.4	1.91	30.41
통일예상 시기	10년 이내	218	17.0	37.7	22.1	20.2	2.9	54.7	42.3	2.53	51.01
	30년 이내	268	6.4	33.8	37.0	20.8	2.1	40.2	57.7	2.26	42.12
	30년 이상	123	3.0	24.5	38.9	30.3	3.3	27.5	69.2	2.00	33.37
	불가능	264	3.1	12.4	25.6	54.6	4.4	15.4	80.2	1.62	20.74
	모름/무응답	127	5.3	22.8	22.5	29.6	19.8	28.1	52.1	2.05	34.90
통일 후 국가발전 공감정도	공감	578	10.0	32.4	29.4	24.0	4.2	42.3	53.4	2.30	43.18
	비공감	398	3.8	18.9	29.5	44.0	3.9	22.7	73.4	1.82	27.26
	모름/무응답	23	0.0	8.5	16.7	20.2	54.5	8.5	36.9	1.74	24.78
향후 남북관계 전망	좋아질 것	269	16.0	43.0	26.2	9.7	5.2	58.9	35.9	2.69	56.24
	변화없을 것	377	3.1	22.7	36.6	35.3	2.3	25.9	71.9	1.94	31.20
	나빠질 것	303	4.9	18.3	23.3	48.9	4.5	23.2	72.2	1.78	26.07
	모름/무응답	51	5.9	15.3	23.8	22.7	32.4	21.1	46.5	2.06	35.43
북한에 대한 인식	협력/지원 대상	305	13.6	40.6	26.1	15.8	3.9	54.2	41.8	2.54	51.40
	경계/적대 대상	487	4.1	21.1	30.5	40.3	4.1	25.2	70.7	1.89	29.53
	상관없는 대상	162	4.9	18.6	32.8	37.9	5.8	23.6	70.7	1.90	29.99
	모름/무응답	46	6.7	17.1	22.1	28.7	25.4	23.8	50.8	2.02	34.15
통일에 영향력 큰 나라	미국	387	8.1	27.6	28.3	31.5	4.5	35.7	59.8	2.13	37.64
	중국	475	7.0	29.0	29.9	30.7	3.4	36.0	60.6	2.13	37.58
	일본	20	5.4	16.2	45.2	28.4	4.8	21.6	73.6	1.99	32.85
	러시아	36	8.9	28.3	30.3	27.3	5.2	37.2	57.6	2.20	39.97
	기타	24	7.2	4.3	33.4	55.1	0.0	11.4	88.6	1.63	21.17
	모름/무응답	59	3.4	9.4	20.6	38.5	28.0	12.8	59.2	1.69	22.98
안보상황 인식	안정	167	15.9	33.7	28.5	18.9	3.1	49.5	47.4	2.48	49.34
	보통	269	4.7	31.9	32.4	26.3	4.7	36.6	58.7	2.16	38.58
	불안정	555	6.0	21.9	27.7	38.7	5.8	27.9	66.3	1.95	31.64
	모름/무응답	8	0.0	12.6	31.2	22.3	33.9	12.6	53.5	1.85	28.41
북한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공감	535	8.2	32.9	31.0	24.0	4.0	41.0	55.0	2.26	42.09
	비공감	417	6.1	20.1	27.8	42.2	3.7	26.2	70.0	1.90	29.91
	모름/무응답	48	7.2	10.0	20.0	29.8	33.0	17.3	49.7	1.92	30.71
북핵문제 해결방법	대화와 협상	334	12.7	36.0	27.7	16.6	7.0	48.7	44.4	2.48	49.36
	강력한 제재	461	4.7	24.3	29.7	38.5	2.8	29.0	68.2	1.95	31.69
	군사적 압박	157	4.9	17.2	29.9	46.9	1.2	22.0	76.8	1.80	26.61
	모름/무응답	48	2.1	11.2	30.5	25.6	30.6	13.3	56.2	1.85	28.40
대화 가능성 공감정도	공감	627	9.4	34.1	30.3	22.6	3.7	43.5	52.8	2.31	43.83
	비공감	347	3.7	14.5	27.4	49.8	4.6	18.2	77.2	1.71	23.58
	모름/무응답	26	3.3	3.7	24.2	18.1	50.8	6.9	42.3	1.84	27.98
올림픽 남북관계 개선영향	영향 있을 것	275	12.0	37.2	26.1	19.2	5.6	49.1	45.3	2.44	48.12
	영향 없을 것	684	5.5	22.9	30.4	38.0	3.1	28.5	68.4	1.96	31.97
	모름/무응답	41	4.4	13.3	27.6	15.4	39.3	17.7	43.0	2.11	36.98

[우리나라의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 우리나라의 통일에 가장 영향력을 끼칠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기타	모름/무응답
◈전 체◈		1,000	47.5	38.7	3.6	2.0	2.4	5.8
성 별	남성	497	52.4	36.5	3.8	2.0	2.5	2.9
	여성	503	42.7	40.8	3.4	2.0	2.3	8.8
연령별	19~29세	176	31.8	55.7	5.1	2.0	1.6	3.8
	30대	174	49.8	41.1	1.1	1.3	4.5	2.2
	40대	203	55.0	35.9	2.4	2.3	2.3	2.0
	50대	201	56.7	29.5	2.7	2.3	1.4	7.4
	60대이상	246	43.5	34.5	6.1	1.9	2.1	11.9
거주지별	서울	197	41.8	43.6	4.2	0.6	2.1	7.7
	인천/경기	298	49.7	39.5	1.9	2.8	2.0	4.1
	대전/충청	106	59.0	32.8	1.7	0.9	1.4	4.2
	광주/전라	102	46.3	40.5	3.8	2.0	2.9	4.5
	대구/경북	102	40.8	38.2	4.1	4.5	4.3	8.1
	부산/울산/경남	154	47.9	34.8	6.3	1.9	3.0	6.1
	강원/제주	41	47.6	34.6	6.1	0.0	0.0	11.7
출생지별	서울	156	42.1	47.9	3.0	0.6	3.0	3.3
	인천/경기	138	49.9	36.0	2.0	3.3	2.7	6.2
	대전/충청	138	54.2	37.7	1.4	0.0	0.0	6.7
	광주/전라	188	47.0	39.7	4.1	2.1	2.1	5.0
	대구/경북	129	45.3	36.9	3.5	3.6	3.5	7.2
	부산/울산/경남	179	46.0	35.1	6.1	3.2	3.1	6.5
	강원/제주	60	49.1	37.1	4.2	0.0	1.6	8.0
	북한	6	71.7	13.1	15.2	0.0	0.0	0.0
	해외	6	48.6	34.8	0.0	0.0	0.0	16.7
학력별	중졸이하	137	38.6	31.3	6.6	2.7	0.6	20.2
	고졸	259	48.5	36.1	3.9	3.4	2.9	5.1
	대재이상	596	49.6	41.5	2.7	1.2	2.4	2.6
	모름/무응답	8	12.4	33.2	12.4	0.0	8.9	33.1
이념성향	진보	292	49.3	42.3	3.8	1.5	1.4	1.8
	중도	368	52.5	37.4	3.8	2.2	2.2	2.0
	보수	228	47.4	38.4	3.6	1.6	2.6	6.4
	모름/무응답	113	27.0	33.9	2.6	3.5	4.9	28.2
직업별	농/임/어업	36	53.2	17.6	5.0	0.0	0.0	24.3
	자영업	157	58.9	28.2	3.7	2.6	3.7	2.9
	블루칼라	152	43.0	44.0	0.0	4.0	3.8	5.1
	화이트칼라	271	51.7	39.9	3.7	0.9	1.5	2.2
	학생	76	40.2	51.8	4.1	0.0	1.3	2.6
	가사	212	45.2	36.3	3.0	1.7	2.0	11.7
	무직/기타	97	33.0	46.5	8.9	3.9	2.6	5.1
소득별	200만원 이하	189	34.1	38.7	6.8	3.6	3.0	13.8
	201~300만원	126	44.1	42.6	2.0	2.4	2.4	6.6
	301~400만원	165	56.0	34.5	4.5	0.0	3.0	1.9
	401~500만원	120	56.9	33.8	1.6	1.6	2.2	3.9
	501만원 이상	306	54.0	37.9	2.6	2.2	1.8	1.5
	모름/무응답	94	31.0	49.2	3.5	1.6	2.0	12.8
정보접촉 경로	TV/라디오	432	48.7	33.7	3.9	1.7	1.9	10.1
	신문/잡지	60	50.9	39.6	3.2	3.4	2.9	0.0
	인터넷/SNS	476	46.9	42.9	3.4	2.0	2.1	2.7
	주변사람	17	52.4	31.5	0.0	0.0	10.4	5.7
	모름/무응답	15	13.5	50.0	6.5	6.3	12.0	11.7

[우리나라의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나라]
(계속)

단위 : %		사례수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기타	모름/무응답
◈ 전 체 ◈		1,000	47.5	38.7	3.6	2.0	2.4	5.8
통일필요 정도	필요	713	50.7	37.5	3.6	2.1	1.3	4.8
	불필요	265	40.2	42.1	3.8	1.5	4.6	7.8
	모름/무응답	21	32.7	35.0	0.0	3.9	10.0	18.4
통일예상 시기	10년 이내	218	53.9	39.5	2.3	1.5	1.2	1.6
	30년 이내	268	51.6	38.9	4.4	1.6	1.2	2.4
	30년 이상	123	45.6	41.6	1.2	4.2	2.6	4.8
	불가능	264	42.7	38.4	5.0	1.4	4.3	8.3
	모름/무응답	127	39.8	34.4	3.7	2.8	2.6	16.7
통일 후 국가발전 공감정도	공감	578	51.7	37.9	2.9	2.6	1.3	3.6
	비공감	398	43.3	40.3	4.6	1.2	4.0	6.6
	모름/무응답	23	17.3	29.6	3.7	0.0	0.0	49.4
향후 남북관계 전망	좋아질 것	269	47.2	42.0	3.3	2.7	1.5	3.4
	변화없을 것	377	47.2	37.2	4.9	2.6	2.6	5.4
	나빠질 것	303	48.6	40.0	2.1	0.6	2.9	5.8
	모름/무응답	51	45.1	23.8	3.8	1.9	2.0	23.4
북한에 대한 인식	협력/지원 대상	305	55.8	35.3	2.1	1.7	1.0	4.0
	경계/적대 대상	487	44.6	43.1	3.5	1.8	2.4	4.5
	상관없는 대상	162	44.3	32.3	7.3	3.6	4.3	8.2
	모름/무응답	46	34.2	35.5	2.1	0.0	3.8	24.4
북한 개혁/개방 가능성	높다	337	50.8	41.0	4.0	1.3	0.8	2.2
	낮다	610	47.2	37.9	3.4	2.4	3.4	5.7
	모름/무응답	53	30.4	32.9	3.6	1.8	0.0	31.3
안보상황 인식	안정	167	50.9	40.0	3.1	1.2	2.4	2.3
	보통	269	48.0	38.9	3.6	2.0	1.5	5.9
	불안정	555	46.4	38.4	3.8	2.3	2.8	6.4
	모름/무응답	8	34.9	20.1	0.0	0.0	0.0	44.9
북한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공감	535	50.8	38.2	4.0	2.5	1.1	3.4
	비공감	417	45.1	40.1	3.5	1.4	3.8	6.2
	모름/무응답	48	31.5	31.3	0.0	2.0	3.5	31.7
북핵문제 해결방법	대화와 협상	334	51.5	36.8	3.5	1.7	0.5	5.9
	강력한 제재	461	49.4	38.7	3.2	2.3	2.4	4.0
	군사적 압박	157	39.9	43.5	5.3	1.2	6.3	3.8
	모름/무응답	48	26.5	35.2	2.5	4.0	2.0	29.9
대화 가능성 공감정도	공감	627	51.2	37.7	3.3	2.2	1.5	4.0
	비공감	347	42.4	41.7	4.2	1.7	4.0	6.0
	모름/무응답	26	26.0	22.0	3.5	0.0	0.0	48.5
올림픽 남북관계 개선영향	영향 있을 것	275	46.1	43.2	3.3	2.6	1.3	3.6
	영향 없을 것	684	49.3	37.6	3.5	1.9	2.9	4.8
	모름/무응답	41	27.6	25.5	7.0	0.0	0.0	39.9

[우리나라의 안보상황 인식]

우리의 안보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매우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편이다	보통이다	불안정한 편이다	매우 불안정하다	모름/무응답	안정	보통	불안정	평균 (5점)	평균 (100점)
◈ 전 체 ◈		1,000	1.3	15.4	26.9	38.1	17.4	0.9	16.7	26.9	55.5	2.45	36.18
성 별	남성	497	1.9	18.0	26.6	32.7	20.6	0.2	19.9	26.6	53.2	2.48	36.98
	여성	503	0.8	12.8	27.2	43.5	14.3	1.4	13.6	27.2	57.8	2.42	35.38
연령별	19~29세	176	1.7	16.2	33.6	41.0	7.6	0.0	17.9	33.6	48.5	2.64	40.88
	30대	174	2.5	21.7	32.5	27.5	15.8	0.0	24.2	32.5	43.3	2.68	41.94
	40대	203	1.5	20.1	30.0	29.1	18.4	0.8	21.7	30.0	47.5	2.57	39.25
	50대	201	0.4	12.8	27.3	36.6	22.5	0.4	13.2	27.3	59.1	2.32	32.94
	60대이상	246	0.8	8.6	15.5	52.3	20.7	2.2	9.4	15.5	72.9	2.15	28.68
거주지별	서울	197	1.2	17.7	29.7	34.8	16.1	0.5	18.9	29.7	50.9	2.53	38.20
	인천/경기	298	2.0	16.8	28.6	35.1	17.4	0.0	18.8	28.6	52.6	2.51	37.71
	대전/충청	106	0.9	12.6	24.5	44.2	16.8	0.9	13.5	24.5	61.0	2.36	34.00
	광주/전라	102	2.9	15.4	24.9	42.9	9.7	4.1	18.3	24.9	52.6	2.57	39.31
	대구/경북	102	0.0	9.5	25.3	42.4	22.7	0.0	9.5	25.3	65.1	2.22	30.41
	부산/울산/경남	154	0.6	15.8	26.4	33.9	22.1	1.2	16.4	26.4	56.0	2.38	34.56
	강원/제주	41	0.0	15.0	18.7	52.8	13.4	0.0	15.0	18.7	66.3	2.35	33.84
출생지별	서울	156	0.0	19.5	31.9	33.5	15.0	0.0	19.5	31.9	48.6	2.56	38.98
	인천/경기	138	0.7	10.0	37.5	34.1	17.6	0.0	10.7	37.5	51.7	2.42	35.55
	대전/충청	138	1.4	15.0	21.5	41.7	19.6	0.7	16.4	21.5	61.4	2.36	34.10
	광주/전라	188	2.2	19.6	23.9	39.5	12.1	2.7	21.7	23.9	51.6	2.59	39.79
	대구/경북	129	0.9	12.2	25.0	36.3	25.5	0.0	13.1	25.0	61.9	2.27	31.67
	부산/울산/경남	179	1.8	14.2	25.1	39.8	18.1	1.0	16.0	25.1	57.9	2.41	35.30
	강원/제주	60	1.6	17.0	21.8	45.4	14.2	0.0	18.6	21.8	59.6	2.46	36.60
	북한	6	0.0	15.2	15.7	40.8	28.3	0.0	15.2	15.7	69.1	2.18	29.45
	해외	6	15.0	0.0	36.4	31.7	16.9	0.0	15.0	36.4	48.6	2.65	41.14
학력별	중졸이하	137	2.9	9.3	17.4	48.4	18.0	4.0	12.2	17.4	66.4	2.28	31.98
	고졸	259	0.8	12.6	28.4	40.4	17.8	0.0	13.4	28.4	58.2	2.38	34.53
	대재이상	596	1.2	18.0	28.7	34.6	17.2	0.3	19.2	28.7	51.8	2.51	37.81
	모름/무응답	8	0.0	21.7	10.3	48.3	8.9	10.8	21.7	10.3	57.1	2.50	37.58
이념성향	진보	292	2.1	25.6	31.7	31.8	8.5	0.3	27.7	31.7	40.3	2.81	45.21
	중도	368	1.2	12.4	31.3	35.6	18.9	0.6	13.6	31.3	54.5	2.41	35.25
	보수	228	0.4	10.7	16.7	46.3	25.4	0.4	11.2	16.7	71.7	2.14	28.53
	모름/무응답	113	1.8	8.2	21.2	46.0	19.5	3.2	10.0	21.2	65.5	2.24	31.08
직업별	농/임/어업	36	0.0	26.0	11.3	35.8	19.3	7.6	26.0	11.3	55.1	2.48	36.88
	자영업	157	1.4	13.4	27.3	31.3	26.7	0.0	14.8	27.3	57.9	2.32	32.91
	블루칼라	152	1.9	13.7	31.9	34.5	17.0	1.0	15.6	31.9	51.5	2.49	37.13
	화이트칼라	271	2.3	20.8	33.0	30.3	13.7	0.0	23.0	33.0	43.9	2.68	41.93
	학생	76	1.3	18.6	30.4	41.3	8.3	0.0	19.9	30.4	49.6	2.63	40.82
	가사	212	0.0	12.3	18.3	52.1	15.6	1.8	12.3	18.3	67.6	2.28	31.95
	무직/기타	97	1.0	7.0	23.6	44.6	23.9	0.0	8.0	23.6	68.5	2.17	29.14
소득별	200만원 이하	189	0.5	11.6	20.2	48.6	17.2	1.9	12.0	20.2	65.8	2.28	32.02
	201~300만원	126	1.6	16.4	24.5	36.8	20.1	0.7	17.9	24.5	56.9	2.42	35.53
	301~400만원	165	0.7	18.3	30.2	36.7	14.1	0.0	19.1	30.2	50.7	2.55	38.74
	401~500만원	120	2.6	18.1	29.0	37.3	12.2	0.8	20.7	29.0	49.5	2.61	40.29
	501만원 이상	306	2.0	14.9	27.2	34.9	21.0	0.0	17.0	27.2	55.8	2.42	35.54
	모름/무응답	94	0.0	14.8	34.7	32.9	15.1	2.6	14.8	34.7	48.0	2.50	37.61
정보접촉경로	TV/라디오	432	1.2	11.7	25.5	44.6	15.3	1.7	12.9	25.5	59.9	2.38	34.44
	신문/잡지	60	1.8	9.4	14.6	48.2	26.0	0.0	11.2	14.6	74.2	2.13	28.18
	인터넷/SNS	476	1.5	20.0	30.2	31.4	16.8	0.1	21.5	30.2	48.2	2.58	39.51
	주변사람	17	0.0	15.5	11.4	27.1	46.0	0.0	15.5	11.4	73.1	1.96	24.09
	모름/무응답	15	0.0	0.0	31.7	38.3	29.9	0.0	0.0	31.7	68.3	2.02	25.45

[우리나라의 안보상황 인식]
(계속)

단위 : %		사례수	매우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편이다	보통이다	불안정한 편이다	매우 불안정하다	모름/무응답	안정	보통	불안정	평균 (5점)	평균 (100점)
◈ 전 체 ◈		1,000	1.3	15.4	26.9	38.1	17.4	0.9	16.7	26.9	55.5	2.45	36.18
통일필요 정도	필요	713	1.7	17.1	27.5	37.6	15.3	0.9	18.8	27.5	52.9	2.52	37.98
	불필요	265	0.4	11.1	25.7	39.7	23.1	0.0	11.5	25.7	62.8	2.26	31.52
	모름/무응답	21	0.0	13.6	24.9	35.2	18.1	8.2	13.6	24.9	53.3	2.37	34.26
통일예상 시기	10년 이내	218	1.8	18.8	29.6	31.9	17.5	0.4	20.6	29.6	49.4	2.55	38.85
	30년 이내	268	1.9	24.0	28.1	35.9	10.1	0.0	25.9	28.1	46.0	2.72	42.93
	30년 이상	123	0.8	16.8	34.3	38.9	9.2	0.0	17.7	34.3	48.1	2.61	40.31
	불가능	264	0.9	6.4	23.6	42.3	26.5	0.3	7.3	23.6	68.8	2.13	28.17
	모름/무응답	127	0.7	8.8	20.0	43.8	21.9	4.8	9.5	20.0	65.7	2.19	29.63
통일 후 국가발전 공감정도	공감	578	2.1	19.8	28.9	34.9	13.7	0.6	21.9	28.9	48.6	2.61	40.37
	비공감	398	0.3	9.5	25.5	42.0	22.3	0.5	9.7	25.5	64.3	2.23	30.78
	모름/무응답	23	0.0	8.2	3.7	50.4	26.2	11.5	8.2	3.7	76.6	1.93	23.29
향후 남북관계 전망	좋아질 것	269	3.8	23.1	30.5	32.1	9.5	1.0	26.8	30.5	41.6	2.79	44.83
	변화없을 것	377	0.6	16.1	33.6	37.1	12.6	0.0	16.7	33.6	49.7	2.55	38.75
	나빠질 것	303	0.3	8.7	16.5	43.9	30.3	0.3	9.0	16.5	74.2	2.05	26.13
	모름/무응답	51	0.0	9.6	21.1	42.1	18.6	8.5	9.6	21.1	60.8	2.24	30.92
북한에 대한 인식	협력/지원 대상	305	2.6	26.5	32.5	32.5	5.3	0.6	29.1	32.5	37.8	2.89	47.17
	경계/적대 대상	487	0.9	10.2	23.2	41.0	24.3	0.5	11.0	23.2	65.3	2.22	30.49
	상관없는 대상	162	0.0	11.8	32.5	36.9	18.7	0.0	11.8	32.5	55.7	2.37	34.33
	모름/무응답	46	2.3	10.4	10.0	48.7	20.5	8.1	12.8	10.0	69.2	2.19	29.71
북한 개혁/개방 가능성	높다	337	3.0	21.6	29.2	33.5	12.4	0.3	24.6	29.2	45.9	2.69	42.30
	낮다	610	0.5	12.5	25.9	40.2	20.1	0.7	13.0	25.9	60.4	2.33	33.14
	모름/무응답	53	0.0	9.8	24.3	43.1	17.8	5.1	9.8	24.3	60.9	2.27	31.85
통일에 영향력 큰 나라	미국	387	2.1	15.2	27.1	38.4	16.7	0.4	17.3	27.1	55.1	2.47	36.84
	중국	475	0.9	17.1	27.2	37.0	17.3	0.6	17.9	27.2	54.2	2.47	36.76
	일본	20	5.4	4.8	27.0	48.1	14.6	0.0	10.2	27.0	62.8	2.38	34.56
	러시아	36	0.0	14.6	27.1	45.9	12.5	0.0	14.6	27.1	58.3	2.44	35.94
	기타	24	0.0	17.4	16.8	31.3	34.6	0.0	17.4	16.8	65.9	2.17	29.23
	모름/무응답	59	0.0	6.6	27.2	39.7	20.4	6.1	6.6	27.2	60.2	2.21	30.30
북한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공감	535	2.3	23.2	33.3	33.1	8.0	0.2	25.5	33.3	41.1	2.79	44.68
	비공감	417	0.0	5.7	19.5	44.5	30.0	0.4	5.7	19.5	74.5	2.01	25.22
	모름/무응답	48	1.8	13.6	21.5	38.4	13.1	11.7	15.4	21.5	51.4	2.46	36.61
북핵문제 해결방법	대화와 협상	334	1.8	26.3	29.7	33.0	7.9	1.3	28.1	29.7	40.9	2.81	45.20
	강력한 제재	461	1.4	11.3	29.5	39.7	17.9	0.2	12.7	29.5	57.6	2.39	34.63
	군사적 압박	157	0.6	6.3	16.7	39.6	36.2	0.6	6.9	16.7	75.7	1.95	23.74
	모름/무응답	48	0.0	8.6	16.7	53.2	17.9	3.6	8.6	16.7	71.1	2.17	29.17
대화 가능성 공감정도	공감	627	2.0	20.6	32.2	35.5	9.2	0.5	22.6	32.2	44.8	2.70	42.60
	비공감	347	0.0	6.2	17.9	43.1	32.2	0.5	6.2	17.9	75.3	1.98	24.54
	모름/무응답	26	3.3	13.6	22.0	33.2	17.5	10.4	16.9	22.0	50.7	2.46	36.61
올림픽 남북관계 개선영향	영향 있을 것	275	3.3	20.9	29.5	36.7	9.0	0.5	24.2	29.5	45.7	2.73	43.16
	영향 없을 것	684	0.6	14.0	26.2	37.9	21.0	0.3	14.6	26.2	58.9	2.35	33.79
	모름/무응답	41	0.0	2.3	21.7	50.2	14.6	11.1	2.3	21.7	64.8	2.13	28.32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공감도] 북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 공조 및 안보태세 강화의 정부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매우 공감한다	대체로 공감한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모름/ 무응답	공감	비공감	평균 (4점)	평균 (100점)
◈ 전 체 ◈		1,000	12.8	40.7	29.8	12.0	4.7	53.5	41.8	2.57	52.34
성별	남성	497	13.8	39.7	28.9	14.2	3.3	53.5	43.2	2.55	51.65
	여성	503	11.8	41.6	30.6	9.8	6.2	53.4	40.3	2.59	53.05
연령별	19~29세	176	5.8	47.6	38.9	5.7	2.1	53.4	44.5	2.55	51.55
	30대	174	16.9	50.3	25.2	7.6	0.0	67.2	32.8	2.76	58.80
	40대	203	14.2	44.0	26.3	11.8	3.7	58.2	38.1	2.63	54.34
	50대	201	10.9	38.5	28.4	17.7	4.6	49.3	46.1	2.45	48.19
	60대이상	246	15.4	27.9	30.5	15.1	11.1	43.3	45.6	2.49	49.69
거주지별	서울	197	14.3	42.4	25.9	12.3	5.1	56.7	38.2	2.62	53.96
	인천/경기	298	10.1	42.2	31.6	11.6	4.6	52.2	43.2	2.53	51.03
	대전/충청	106	13.1	41.4	27.3	13.8	4.5	54.5	41.1	2.56	52.09
	광주/전라	102	20.9	47.2	18.6	6.3	6.9	68.1	25.0	2.89	62.94
	대구/경북	102	11.6	30.7	36.3	16.3	5.1	42.3	52.6	2.40	46.52
	부산/울산/경남	154	13.5	39.5	31.3	12.3	3.3	53.0	43.6	2.56	52.04
	강원/제주	41	5.3	32.4	47.0	10.5	4.9	37.6	57.5	2.34	44.70
출생지별	서울	156	10.6	42.6	35.2	8.3	3.3	53.2	43.5	2.57	52.47
	인천/경기	138	6.5	46.0	31.2	14.0	2.3	52.5	45.2	2.46	48.69
	대전/충청	138	12.0	43.6	25.0	13.7	5.7	55.6	38.7	2.57	52.41
	광주/전라	188	20.2	43.0	23.0	7.4	6.3	63.2	30.5	2.81	60.36
	대구/경북	129	11.0	35.3	31.7	16.3	5.7	46.3	48.0	2.44	47.85
	부산/울산/경남	179	16.0	36.2	31.7	12.4	3.8	52.1	44.1	2.58	52.64
	강원/제주	60	8.5	39.3	33.1	14.1	4.9	47.9	47.3	2.44	48.15
	북한	6	0.0	30.3	40.8	28.9	0.0	30.3	69.7	2.01	33.82
	해외	6	0.0	0.0	31.7	19.7	48.6	0.0	51.4	1.62	20.54
학력별	중졸이하	137	14.9	33.0	23.9	10.8	17.5	47.9	34.7	2.63	54.31
	고졸	259	10.5	36.8	35.4	15.0	2.4	47.3	50.4	2.44	47.93
	대재이상	596	13.4	44.3	28.9	10.8	2.5	57.7	39.7	2.62	53.95
	모름/무응답	8	10.3	24.4	12.4	20.8	32.1	34.7	33.2	2.36	45.22
이념성향	진보	292	17.0	56.2	21.4	3.4	2.0	73.2	24.8	2.89	62.88
	중도	368	10.4	40.0	34.4	12.0	3.2	50.5	46.4	2.51	50.17
	보수	228	11.5	27.7	35.2	22.9	2.7	39.2	58.1	2.29	42.89
	모름/무응답	113	12.3	28.7	25.4	12.3	21.4	41.0	37.6	2.52	50.74
직업별	농/임/어업	36	23.1	25.1	21.0	18.1	12.7	48.2	39.0	2.61	53.69
	자영업	157	10.1	36.8	27.2	24.2	1.6	46.9	51.4	2.33	44.46
	블루칼라	152	9.6	40.0	37.0	11.1	2.4	49.5	48.1	2.49	49.74
	화이트칼라	271	18.2	44.6	25.0	8.7	3.5	62.8	33.7	2.75	58.28
	학생	76	6.1	56.6	32.6	3.1	1.6	62.7	35.7	2.67	55.55
	가사	212	12.4	37.5	31.0	9.3	9.8	49.9	40.3	2.59	52.93
	무직/기타	97	9.7	37.1	34.3	13.1	5.8	46.8	47.4	2.46	48.68
소득별	200만원 이하	189	16.6	35.6	24.2	12.0	11.6	52.2	36.2	2.64	54.76
	201~300만원	126	10.2	37.2	35.0	12.4	5.2	47.4	47.4	2.48	49.24
	301~400만원	165	7.1	50.0	29.8	10.8	2.4	57.0	40.6	2.55	51.54
	401~500만원	120	19.3	37.3	32.6	7.6	3.1	56.6	40.2	2.70	56.83
	501만원 이상	306	11.9	43.2	26.7	15.3	2.9	55.1	42.0	2.53	51.06
	모름/무응답	94	13.6	35.1	40.2	8.3	2.9	48.7	48.4	2.56	51.88
정보접촉 경로	TV/라디오	432	11.5	37.9	33.3	9.5	7.9	49.4	42.8	2.56	51.93
	신문/잡지	60	9.9	38.5	25.5	20.8	5.4	48.4	46.3	2.40	46.52
	인터넷/SNS	476	14.1	44.6	28.3	11.4	1.6	58.7	39.7	2.62	54.13
	주변사람	17	9.6	27.1	12.8	39.0	11.6	36.7	51.7	2.08	36.10
	모름/무응답	15	25.5	19.0	12.0	36.5	7.0	44.5	48.4	2.36	45.37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공감도]
(계속)

단위 : %		사례수	매우 공감한다	대체로 공감한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모름/무응답	공감	비공감	평균 (4점)	평균 (100점)
◈ 전 체 ◈		1,000	12.8	40.7	29.8	12.0	4.7	53.5	41.8	2.57	52.34
통일필요 정도	필요	713	15.1	43.9	26.5	9.9	4.6	59.0	36.4	2.67	55.73
	불필요	265	7.5	33.2	38.3	17.1	4.0	40.7	55.3	2.32	44.16
	모름/무응답	21	3.2	24.8	32.0	17.8	22.2	28.0	49.8	2.17	39.06
통일예상 시기	10년 이내	218	18.7	44.9	23.8	9.7	2.9	63.7	33.5	2.75	58.26
	30년 이내	268	11.5	49.1	31.4	6.4	1.5	60.7	37.9	2.67	55.59
	30년 이상	123	10.6	49.3	29.7	6.7	3.6	59.9	36.5	2.66	55.40
	불가능	264	9.1	28.6	36.6	19.9	5.8	37.7	56.6	2.28	42.81
	모름/무응답	127	15.3	32.2	22.2	16.1	14.2	47.5	38.4	2.54	51.44
통일후 국가발전 공감정도	공감	578	18.2	45.8	24.0	8.6	3.4	64.0	32.6	2.76	58.72
	비공감	398	5.3	34.7	38.9	16.5	4.7	39.9	55.4	2.30	43.35
	모름/무응답	23	9.1	16.4	16.3	18.7	39.5	25.5	35.0	2.26	42.05
향후 남북관계 전망	좋아질 것	269	21.7	51.6	20.2	2.5	4.0	73.3	22.7	2.96	65.48
	변화없을 것	377	10.4	43.0	35.6	6.8	4.2	53.4	42.4	2.60	53.18
	나빠질 것	303	7.1	30.6	31.6	27.0	3.6	37.7	58.7	2.18	39.49
	모름/무응답	51	17.3	25.2	25.8	11.1	20.7	42.4	36.9	2.61	53.76
북한에 대한 인식	협력/지원 대상	305	21.7	54.6	17.2	1.9	4.6	76.3	19.1	3.01	66.90
	경계/적대 대상	487	8.1	35.8	35.4	18.1	2.5	44.0	53.5	2.35	44.96
	상관없는 대상	162	10.4	34.0	37.6	12.8	5.2	44.4	50.4	2.44	48.09
	모름/무응답	46	11.8	23.0	26.0	10.5	28.7	34.8	36.5	2.51	50.23
북한 개혁/개방 가능성	높다	337	20.9	44.1	25.5	7.0	2.4	65.1	32.5	2.81	60.33
	낮다	610	8.3	39.9	33.1	14.8	3.9	48.2	47.9	2.43	47.79
	모름/무응답	53	13.0	27.6	18.3	11.1	30.0	40.6	29.4	2.61	53.55
통일에 영향력 큰 나라	미국	387	12.3	40.5	30.4	12.9	3.9	52.9	43.3	2.54	51.47
	중국	475	13.1	44.1	29.1	10.5	3.2	57.2	39.6	2.62	53.92
	일본	20	14.2	52.2	24.6	4.2	4.8	66.4	28.8	2.80	60.11
	러시아	36	21.6	38.0	31.1	9.3	0.0	59.6	40.4	2.72	57.33
	기타	24	12.6	12.8	34.5	33.0	7.2	25.3	67.5	2.05	35.09
	모름/무응답	59	7.6	23.0	30.0	13.7	25.8	30.5	43.7	2.33	44.32
안보상황 인식	안정	167	31.4	50.0	13.6	0.6	4.4	81.4	14.2	3.17	72.46
	보통	269	11.4	54.6	27.7	2.5	3.8	66.0	30.2	2.78	59.29
	불안정	555	8.1	31.5	36.0	20.0	4.4	39.6	56.0	2.29	42.97
	모름/무응답	8	0.0	11.0	7.6	11.0	70.4	11.0	18.6	2.00	33.33
북핵문제 해결방법	대화와 협상	334	23.4	50.4	17.8	3.4	5.0	73.8	21.2	2.99	66.25
	강력한 제재	461	7.9	41.6	34.8	11.8	3.9	49.5	46.6	2.47	49.17
	군사적 압박	157	6.9	22.1	39.0	30.8	1.3	28.9	69.8	2.05	35.04
	모름/무응답	48	5.9	24.5	34.0	12.5	23.1	30.4	46.5	2.31	43.65
대화 가능성 공감정도	공감	627	17.5	52.2	23.0	4.1	3.2	69.7	27.1	2.86	61.93
	비공감	347	4.5	22.1	43.0	26.6	3.8	26.6	69.6	2.05	34.88
	모름/무응답	26	11.9	10.5	16.2	7.0	54.4	22.4	23.2	2.60	53.29
올림픽 남북관계 개선영향	영향 있을 것	275	18.5	51.8	21.5	4.5	3.6	70.4	26.0	2.88	62.55
	영향 없을 것	684	10.4	36.5	34.0	15.3	3.8	46.9	49.3	2.44	47.86
	모름/무응답	41	15.1	34.3	15.0	6.4	29.3	49.4	21.3	2.82	60.73

[북핵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법] 북한의 핵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국제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 외교적 해법	군사적 수단을 통한 압박	모름/무응답
◈ 전 체 ◈		1,000	46.1	33.4	15.7	4.8
성 별	남성	497	44.4	32.9	20.0	2.7
	여성	503	47.8	33.9	11.4	6.9
연령별	19~29세	176	56.4	26.5	15.7	1.5
	30대	174	45.1	36.1	14.6	4.1
	40대	203	46.5	38.7	13.2	1.7
	50대	201	44.8	35.1	17.3	2.9
	60대이상	246	40.2	30.6	17.2	12.0
거주지별	서울	197	49.1	31.6	15.1	4.1
	인천/경기	298	46.8	32.7	16.0	4.5
	대전/충청	106	45.8	33.8	15.9	4.4
	광주/전라	102	36.8	44.3	11.8	7.1
	대구/경북	102	52.3	24.8	19.2	3.8
	부산/울산/경남	154	43.1	35.5	15.4	6.0
	강원/제주	41	46.5	31.6	17.8	4.1
출생지별	서울	156	53.7	30.3	12.7	3.2
	인천/경기	138	52.0	27.5	19.2	1.3
	대전/충청	138	41.8	38.1	15.9	4.1
	광주/전라	188	38.9	40.6	13.4	7.1
	대구/경북	129	49.7	27.9	16.5	5.9
	부산/울산/경남	179	42.6	35.7	16.6	5.1
	강원/제주	60	45.7	31.2	18.7	4.4
	북한	6	69.7	0.0	15.2	15.2
	해외	6	48.3	15.0	0.0	36.6
학력별	중졸이하	137	34.1	37.6	14.6	13.7
	고졸	259	45.7	30.3	19.3	4.6
	대재이상	596	49.4	33.9	14.3	2.5
	모름/무응답	8	19.6	23.2	21.3	35.9
이념성향	진보	292	38.6	48.6	11.7	1.0
	중도	368	53.2	27.8	15.8	3.2
	보수	228	50.7	23.3	21.9	4.1
	모름/무응답	113	33.1	32.5	12.8	21.6
직업별	농/임/어업	36	35.8	31.4	18.1	14.7
	자영업	157	45.8	31.4	21.7	1.1
	블루칼라	152	47.9	28.7	20.4	3.0
	화이트칼라	271	47.7	37.8	11.8	2.7
	학생	76	50.8	35.4	13.9	0.0
	가사	212	44.4	34.1	9.0	12.5
	무직/기타	97	43.2	29.2	24.6	3.0
소득별	200만원 이하	189	34.6	32.9	20.6	11.9
	201~300만원	126	48.6	30.1	14.1	7.2
	301~400만원	165	50.1	31.4	17.1	1.4
	401~500만원	120	44.0	40.7	13.6	1.7
	501만원 이상	306	51.0	31.7	14.4	2.9
	모름/무응답	94	45.5	38.3	12.2	4.0
정보접촉 경로	TV/라디오	432	44.1	34.3	14.7	7.0
	신문/잡지	60	59.9	18.3	20.2	1.6
	인터넷/SNS	476	46.6	34.9	15.1	3.4
	주변사람	17	43.8	22.4	28.0	5.9
	모름/무응답	15	38.1	31.5	30.4	0.0

[북핵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법]
(계속)

단위 : %		사례수	국제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 외교적 해법	군사적 수단을 통한 압박	모름/무응답
◈ 전 체 ◈		1,000	46.1	33.4	15.7	4.8
통일필요 정도	필요	713	42.6	39.8	13.3	4.3
	불필요	265	56.5	16.8	21.4	5.3
	모름/무응답	21	34.0	26.7	23.4	15.9
통일예상 시기	10년 이내	218	41.4	42.2	14.0	2.4
	30년 이내	268	51.3	36.7	10.5	1.4
	30년 이상	123	49.9	32.7	14.9	2.5
	불가능	264	48.5	21.4	23.3	6.9
	모름/무응답	127	34.7	36.9	14.3	14.2
통일 후 국가발전 공감정도	공감	578	42.8	41.6	11.8	3.7
	비공감	398	52.0	21.0	21.9	5.1
	모름/무응답	23	27.0	42.0	3.7	27.3
향후 남북관계 전망	좋아질 것	269	35.2	55.6	6.3	3.0
	변화없을 것	377	52.7	29.1	13.8	4.4
	나빠질 것	303	51.8	17.0	26.1	5.1
	모름/무응답	51	21.0	45.6	17.0	16.3
북한에 대한 인식	협력/지원 대상	305	35.0	58.5	3.7	2.8
	경계/적대 대상	487	56.0	20.4	20.6	3.0
	상관없는 대상	162	39.8	26.9	25.5	7.8
	모름/무응답	46	37.8	26.9	8.3	27.1
북한 개혁/개방 가능성	높다	337	39.7	48.2	10.2	1.9
	낮다	610	51.6	24.3	19.7	4.5
	모름/무응답	53	24.4	44.0	3.6	28.0
통일에 영향력 큰 나라	미국	387	46.2	31.8	17.6	4.4
	중국	475	47.9	36.2	13.2	2.7
	일본	20	52.8	28.4	9.2	9.6
	러시아	36	40.7	32.9	23.1	3.3
	기타	24	46.6	7.6	41.7	4.0
	모름/무응답	59	31.6	33.6	10.2	24.5
안보상황 인식	안정	167	35.0	56.0	6.5	2.5
	보통	269	50.4	36.8	9.7	3.0
	불안정	555	47.9	24.6	21.4	6.2
	모름/무응답	8	11.3	54.3	12.6	21.8
북한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공감	535	42.7	46.1	8.5	2.8
	비공감	417	51.5	17.0	26.2	5.4
	모름/무응답	48	37.6	34.9	4.2	23.3
대화 가능성 공감정도	공감	627	42.3	47.8	6.9	3.1
	비공감	347	54.3	8.2	31.8	5.6
	모름/무응답	26	29.3	22.6	10.8	37.4
올림픽 남북관계 개선영향	영향 있을 것	275	34.2	53.1	7.9	4.8
	영향 없을 것	684	52.2	24.9	19.3	3.6
	모름/무응답	41	25.0	42.2	7.0	25.8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에 대한 공감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매우 공감한다	대체로 공감한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모름/무응답	공감	비공감	평균 (4점)	평균 (100점)
◈ 전 체 ◈		1,000	25.4	37.3	23.1	11.6	2.6	62.7	34.7	2.79	59.52
성별	남성	497	27.6	33.1	23.9	14.1	1.4	60.7	38.0	2.75	58.39
	여성	503	23.2	41.5	22.4	9.1	3.9	64.7	31.4	2.82	60.67
연령별	19~29세	176	14.3	47.0	29.0	8.9	0.8	61.4	37.9	2.67	55.78
	30대	174	30.6	43.3	17.5	8.7	0.0	73.8	26.2	2.96	65.24
	40대	203	31.5	39.0	18.0	10.6	0.8	70.5	28.7	2.92	64.07
	50대	201	29.5	28.2	22.1	17.9	2.3	57.7	40.0	2.71	56.98
	60대이상	246	21.2	32.1	28.0	11.1	7.6	53.3	39.1	2.69	56.19
거주지별	서울	197	26.0	40.3	22.1	9.2	2.4	66.3	31.3	2.85	61.74
	인천/경기	298	22.3	40.6	21.2	13.6	2.3	62.9	34.8	2.73	57.76
	대전/충청	106	29.4	34.5	23.4	9.0	3.7	64.0	32.4	2.88	62.56
	광주/전라	102	36.2	38.4	15.2	7.7	2.6	74.6	22.9	3.06	68.58
	대구/경북	102	18.7	38.6	25.4	15.6	1.7	57.3	41.0	2.61	53.80
	부산/울산/경남	154	25.4	28.1	29.5	13.6	3.3	53.6	43.1	2.68	55.88
	강원/제주	41	23.9	34.6	31.5	6.8	3.3	58.5	38.3	2.78	59.36
출생지별	서울	156	24.7	41.7	24.4	8.5	0.6	66.4	33.0	2.83	61.04
	인천/경기	138	16.7	43.2	23.5	14.4	2.3	59.8	37.9	2.64	54.51
	대전/충청	138	27.2	34.7	23.3	9.2	5.6	62.0	32.4	2.85	61.57
	광주/전라	188	33.7	37.1	18.5	8.7	1.9	70.8	27.3	2.98	65.89
	대구/경북	129	21.2	34.6	25.9	16.2	2.1	55.8	42.1	2.62	54.02
	부산/울산/경남	179	23.4	36.1	24.0	13.7	2.9	59.5	37.6	2.71	57.08
	강원/제주	60	31.0	30.6	24.8	11.3	2.2	61.6	36.1	2.83	61.05
	북한	6	41.4	45.5	13.1	0.0	0.0	86.9	13.1	3.28	76.09
	해외	6	16.9	0.0	31.7	19.7	31.7	16.9	51.4	2.21	40.21
학력별	중졸이하	137	23.0	33.7	24.1	7.4	11.7	56.7	31.5	2.82	60.65
	고졸	259	24.1	32.9	26.8	14.5	1.7	57.0	41.3	2.68	55.88
	대재이상	596	26.7	40.4	21.5	10.9	0.5	67.0	32.4	2.83	61.08
	모름/무응답	8	12.4	12.0	9.3	33.2	33.1	24.4	42.5	2.05	35.10
이념성향	진보	292	37.5	45.2	13.7	3.2	0.3	82.7	16.9	3.17	72.46
	중도	368	23.0	38.5	27.1	10.6	0.8	61.6	37.6	2.75	58.20
	보수	228	18.1	30.0	27.9	22.7	1.3	48.1	50.6	2.44	48.06
	모름/무응답	113	16.3	27.4	25.0	13.8	17.4	43.7	38.9	2.56	51.95
직업별	농/임/어업	36	34.0	22.7	15.2	10.4	17.6	56.7	25.7	2.97	65.82
	자영업	157	26.4	30.2	22.6	19.8	1.1	56.5	42.4	2.64	54.59
	블루칼라	152	22.2	36.9	27.7	12.6	0.6	59.1	40.3	2.69	56.35
	화이트칼라	271	30.9	40.3	17.9	10.1	0.8	71.2	28.0	2.93	64.22
	학생	76	18.0	46.5	25.8	9.7	0.0	64.5	35.5	2.73	57.61
	가사	212	21.9	39.3	24.1	8.0	6.8	61.2	32.0	2.81	60.20
	무직/기타	97	23.5	35.1	30.1	10.3	1.0	58.6	40.4	2.73	57.51
소득별	200만원 이하	189	22.3	36.4	22.3	9.2	9.8	58.7	31.5	2.79	59.83
	201~300만원	126	24.9	33.5	28.3	12.6	0.7	58.4	40.9	2.71	57.05
	301~400만원	165	28.5	36.2	27.0	7.4	0.8	64.7	34.5	2.87	62.17
	401~500만원	120	27.3	42.9	16.5	12.4	0.8	70.3	28.9	2.86	61.99
	501만원 이상	306	27.2	38.3	19.0	15.5	0.0	65.4	34.6	2.77	59.03
	모름/무응답	94	18.6	35.5	32.6	8.3	5.0	54.1	40.9	2.68	55.92
정보접촉 경로	TV/라디오	432	24.6	37.4	25.0	8.7	4.3	62.0	33.7	2.81	60.47
	신문/잡지	60	19.6	21.1	36.0	17.9	5.4	40.7	53.9	2.45	48.27
	인터넷/SNS	476	27.5	39.5	20.8	12.0	0.2	67.0	32.8	2.83	60.91
	주변사람	17	5.7	34.4	11.1	33.3	15.5	40.1	44.4	2.15	38.27
	모름/무응답	15	25.5	32.6	6.3	30.2	5.4	58.1	36.5	2.56	52.16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에 대한 공감도]
(계속)

단위 : %		사례수	매우 공감한다	대체로 공감한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모름/ 무응답	공감	비공감	평균 (4점)	평균 (100점)
◈ 전 체 ◈		1,000	25.4	37.3	23.1	11.6	2.6	62.7	34.7	2.79	59.52
통일필요 정도	필요	713	31.4	37.9	20.0	8.0	2.6	69.3	28.1	2.95	65.05
	불필요	265	11.2	35.8	30.8	20.5	1.7	47.0	51.3	2.38	46.12
	모름/무응답	21	0.0	36.1	31.6	17.8	14.5	36.1	49.4	2.21	40.50
통일예상 시기	10년 이내	218	34.9	40.0	15.5	8.8	0.8	74.9	24.3	3.02	67.29
	30년 이내	268	29.4	43.2	21.8	5.3	0.3	72.6	27.1	2.97	65.65
	30년 이상	123	25.5	41.9	22.6	8.9	1.1	67.4	31.5	2.85	61.66
	불가능	264	15.7	30.2	30.6	20.6	2.9	45.9	51.2	2.42	47.38
	모름/무응답	127	20.6	30.5	24.2	13.2	11.5	51.2	37.4	2.66	55.39
통일후 국가발전 공감정도	공감	578	34.6	37.7	18.0	7.9	1.9	72.2	25.9	3.01	66.94
	비공감	398	12.6	37.7	31.0	16.9	1.8	50.3	47.9	2.47	48.92
	모름/무응답	23	16.7	20.6	16.5	11.0	35.2	37.3	27.5	2.66	55.46
향후 남북관계 전망	좋아질 것	269	43.6	40.3	11.8	2.4	1.9	83.9	14.2	3.28	75.88
	변화없을 것	377	22.2	42.1	27.1	7.1	1.5	64.3	34.2	2.81	60.20
	나빠질 것	303	13.0	30.3	28.7	26.0	2.1	43.3	54.6	2.31	43.68
	모름/무응답	51	26.1	27.1	20.8	7.6	18.4	53.2	28.4	2.88	62.65
북한에 대한 인식	협력/지원 대상	305	47.6	40.1	8.3	1.2	2.8	87.7	9.4	3.38	79.35
	경계/적대 대상	487	15.4	36.1	30.0	17.8	0.8	51.5	47.8	2.49	49.81
	상관없는 대상	162	15.1	38.6	30.6	14.1	1.8	53.6	44.6	2.56	51.86
	모름/무응답	46	20.3	26.9	23.1	5.4	24.3	47.3	28.4	2.82	60.74
북한 개혁/개방 가능성	높다	337	41.4	39.4	14.4	4.3	0.5	80.8	18.7	3.18	72.82
	낮다	610	17.1	37.1	28.1	15.8	1.8	54.3	43.9	2.57	52.20
	모름/무응답	53	18.7	25.7	21.4	8.8	25.4	44.4	30.2	2.73	57.57
통일에 영향력 큰 나라	미국	387	25.7	35.4	25.6	11.8	1.5	61.1	37.4	2.76	58.71
	중국	475	27.8	39.8	21.7	9.3	1.4	67.6	31.0	2.87	62.47
	일본	20	30.8	39.3	16.5	13.4	0.0	70.1	29.9	2.88	62.52
	러시아	36	21.0	36.0	27.9	12.6	2.5	57.0	40.4	2.67	55.73
	기타	24	7.6	33.3	16.7	42.4	0.0	40.9	59.1	2.06	35.38
	모름/무응답	59	11.7	31.4	20.0	15.2	21.7	43.0	35.2	2.50	50.15
안보상황 인식	안정	167	51.8	32.6	8.9	4.0	2.7	84.4	12.9	3.36	78.62
	보통	269	26.5	48.3	19.3	3.7	2.2	74.8	23.1	3.00	66.56
	불안정	555	17.2	33.3	29.3	17.8	2.4	50.5	47.1	2.51	50.39
	모름/무응답	8	0.0	42.5	23.1	0.0	34.4	42.5	23.1	2.65	54.91
북한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공감	535	37.7	43.9	13.6	3.7	1.1	81.7	17.2	3.17	72.33
	비공감	417	11.1	29.6	35.2	22.6	1.5	40.7	57.8	2.30	43.22
	모름/무응답	48	11.9	30.5	24.3	3.4	29.9	42.4	27.7	2.73	57.54
북핵문제 해결방법	대화와 협상	334	50.1	39.5	7.8	0.8	1.8	89.7	8.6	3.42	80.52
	강력한 제재	461	15.4	42.1	28.3	12.6	1.7	57.5	40.9	2.61	53.76
	군사적 압박	157	6.2	21.5	38.4	32.1	1.8	27.7	70.5	2.02	33.94
	모름/무응답	48	12.0	27.5	30.3	9.8	20.3	39.5	40.1	2.52	50.78
올림픽 남북관계 개선영향	영향 있을 것	275	40.3	42.4	12.6	3.5	1.2	82.7	16.1	3.21	73.62
	영향 없을 것	684	19.6	36.0	27.0	15.4	1.9	55.6	42.4	2.61	53.70
	모름/무응답	41	21.1	24.2	28.5	2.1	24.1	45.4	30.6	2.85	61.59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매우 영향 있을 것	어느정도 영향 있을 것	별로 영향 없을 것	전혀 영향 없을 것	모름/ 무응답	영향 있을 것	영향 없을 것	평균 (4점)	평균 (100점)
◈ 전 체 ◈		1,000	3.6	24.0	46.1	22.2	4.1	27.6	68.3	2.09	36.41
성별	남성	497	4.1	22.9	44.1	26.9	2.0	27.0	71.0	2.04	34.76
	여성	503	3.0	25.1	48.1	17.6	6.2	28.1	65.7	2.14	38.12
연령별	19~29세	176	4.2	23.7	45.5	26.1	0.6	27.9	71.5	2.06	35.37
	30대	174	0.9	23.3	51.8	23.5	0.6	24.2	75.3	2.02	33.86
	40대	203	3.7	20.7	50.8	23.2	1.5	24.4	74.0	2.05	35.01
	50대	201	5.5	27.6	41.6	22.0	3.2	33.1	63.7	2.17	39.06
	60대이상	246	3.3	24.3	42.4	18.0	12.0	27.6	60.4	2.15	38.22
거주지별	서울	197	2.1	22.3	54.5	18.7	2.4	24.4	73.2	2.08	35.98
	인천/경기	298	3.0	24.7	42.6	27.1	2.5	27.8	69.8	2.04	34.58
	대전/충청	106	3.5	27.2	37.3	27.0	5.0	30.7	64.3	2.08	35.85
	광주/전라	102	8.9	23.0	48.2	13.1	6.8	31.9	61.3	2.30	43.26
	대구/경북	102	1.7	25.3	44.5	23.6	5.1	26.9	68.0	2.05	35.10
	부산/울산/경남	154	3.9	23.7	48.5	18.1	5.8	27.6	66.6	2.14	38.03
	강원/제주	41	5.3	18.2	44.1	26.3	6.0	23.5	70.5	2.03	34.20
출생지별	서울	156	1.4	22.6	51.5	24.5	0.0	24.0	76.0	2.01	33.62
	인천/경기	138	2.7	23.8	42.1	28.0	3.3	26.5	70.2	2.01	33.74
	대전/충청	138	4.1	22.9	45.0	22.1	5.9	27.0	67.1	2.09	36.49
	광주/전라	188	5.9	26.5	49.2	12.8	5.5	32.4	62.0	2.27	42.36
	대구/경북	129	3.0	22.3	46.6	23.9	4.1	25.3	70.6	2.05	34.85
	부산/울산/경남	179	3.4	24.5	46.0	21.4	4.6	28.0	67.4	2.10	36.82
	강원/제주	60	5.1	21.2	36.5	33.1	4.1	26.3	69.6	1.98	32.71
	북한	6	0.0	40.8	43.4	15.7	0.0	40.8	59.2	2.25	41.69
	해외	6	0.0	36.4	15.0	15.0	33.6	36.4	30.1	2.32	44.05
학력별	중졸이하	137	5.8	23.3	33.8	16.3	20.8	29.1	50.1	2.24	41.18
	고졸	259	3.7	22.7	49.8	21.6	2.1	26.4	71.4	2.09	36.25
	대재이상	596	3.0	24.7	47.2	24.1	1.0	27.7	71.3	2.07	35.58
	모름/무응답	8	0.0	23.9	56.4	8.9	10.8	23.9	65.2	2.17	38.96
이념성향	진보	292	6.9	29.7	48.4	14.1	0.8	36.6	62.5	2.30	43.22
	중도	368	2.0	23.9	45.9	25.2	3.1	25.9	71.0	2.03	34.25
	보수	228	2.4	20.8	44.5	30.7	1.6	23.2	75.2	1.95	31.63
	모름/무응답	113	2.3	15.8	44.5	16.5	20.8	18.2	61.0	2.05	35.00
직업별	농/임/어업	36	5.2	19.9	44.9	12.9	17.2	25.0	57.8	2.21	40.31
	자영업	157	2.3	22.4	43.9	30.0	1.4	24.7	73.9	1.97	32.31
	블루칼라	152	3.9	28.8	43.4	22.6	1.2	32.7	66.0	2.14	38.05
	화이트칼라	271	4.2	22.1	49.0	24.0	0.7	26.3	73.0	2.07	35.50
	학생	76	3.1	20.7	51.2	24.9	0.0	23.9	76.1	2.02	34.01
	가사	212	3.7	26.1	44.5	15.0	10.6	29.8	59.5	2.21	40.25
	무직/기타	97	2.9	23.5	45.9	21.3	6.4	26.3	67.2	2.08	36.14
소득별	200만원 이하	189	6.6	24.5	40.0	15.9	13.1	31.0	55.9	2.25	41.66
	201~300만원	126	6.3	25.1	50.7	17.1	0.8	31.4	67.8	2.21	40.26
	301~400만원	165	1.2	26.5	49.3	21.3	1.7	27.7	70.6	2.08	35.89
	401~500만원	120	2.1	26.8	48.9	21.4	0.8	28.9	70.3	2.10	36.54
	501만원 이상	306	2.9	19.9	46.9	29.3	1.0	22.7	76.2	1.96	32.08
	모름/무응답	94	2.3	26.8	40.5	21.5	8.9	29.1	62.0	2.11	36.94
정보접촉 경로	TV/라디오	432	3.9	25.4	45.7	17.1	7.9	29.2	62.9	2.17	39.12
	신문/잡지	60	3.2	19.2	54.9	22.7	0.0	22.4	77.6	2.03	34.31
	인터넷/SNS	476	3.4	23.1	46.4	26.2	0.9	26.5	72.6	2.04	34.62
	주변사람	17	3.9	27.6	18.7	39.2	10.6	31.5	57.8	1.96	31.96
	모름/무응답	15	0.0	25.8	44.3	23.7	6.3	25.8	67.9	2.02	34.11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계속)

단위 : %		사례수	매우 영향 있을 것	어느정도 영향 있을 것	별로 영향 없을 것	전혀 영향 없을 것	모름/ 무응답	영향 있을 것	영향 없을 것	평균 (4점)	평균 (100점)
◈ 전 체 ◈		1,000	3.6	24.0	46.1	22.2	4.1	27.6	68.3	2.09	36.41
통일필요 정도	필요	713	4.4	26.9	45.4	18.7	4.6	31.3	64.1	2.18	39.28
	불필요	265	1.4	16.5	48.6	31.3	2.3	17.9	79.9	1.88	29.23
	모름/무응답	21	3.2	18.2	38.4	28.9	11.3	21.4	67.3	1.95	31.68
통일예상 시기	10년 이내	218	4.1	32.0	49.9	12.8	1.2	36.1	62.7	2.28	42.56
	30년 이내	268	4.3	27.7	49.4	17.0	1.6	32.0	66.4	2.20	39.86
	30년 이상	123	0.8	18.4	53.2	27.7	0.0	19.2	80.8	1.92	30.78
	불가능	264	1.9	15.7	43.0	36.3	3.2	17.5	79.2	1.83	27.52
	모름/무응답	127	7.4	25.0	32.6	15.1	20.0	32.4	47.6	2.31	43.62
통일후 국가발전 공감정도	공감	578	5.2	28.9	45.5	16.4	4.0	34.2	61.8	2.24	41.31
	비공감	398	1.4	17.5	48.8	30.1	2.1	18.9	79.0	1.90	29.98
	모름/무응답	23	0.0	11.2	16.3	32.9	39.5	11.2	49.2	1.64	21.37
향후 남북관계 전망	좋아질 것	269	8.9	39.7	37.1	9.7	4.6	48.6	46.8	2.50	50.01
	변화없을 것	377	1.7	20.0	53.8	22.9	1.6	21.7	76.8	2.00	33.46
	나빠질 것	303	1.8	14.6	46.7	33.9	3.0	16.5	80.6	1.84	27.98
	모름/무응답	51	0.0	25.7	33.4	13.9	27.0	25.7	47.3	2.16	38.69
북한에 대한 인식	협력/지원 대상	305	5.8	33.4	46.5	10.8	3.5	39.2	57.3	2.35	45.11
	경계/적대 대상	487	2.4	19.8	46.8	28.1	3.1	22.1	74.8	1.96	32.10
	상관없는 대상	162	1.9	19.3	47.1	27.8	3.9	21.2	74.9	1.95	31.68
	모름/무응답	46	7.9	22.5	33.2	16.7	19.6	30.4	49.9	2.27	42.30
북한 개혁/개방 가능성	높다	337	6.9	33.2	45.1	12.6	2.2	40.1	57.7	2.35	45.07
	낮다	610	2.0	18.4	48.6	28.1	2.9	20.4	76.7	1.94	31.41
	모름/무응답	53	0.0	29.1	23.7	16.6	30.6	29.1	40.3	2.18	39.34
통일에 영향력 큰 나라	미국	387	4.3	26.5	46.3	20.2	2.7	30.8	66.5	2.15	38.41
	중국	475	2.8	23.9	47.7	23.2	2.4	26.7	70.9	2.06	35.48
	일본	20	10.0	26.0	50.7	13.4	0.0	36.0	64.0	2.33	44.21
	러시아	36	5.1	19.8	52.6	14.6	8.0	24.9	67.2	2.17	38.91
	기타	24	4.3	11.3	29.2	55.2	0.0	15.6	84.4	1.65	21.53
	모름/무응답	59	1.6	15.0	33.5	22.1	27.8	16.6	55.6	1.95	31.55
안보상황 인식	안정	167	9.6	30.2	47.1	12.6	0.6	39.8	59.6	2.37	45.68
	보통	269	1.1	29.1	49.9	16.6	3.3	30.2	66.5	2.15	38.40
	불안정	555	2.8	19.8	44.3	28.2	4.8	22.7	72.5	1.97	32.39
	모름/무응답	8	11.3	7.6	23.6	0.0	57.5	18.9	23.6	2.71	57.04
북한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공감	535	4.9	31.4	46.1	13.9	3.8	36.2	60.0	2.28	42.78
	비공감	417	1.9	15.3	46.5	34.2	2.1	17.1	80.8	1.84	28.15
	모름/무응답	48	3.8	17.1	42.5	11.4	25.1	20.9	54.0	2.18	39.27
북핵문제 해결방법	대화와 협상	334	7.0	36.8	42.9	8.1	5.2	43.8	51.0	2.45	48.32
	강력한 제재	461	1.4	19.0	49.3	28.1	2.2	20.4	77.4	1.94	31.20
	군사적 압박	157	3.1	10.8	48.6	35.7	1.8	13.9	84.3	1.81	27.00
	모름/무응답	48	1.9	25.4	30.6	20.1	21.9	27.4	50.8	2.12	37.24
대화 가능성 공감정도	공감	627	5.4	30.9	47.0	13.7	3.0	36.3	60.7	2.29	42.99
	비공감	347	0.3	12.5	45.0	38.6	3.6	12.8	83.6	1.73	24.50
	모름/무응답	26	2.5	9.5	39.8	10.6	37.5	12.0	50.5	2.06	35.43

국민 통일여론조사 설문지

Q&A

접근문	2017년 통일문제 여론조사 3분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7. 09.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입니다. 금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문항이 몇 개 안되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OC. 거주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세종)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BIP. 출생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북한 ⑱ 해외

SEX. 성별 (목소리로 판단할 것!) ① 남자 ② 여자

AGE. 선생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19세 미만 조사중단)

① 19~29세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Q1. 선생님께서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⑤ 모름/무응답

Q2. 선생님께서는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5년 이내
② 10년 이내
③ 20년 이내
④ 30년 이내
⑤ 30년 이상
⑥ 불가능하다
⑦ 모름/무응답

Q3.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고, 잘살게 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① 매우 공감한다
② 대체로 공감한다
③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④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⑤ 모름/무응답

Q4. 선생님께서는 향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① 매우 좋아질 것이다
② 다소 좋아질 것이다
③ 변화 없을 것이다
④ 다소 나빠질 것이다
⑤ 매우 나빠질 것이다
⑥ 모름/무응답

Q5. 선생님께서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협력 내지 지원 대상이다
② 경계 내지 적대 대상이다
③ 별로 상관없는 대상이다
④ 모름/무응답

Q6. 선생님께서는 향후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다
② 약간 높다
③ 약간 낮다
④ 매우 낮다
⑤ 모름/무응답

Q7. 선생님께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 우리나라의 통일에 가장 영향력을 끼칠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미국
② 중국
③ 일본
④ 러시아
⑤ 기타 ( )
⑥ 모름/무응답

Q8.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안보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정적이다
② 안정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안정한 편이다
⑤ 매우 불안정하다
⑥ 모름/무응답

Q9. 6차 북핵실험에 대해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공감한다
② 대체로 공감한다
③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④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⑤ 모름/무응답

Q10. 선생님께서는 북한의 핵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 외교적 해법
② 국제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
③ 군사적 수단을 통한 압박
④ 모름/무응답

Q11. 선생님께서는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공감한다
② 대체로 공감한다
③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④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⑤ 모름/무응답

Q12. 선생님께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① 매우 영향이 있을 것이다
②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③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④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⑤ 모름/무응답

- 이제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

EDU. 실례지만 학교는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재이상
④ (☞불러주지 말 것!)모름/무응답

IDE. 선생님의 이념적 성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진보적이다 ② 다소 진보적이다 ③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다
④ 다소 보수적이다 ⑤ 매우 보수적이다 ⑥ (☞불러주지 말 것!)모름/무응답

JOB.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농/임/어업 종사자 (가족 종사자 포함)
② 자영업자 (소규모 장사 및 가족종사자, 개인택시운전사 등)
③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정부/기업 고위 임원, 일반관리자 등)
④ 전문가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작가, 예술가 등)
⑤ 기술공 및 준전문가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 경찰, 소방수, 철도기관사, 운동선수, 연예인, 종교인 등)
⑥ 사무종사자 (일반사무 종사자, 공무원, 교사 등)
⑦ 서비스종사자 (이미용사, 보안서비스 종사자, 음식서비스 종사자등)
⑧ 판매종사자 (상점점원, 보험설계사, 나레이터 모델 및 홍보종사자 등)
⑨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광부, 전기/전자장비 설비 및 정비 종사자, 수공예 종사자 등)
⑩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건설 및 기타 이동장치 운전종사자, 자동차 운전 종사자 등)
⑪ 단순노무종사자 (배달, 운반, 세탁, 기사, 청소원, 경비원 등)
⑫ 학생 ⑬ 가사 ⑭ 직업군인
⑮ (☞불러주지 말 것!)무직 ⑯ (☞불러주지 말 것!)기타 ⑰ (☞불러주지 말 것!)모름/무응답

MED. 선생님께서는 요즘 돌아가는 소식을 다음 중 무엇을 통해 가장 많이 접하게 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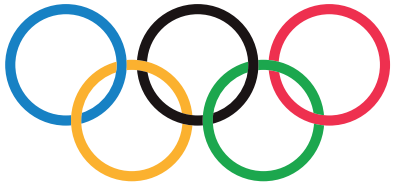
① TV ② 라디오 ③ 신문
④ 잡지 ⑤ 인터넷 포털, 블로그 ⑥ SNS/트위터
⑦ 주변사람(가족, 친구 등) ⑧ 기타 ⑨ (☞불러주지 말 것!)모름/무응답

INC. 선생님 댁 가족 전체의 보너스를 포함한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이하 ② 101~150만원 ③ 151~200만원
④ 201~250만원 ⑤ 251~300만원 ⑥ 301~400만원
⑦ 401~500만원 ⑧ 501~600만원 ⑨ 601만원 이상
⑩ (☞불러주지 말 것!)모름/무응답

Passion.Connected.
하나된 열정

PyeongChang 201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도시 | 평창, 정선, 강릉

2018년 2월 그 순간,
당신은 누구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2.9–2.25

Venues | PyeongChang, Jeongseon, Gangneung

Get your tickets and share the passion
www.PyeongChang2018.com

발 간 위 원

박 종 철 위원장,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용 현 동국대 교수
김 일 한 박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박 재 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조교수
박 주 화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수 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 은 미 숭실대 초빙교수

2017 통일여론 (3/4분기)

발 행 인 : 황 인 성
발 행 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여론분석과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4
전화번호 : 02-2250-2291~5
팩 스 : 02-2236-2763

발 행 일 : 2017년 10월

디자인 · 인쇄 : 삼진기획(02-2277-1700)